
중기사업계획('21 ~ '25)

2021. 1.

법 제 처

목 차

I. 그동안의 재정운용분석	1
1. 최근 5년간 재정운용 추이 및 특징	1
2. 재정운용에 대한 성과평가	2
II. 향후 재정투자계획	12
1. 정책여건 현황 및 변동사항	12
2. 정책방향	18
3. 재정운용방향	19
4. 성과목표(지표)	28
III. 재정혁신 추진계획	28
IV. 중기 지출계획	29
1. 지출계획 총괄표	29
2. 지출변동 내역	30
3. 의무·재량지출 규모 및 관리계획	33
4. 국정과제 추진계획	33
V. 프로그램별 설명서	34

I. 그동안의 재정운용분석

1. 최근 5년간 재정운용 추이 및 특징

- 법제처는 세입예산, 특별회계 및 기금은 없고, 세출예산으로만 구성되며, 세출예산은 정부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의 약 0.01% 수준임.

- 분야, 부문별로는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으로 구성
- 전체 예산의 약 64%가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고, 약 36%가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음.

- 법제처의 최근 5년간 재정규모 증가율은 연평균 6.5%로서 정부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의 연평균 증가율인 8.5%보다 낮은 편임

※ 재정규모 증가 요인

- 법제처는 법령심사지원,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 법제업무정보화추진 등 기존 사업을 확대·강화하고, 행정기본법제 개선 등 중점 추진분야에 대한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과정에서 재정규모가 증가해왔음.
- 최근 5년간 주요 사업비 투자규모 추이(백만원)

• 법령정보제공 사업	:	(‘16)	1,308	→	(‘20)	1,438
•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사업	:	(‘16)	508	→	(‘20)	628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서비스 사업	:	(‘16)	782	→	(‘20)	1,046
• 법령심사지원 사업	:	(‘16)	109	→	(‘20)	444
• 법제정비 사업	:	(‘16)	1,534	→	(‘20)	1,526
•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 사업	:	(‘16)	1,118	→	(‘20)	1,310
• 외국법제기관교류 사업	:	(‘16)	146	→	(‘20)	394
• 법제업무정보화추진 사업	:	(‘16)	6,009	→	(‘20)	7,404
• 행정기본법제 개선 사업	:	(‘16)	-	→	(‘20)	313

< 법제처 지난 5년간의 재정운용 추이 >

(단위 : 억원, %)

구 분	‘16실적	‘17실적	‘18실적	‘19실적	‘20실적	연평균 증가율
계	305	317	333	347	384	5.9
○ 예 산	305	317	333	347	384	5.9
【일반지방행정분야 분야】	305	317	333	347	384	5.9
▪ 일반행정 부문	305	317	333	347	384	5.9

2. 재정운용에 대한 성과평가

① 법제정보서비스 단위사업

○ 법령정보제공사업

-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및 주요 정책을 국민 체감형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림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입법과정에 국민 참여 기회 제공
 - 알기 쉬운 입법예고: '20년도 온라인 6회, 지면 8회, 총 256건 입법예고
 - 만화를 통한 법령홍보: 매월 12,000부씩 '20년도 총 144,000부 발행
 - 법제정책 알리기: 법제처 주요 사업 홍보영상 제작, 인포그래픽 제작, 공모전·이벤트 개최, TV·라디오광고 송출, 지면광고 게재 등 법제처 주요사업 관련 콘텐츠 총 383건 게재
- 다양한 입법체험활동 및 온라인 법제교육을 제공하며 어린이들이 관심을 가질 생활법령을 소개하는 등 내실 있는 어린이법제관 사업 추진으로 어린이의 준법정신 함양
 - '16~'20년도 총 위촉 인원: 6,188명
 - '16~'20년도 총 입법 체험 활동 인원: 8,071명
 - '16~'20년도 총 인터넷 게시물 등록 건수: 97,640건
- 청소년법제관에게 법제교육 및 다양한 입법체험활동을 제공하고 직접 학교규칙 제·개정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법에 대한 친숙도 및 법치주의의 중요성 인식 제고
 - '16~'20년도 총 위촉인원: 1,326명
 - '16~'20년도 총 입법 체험 활동 참여인원: 3,940명

○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사업

- 우리 국민·기업·정부의 대외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정보서비스로서 세계법제정보센터(world.moleg.go.kr)를 운영, 세계 주요 국가·지역·기구의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실시
- 중소기업, 정부기관, 연구기관 등 이용자가 원하는 해외 법령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는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 확대 실시
 - * 맞춤형서비스 제공 건수 : ('18) 985건 → ('19) 1,020건 → ('20) 1,069건

- 중점관리대상 법령의 정기적 점검을 통해 개정·폐지 등 정보를 현행화 하고 이용자 수요 및 최근 이슈를 반영한 법령을 추가하는 등 서비스 제공 범위 지속 확대
 - * 중점관리대상 법령: ('18) 798개 → ('19) 809개 → ('20) 885건
- 법령 영문 번역에 대한 수요 조사 및 법령 영문 번역계획 수립·시행, 법령 번역 관계 기관 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번역 기준을 통한 번역 법령 감수 등 법령의 외국어 번역 사업의 총괄·조정 기능 수행
 -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지자체, 주한상공회의소 등을 대상으로 법령 영문 번역에 대한 수요조사(연 1회, 총 84개 기관 대상)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법령 영문 번역 계획을 수립·시행(총 165건)하여 중복 번역 방지 및 번역 효율성 제고
 - 관련 부처 담당자, 전문가가 참석하는 법령의 외국어 번역 협의회(반기별 1회, 연2회)를 개최하여 법령 번역 관련 의견 수렴 및 관계 기관 간 협력 도모
 - 중앙부처의 자체번역 법령에 대한 감수 실시(총 9건)를 통하여 번역 품질 제고 기반 마련
- 남북법제 연구를 통한 통일 대비 법제역량 강화
 - 남북협력 현안 관련 남북한 법제통합 방안 연구('20., 1건),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개최('20., 총4회), 남북법제 정비협의회('20., 총2회) 개최 등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사업

- 복잡하고 방대한 법령을 일상생활 분야별로 분류·해설하여 제공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보편적 법령 접근성 보장 및 법인식 제고
 - (활용성업) 어려운 법령제명·키워드를 몰라도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원자료(raw data)를 쉽게 해설·분류
 - * 서비스 개시 후 일일이용자수 4.4배 증가, ('12) 12,134명 ⇒ ('20) 53,637명
 - (편의성업) 시대변화('모바일 온리 시대')에 대응하여 별도 개발예산 없이 시범 실시한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 평가 지속
 - * 2018 모바일브랜드 대상, 모바일어워드코리아 2019, 2020 대상 수상
 - * 모바일앱 다운로드 건수(누적): ('17) 193천 → ('18) 204천 → ('19) 220천 → ('20) 241천
 - (법인식업) 최신 판례·이슈를 웹툰으로 재구성하여 직접 평결에 참여할 수 있는 '솔로몬의 재판' 등 참여형 콘텐츠 확대
 - * 솔로몬의 재판 평결(월 2회) 평균 참여자수 1,300여명

- (비용↓) 생활 속에서 빈번히 제기되는 법률문제를 Q&A로 제공하여 실제 사례에 기반한 상황별 궁금증 해소, 법률자문 비용 절감 효과
 - * 네이버 지식IN과 생활법령 백문백답(2,290건)의 연계, 답변채택률 98.6%
- 주한 외국인의 국내 정착에 필요한 법령(창업, 근로계약 등)을 쉽게 해설하여 번역·제공하여 **건전한 다문화사회 발전 기반 마련**
- (소외·차별↓) 결혼이민자 등 주한 외국인이 법을 몰라서 차별 받지 않도록 필요한 법령을 해설·번역(12개 언어)하여 제공, 안내교육 실시
- (사회통합↑) 외국인 정책 관련 현장 활동 전문가 의견수렴(다국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전문가 자문회의, '20.11.), 다국어 법제교육(4회) 등을 통해 **국내 정책 및 법제도에 관한 이해도 제고**
- 최신 법령정보를 카드뉴스, 웹툰, Q&A로 재구성하여 법령·정책 홍보
- (정책홍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 국민의 삶과 직접 연계된 법령을 쉽고 재미있게 해설하여 제공, **방역·환경 등 주요 정책 홍보 효과**

② 정부입법 총괄관리 단위사업

○ 법령심사지원 사업

- 법령심사지원 사업

- '20년 법률안 국회제출(317건) 지원, 법률 공포(952건) 등 정부의 원활한 법제업무수행을 지원

- 법령입법지원 사업

- 법체계상 수직적(헌법, 법률 및 하위법령), 수평적(개별 법령 간) 통일을 확보하면서 정부 정책이 법령의 형식으로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반영 되도록 법령을 입안·심사할 때 필요한 입법 기준 마련
 - * '13년~'19년간 추가 법령 입안 심사 기준 책자 II~V발간(약 170건 기준검토), '20년 「법령 입안·심사 기준」(현재 전 부처 입안·심사 기준으로 활용) 개정 등 다수
- 입법내용의 전문화, 다수부처 관련 융·복합 법령이나 이해관계가 복잡한 쟁점 법령안의 증대 등으로 각 부처의 입안단계에서부터 전문적 법제 지원에 대한 수요가 커짐에 따라 정책을 구체화하는 법령안의 입안과 법리적 검토를 지원하기 위한 법령입안지원 제도 운영
 - * '13년~'20년간 총 1,585건에 대한 법령입안지원 실시

- 법제업무역량 강화 사업

- 법령입안·정비·해석 등 법제업무단계별로 구성체계를 개편하고 적극 행정을 위한 법령해석 기준 및 법령정비 및 자치법규 사례 등을 보완한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2.0 발간('20.5.)
-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배부('20.5., '20.12.)
- 부처별 법제업무실적 점검(473개 정부입법계획 대상 법률, 1,976개 입법예고안, 428개 제때마련 대상 법령) 강화를 통한 법제역량 지원

○ 법제정비 사업

- 법령정비 사업

- (불편법령 등 정비 추진)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차별법령 정비 및 신산업·신기술 법령 일괄 정비 등 법제도의 신속한 정비 지원
 - * '20년 법령정비과제 신규 발굴 : 531건 발굴
- (다양한 법령개선의견 수렴)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국민법제관, 현장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법령개선의견을 수렴
 - * '20년 국민아이디어 공모제(4~12월), 현장간담회 4회 개최
- (국민법제관 등 국민참여입법 제도 운영) 정부부처 중심의 폐쇄적 심사 과정을 국민에게 개방하여 입법절차의 민주성과 현장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법제관, 국민참여 심사제 등 국민참여입법을 확대 운영
 - * 국민법제관 간담회 3회, 설문조사 3회, 온라인회의 5회, 온라인 워크숍 등 국민법제관 활동 활성화
 - ※ ('19년)국민법제관 활동률 79.5% -> ('20년)국민법제관 활동률 81.8%
 - * 법령안 심사절차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심사제를 전년대비 확대 운영('19년 102회→'20년 104회)

-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지원 사업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규칙을 입안하거나 집행할 때 상위법 위반 여부 및 조례 자체의 해석상 의문에 대해서 법제처에 질의하는 경우 자치법규에 대한 의견제시 제도 시행('11년 3월~)
- 의견제시 제도 시행('11년 3월) 이후 현재('20년 12월)까지 총 2,860건 회신
 - * ('20년) 총 254건 회신, 평균 안건처리 기간 11.8일
- 매년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집을 발간·배포, 지방자치단체 실무자 법제 역량 강화 지원
- 자치법규의 법적합성 제고 및 지방 규제개혁 추진을 위하여 자치법규 속 상위법령 위반 사항, 법령 근거 없는 규제 등을 발굴·정비하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 시행('14년 3월~)

- (조례 자율정비) '14년부터 '17년까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6만 9천여개(교육청 소관 17개 조례 포함) 전수 검토 완료
 - * 주요 정비과제 13,557건 중 12,192건 정비(89.9%) 완료하여, '20년 정비율은 '19년도 82.5% 대비 7.4%p 상승
- (규칙 자율정비) '18년, '19년 2개년간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2만 4천여개에 대하여 전수 검토 완료
 - * 지방규제 혁신에 관한 정부 방침에 따라 당초 '18년부터 3개년 사업에 대하여 조기 완료
- 주민 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중요 규제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신속 정비하여, 지방규제 개혁 속도 제고
- 발굴한 정비과제 중 규제개혁의 효과가 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례는 **규제개선 중요 사례 100선('14년) 및 50선('15년 ~ '17년),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 사례집('18년 ~ '19년)으로 발간**, **全 지방자치단체에 전파하여 지방 규제개혁 촉진**
-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사례 홍보 및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법·제도·자치법규 개선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 ('20년 11월, 한국감정평가사협회·한국작은도서관협회 관계자 대상)
- 자치법규 속의 외국어, 낱선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 어렵거나 부적절한 용어를 주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주민이 스스로 해석하기 어려운 모호한 문장과 복잡한 규정체계를 정비하는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 사업** 시행('20년 4월~'22년)
 - 44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650개 조례 중 '20년 12월 기준 201개 조례에 대한 정비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송부
 - 자치법규 입안 업무 담당자들이 자치법규를 입안할 때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 책자를 발간**하여 지방자치단체 배포
-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업 강화
 - * ('20년)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자치법규 입안·해석을 상담·교육하는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총 37회 운영
- 자치법규의 적법성 제고방안, 자치법제 관련 주요 쟁점 등에 대한 각계 각층의 의견수렴을 위한 노력 지속 실시
 - * ('20년) 권역별 자치법제담당자 역량발전회의 3회 개최(10.30., 11.14., 11.27.)

- 조례안 전체에 대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는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제도” 실시(현재까지 총 1,283건 회신)
 - ‘20년부터 지자체 입법컨설팅 수요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요청권자를 모든 기초지자체로, 컨설팅 대상은 일부개정까지 확대
 - * (‘20년) 조례 제정안 및 개정안 등 총 449건에 대한 컨설팅 지원
 - ‘19년부터 중앙행정기관에서 마련한 참고 자치법규안의 적법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해당 부처에 제공함으로써 부적법한 자치법규의 소 지자체 확산을 방지(‘21년 1월 근거마련: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9조의3제4항)
 - * (‘19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자동차 운행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환경부) 등 총 22건 제공
 - * (‘20년) 「적극행정 운영 참고 조례안」 (행정안전부) 등 총 53건 제공
 - ‘17년부터 법령 제·개정에 따른 위임조례 제·개정 필요사항을 신속하게 파악, 지자체 등에 통보(공문)하여 법령 제·개정 현황을 놓치지 않도록 지원(현재까지 총 647건 통보)
 - * (‘20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등 총 268건 통보
 - 지자체의 필수조례 입법현황을 점검·관리하고(‘20년 필수조례 입법 현황: 87.37%), 지자체 필수조례 제때 마련을 위해 행안부 주관 지자체 합동평가의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관리

- 알기 쉬운 법제구축 사업

- (어려운 법령용어 사전 차단) 새로운 어려운 용어가 법령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부처협의안 검토 등 입법 단계별 사전 차단 실시
 - * (‘18년) 어려운 용어 518개 발굴, 373건 법령 심사 완료(차단율 72%)
 - * (‘19년) 어려운 용어 674개 발굴, 507건 법령 심사 완료(차단율 75%)
 - * (‘20년) 어려운 용어 469개 발굴, 376개 법령 심사 완료(차단율 80%)
- (어려운 법령용어 사후 정비) 현행 법령의 어려운 용어를 검토, 연구 용역 등을 통해 발굴하고, 법령용어 정비위원회를 거쳐 집중적으로 정비
 - * (‘18년~‘19년) 문체부 등 9개 부처 소관 어려운 용어 1,000여건 개정 협의 완료, 법률 23개, 하위법령 402개 개정 완료
 - * (‘19년~‘20년) 국토부 등 18개 부처 소관 어려운 용어 2,000여건 개정 협의 완료, 법률 66개 입법 추진, 대통령령 473개 개정 완료
- (일본식 용어 정비) 법령 속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하여 일본식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알기 쉽게 정비
 - * ‘14년부터 일본식 용어(37개)를 선정하여 현재 279개 법령 정비 완료
 - * ‘20년에는 일본식 용어 추가 정비를 위해 국립국어원 발간 일본어투 순화 자료집 등을 검토하여 50개 정비대상 용어 선정하여 정비 추진

- (상시 알법 검토) 국민 누구나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정되거나 전부개정되는 법령안 및 조례안을 검토하여 정비

* ('18년) 법령안 86건, 조례안 154건 정비

* ('19년) 법령안 82건, 조례안 154건 정비

* ('20년) 법령안 153건, 조례안 91건 정비

③ 법제업무정보화지원 단위사업

○ 법제업무정보화추진(정보화)사업

-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법령정보를 구축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법령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
 - * 일일평균 이용자: ('08) 약 6만 9천 명 → ('20) 약 59만 명
 - * 법령정보 제공량: ('08) 약 56만 건 → ('20) 약 432만 건
 - * 법령정보 공동 활용 기관: ('08) 84개 → ('20) 980개
- 지능정보화기술을 법령정보시스템에 반영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춘 “법령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 등 차세대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모든 법령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용자 음성을 인식하여 법령을 검색하고,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법령 본문을 읽어주는 모바일 서비스 제공
- '05년 이전 법령의 별표·서식 14만건을 한글프로그램의 표형태로 전환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서비스하였으며, 이를 위해 취업이 어려운 청년 또는 실직자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비대면·디지털 방식으로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
- 법령안 입안·심사, 법령해석, 국회 계류 법률안 및 자치입법지원 등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통 법제업무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One Stop으로 처리하고,
-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한 자동작성, 법령용어와 특수문자 검사·교정 및 오류검사, 법령안의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한 상세검색 등을 제공하여 신속·정확한 법제업무를 지원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입법현황 및 입법예고 등을 통합하여 제공하고, 사용자별 관심법령 정보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여 입법정보 확인 및 입법의견 제출 등에 대한 편의성 제고
 - * 입법의견 제출건수 : ('19년) 25,610건 → ('20년) 65,704건

4 법제전문성향상 단위사업

○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

- 공무원의 법령입안·법령해석 등 법제업무 능력을 제고하는 체계적인 법제역량강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법치주의를 실현하여 행정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고,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국정과제가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기여
 - 법령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국민 법의식 성숙에 따라 공무원의 법제역량 강화 필요, 법제교육 수요 급증
 - 중복 과목 조정 등 기존 교육과정 재정비를 통한 교육과정 체계화, 법제교육원 설립에 대비한 교육과정 확대 및 정비
 - 기초 법학과정(행정법, 민법, 헌법)의 수준별 다양화를 통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의 법제역량 강화 지원
- 코로나19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대면교육 위주의 법제교육을 비대면 실시간 강의로 전환·운영하여 교육생 만족도가 증가하는 등 성과지표 달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이러닝 콘텐츠를 신규 개발하는 등 비대면 온라인 교육 강화
 - 비대면 온라인 교육에 대한 의존도와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 맞춰 이러닝 콘텐츠 공동 활용 과목 추가하고 적시성 확보를 위해 기존 콘텐츠 재개발 실시
- 자치입법교육 확대를 통한 지방분권 강화를 지원하고,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포용적 법제교육 실현
 - 「지방재정법」 등 주요 자치법령에 관한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자치입법 역량 강화 지원
 - 다문화가족 구성원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대상으로 국내정착 분야, 자녀양육 분야 등 관련 법령 및 사례를 안내하는 교육지원을 통한 사회통합 구현

【연도별 교육훈련 실적】

연 도	교육훈련 실적					
	과정수	교육횟수	교육인원	연간 교육일수	실력 향상도	만족도
2017년	48	429	21,890	605	92.3	91.5
2018년	50	442	22,629	617	92.5	91.2
2019년	55	489	24,510	694	92.8	91.8
2020년	53	287	14,093	476	92.6	91.8

○ 외국법제기관교류 사업

- 코로나 19에 따른 대면 교류 제약 상황 속에서 비대면 방식의 교류·협력 추진 방안 모색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류협력 토대 구축
 - 인도네시아 법제정비 협력 사업 확대
 - 「2020-2021」 액션플랜 체결 및 온라인 세미나(20.9월) 통해 양국 간 법제 교류협력의 기반 강화
 - 법제협력 세미나 통해 확인한 인니 교육 수요 기반으로 법제업무 교육 영상 제작 및 제공 통해(20.12월) 인니 공무원 법제역량강화 지원
 - 인도네시아 법제업무 개선방안 연구용역(20.3월~12월) 및 결과 인니측 전달 통해 인니 법제전문기관 설립 지원
 - 제8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개최(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ALES) 개최(20. 11월)
 - K-방역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관심을 반영하여 '감염병 대응 법제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시아 협력 방안'을 주제로 회의 개최
 - 코로나19로 외국 연사 및 일반인 초청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화상회의와 온라인 생중계 활용하여 성공적 개최
- * (회의 참여자 수) '17년 170여명, '18년 200여명, '19년 300여명, '20년 국내외 1,300여명 시청

○ 행정기본법제 개선 사업

- 행정기본법 정부안 마련 및 국회 제출
 -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자문 및 실무 검토를 통한 행정기본법 초안 (51개 조문) 마련
 - 행정기본법안에 대한 권역별 공청회(온라인 생중계)를 총 3회 개최*하여 총 264건의 국민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일부 내용을 법안에 반영
- *충청권 공청회(3.12.), 호남권 공청회(4.22.), 영남권 공청회(4.29.)
- 관계기관 설명회, 실무협의 회의 및 공문 접수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 내용을 법안에 적극 반영하여 수정안 마련
 - 입법예고(총 3회), 각종 영향평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부안(43개 조문) 국회 제출

- 행정기본법안 및 공청회 홍보

- 행정기본법 홍보 포스터(400부) 및 리플렛(20,000부)을 제작하여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및 로스쿨 등 배포
- 주요포털(Daum 메인 페이지, 네이버 법률판), 홈페이지 및 SNS(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기관 SNS 등) 배너 광고 등을 통한 온라인 공청회 참여 활성화 유도

* 공청회 온라인 게시판 운영 결과, 총 누적조회수 15,442건, 의견 264건 수렴

II. 향후 재정투자계획

1. 정책여건 현황 및 변동사항

○ 법령정보제공 사업

- 국민이 법을 알지 못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 입법예고 되거나 시행되는 법령을 적시에 국민이 알기 쉽게 알릴 필요
- 어린이들의 관심을 유도하면서 학습 효과도 높이기 위하여, 친구들과 함께 접속하여 실행할 수 있는 온라인 게임 개발 필요
-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
 - 어려운 법령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일반 국민은 여전히 법령을 어렵게 느끼고 있음
 - 정비 방식을 용어 정비 방식뿐만 아니라 문장 및 체계 정비로 확대하는 신규 사업을 통해 국민의 법령 이해도 증진 필요

○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사업

- 한-ASEAN 교류 협력 등 우리 국민·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되고, 감염병 관련 법령 등 전 세계적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공공기관의 해외법령 정보 수요 지속적 증가
- 국가 간 경제·사회 협력 확대 및 외국인의 국내 투자 확대를 위한 국내 주요 법령의 정확한 번역 정보 제공 필요성 증대
- 행정분야 남북법제 통합 방안에 대한 큰 틀의 연구는 상당부분 진행되었는바, 세부 연구분야 발굴 통해 심화연구 지속 필요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사업

- (법령 수 급증) 미확인·불확실 정보가 넘쳐나는 ‘정보과잉 시대’에서 정확하고 검증된 법령정보를 상황에 맞게 신속하게 전달할 의무 증대
 - 단순 나열식의 법령정보 제공이 아닌 국민 니즈를 고려한 카드뉴스, 해설형, 질의응답 콘텐츠의 확대와 타 서비스와 차별성 강화 필요
- (국민참여 증가) 국민 권리의식 신장, 민원업무의 직접 수행 증가에 따라 허가·신고 등 민원 및 정책 참여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대한 수요 증가
 - 특히, 유료 법률자문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 노령층 등 정보취약계층의 차별 없는 법 접근성 보장을 위해 책자 등 오프라인 서비스 병행 필요

- (다문화사회 진입) 국내거주 외국인(약 230만명)의 근로계약·이혼 등 법적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번역·해설된 대한민국 법령에 대한 수요 증가
 - 다국어 생활법령은 소송·신고 등 전에 행위의 위법성에 대하여 국내 법령을 모국어(12개 언어)로 볼 수 있는 **법령정보 1차 플랫폼**으로 기능
 - 국내 법 체계·용어가 낯선 외국인을 위하여 필요한 법령정보를 찾아서 제공·안내해주는 '**맞춤형 다국어서비스**' 실시 필요성 증가

○ 법령심사지원 사업

- 법령심사지원 사업

- 국정과제의 이행을 위한 각종 입법,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생 법령 등 정부 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한 입법 수요가 갈수록 증대되고 있음에 따라, 신속하고 원활한 입법 지원 필요성 증가

- 법령입법지원 사업

- 법령체계 간 통일을 확보하면서 인공지능 발전 등 빠르게 변화하는 법제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정부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입법화할 필요성 증대
- 국정과제, 코로나-19 등 주요 정책의 신속한 법제화를 위해 '입안 과정의 효율화'에 대한 법령 소관 부처의 수요가 급증
- 빠르게 발전하는 현실에 발맞추어 해외 입법례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입법사례 등을 수집·분석하는 등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입법 지원 필요성 증대

- 법제업무 역량강화 사업

- 법령 입안 및 적용 현장에서 적극행정 법제가 자연스럽게 발현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법제의 내용 및 기준을 일선 공무원에게까지 확산 필요성 증가 및 정부입법 과정이 복잡해짐에 따라 총괄 기관으로서 부처별 법제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점검할 필요

○ 법제정비 사업

- 법령정비 사업

- 제도에 내재된 합법적 불공정·특권에 대한 개선 요구 확산에 따라 법령에 존재하는 불공정한 규정의 정비 필요성 지속
- 4차 산업혁명 등 지능·정보 사회로의 급속한 발전과 소비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공유경제 확대에 대응하여 법제도 정비 필요

- 입법과정에서의 국민의 참여 요구가 증가하고,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법제업무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 국민이 직접 입법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국민체감형 법제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법제관, 국민참여 심사 및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현장간담회 등 국민참여입법 제도를 확대할 필요
 - * 코로나19 확산 시 비대면회의, 서면회의로 전환 추진

-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지원 사업

- 지방의회 의원입법 확대 추세이나, 의원 발의 조례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의하는 경우보다 사전 검토기간이 부족하므로,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중요 쟁점에 대한 법리적 검토 및 법제역량강화 지원을 체계화함으로써 조례안의 법적합성 제고 지원 필요
- '20년도부터 실시한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 사업' *의 1차년도 사업 수행 경험을 활용하여 2차년도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사업 결과를 많은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국가법령과 자치법규 간의 정합성을 높이고, 자치법규 마련·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적극 지원 필요
- 하위법령에 의한 자치입법권 제한 금지를 규정한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의 취지 고려, 현행 법령에 대한 정비와 병행하여 관련 조례 정비 지원 필요
 - *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제28조제2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정·개정되는 하위법령부터 적용되나, 자치입법권을 존중한 새 지방자치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현행 법령의 조기 정비 필요
- 행정안전부 및 법령 소관부처와 협업하여 조례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는 등 자치입법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는 법령 및 이와 관련된 조례 정비 지원 추진
- 자치분권을 실현하려는 국정기조에 따라 지자체의 자치입법 활동이 증가하면서 입안지원(입법컨설팅)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
 - * 연도별 자치법규 보유현황: ('10년) 76,020건 → ('20년) 116,302건
 - * 연도별 자치법규 제·개정 현황: ('10년) 12,212건 → ('20년) 20,914건
 - * 입법컨설팅 회신건수: ('15년) 65건 → ('18년) 210건 → ('20년) 449건
- 법령에서 주요 정책의 세부내용을 조례로 위임하는 경우도 증가함에 따라 위임조례 관리·지원 업무의 중요성도 증대
 - * '17년 61건→ '18년 149건→ '19년 169건→ '20년 165건

- 필수조례 예비검토, 법령-조례 영향검토 및 입안 참고사항 사전 통보 등의 업무를 신규로 실시하는 등 자치법규 입안지원 업무의 체계 정비 추진

- 알기 쉬운 법제구축 사업

- 전문용어 또는 어려운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가 법령화되기 전에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17.10.24. 국무회의 대통령 지시 사항>	
○	환경부 등 각 부처는 법제처와 협의해서 법률 용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바꾸는 작업을 할 것
○	새로운 입법에 대해서는 법제처가 사전에 스크린을 해서 입법 단계부터 쉬운 용어로 바꾸는 작업을 할 것

<‘18.3.13. 국무회의 대통령 지시 사항>	
○	기존 법령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법령이 만들어질 때 우리말화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법제처가 마지막 단계에서 한글화, 일본식 용어 배제, 쉬운 용어로 개선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아예 입법시스템을 갖출 것

<‘20.7.7. 국무회의 대통령 훈시 사항>	
○	각 부처는 소관법률에서 용어를 쉽게 바꾸는 것과 일본식 용어 정리, 새롭게 사용되는 어려운 용어 생성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법제처에 의견 보낼 것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전문용어 등 어려운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어 정비 필요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었던 문제가 있어, 법령 입안 과정에서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사업 필요

○ 법제업무정보화추진(정보화)

- 법령정보 양의 증가, 국민들의 법 인식 제고로 법령정보에 대한 수요 증가 및 스마트기기의 확산으로 정보 접근성이 향상되어 일반국민의 법령정보 이용 빈도 급증
- 차세대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여 일반 국민들이 법령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법령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 방안 마련
-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정보의 수집·관리를 총괄하여 신속·정확하고 효율적인 법령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반 마련

- 정부입법시스템 부하 증가 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취약사항 및 시스템 노후화에 따라 인프라 재구성 필요
- * '20년 시스템 이중화 및 보안성 강화 조치 필요 진단(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 '20년 시스템 구조의 보안 취약 지적(국가정보원)

○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

- 법령 및 자치법규 건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정책을 입안하는 공무원의 입안능력 향상을 위한 법제교육의 양적·질적 확대 필요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교육 활성화에 대비하여 교육과정 개편·강의기법 증진 등 교수법 개발·이러닝 콘텐츠 확대 개발 등을 통해 외부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 법제교육원 개원('23년 개원 예정) 대비 실습형·체험형 강의 위주의 장기 법제교육과정 개발 필요,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법제교육을 법제교육원 교육으로 연계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발 필요

○ 외국법제기관교류 사업

- 신남방 국가 법제역량 강화 위한 교류·협력의 본격적 추진 필요
- '20년에 제작한 법제업무 교육영상을 기반으로 인니 등 신남방 국가 대상 맞춤형 교육, 심화 교육 등 체계적 협력으로 발전시킬 필요
-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를 총 8회 개최함에 따라 회의에 대한 아시아 각국의 관심이 증대된 상황인 바, 향후 회의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

○ 행정기본법제 개선 사업

- 국민은 판례나 법이론 속에 있는 행정법의 원칙을 찾거나 이해하기 어렵고 이는 빈번한 행정쟁송으로 이어져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 초래
- 국민이 행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공무원도 명확한 원칙에 따라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 법령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방대하고 복잡한 행정법 체계를 개선할 필요
- 행정법 분야의 원칙기준을 제시하는 행정기본법을 제정하여 행정법제 혁신의 플랫폼 마련하고, 현행 행정법령 전반에 대한 개선·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행정법제 혁신 매커니즘 마련·운용 필요
- 행정기본법 후속과제 연구, 법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 및 일선 실무자 등을 위한 해설자료 등 발간 필요

○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발간 사업

- 법령은 국가체제의 산물로서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각 기관에서 가장 정확한 법령정보(현행법령집)를 보유하고 제공할 필요
- 법치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권리보호·제한, 의무부과 등 모든 사항은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는 국민의 권리보호 및 의무이행 확보를 위하여 정확한 법령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의무 발생
- 지진, 정전, 화재, 사이버 테러 등 최근 자연재해 및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인터넷 사용이 중단되는 재난 및 비상상황에 적극 대비할 필요
- 현재 한국법령정보원을 대행자로 지정하여 법령집을 판매하고 있으나, 법령집 수요가 급감하여 사업 손실이 누적되고 있어 수익사업 형태로는 현행법령집이 폐간될 위기임
-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현행과 같은 법령집의 판매 체계를 폐지하고 국가예산으로 법령집을 발간하여 각 기관에 배포할 필요

2. 정책방향

□ 위기 극복과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한 법제 지원

- ① 주요 정책의 신속하고 완성도 높은 입법 지원
 - 주요 입법 특별관리, 국정과제 신속 법제화 지원, 의원입법에 대한 정부 내 역할 강화, 주요 정책의 일괄 법령정비 지원
- ② 법제로 뒷받침하는 적극행정
 - 신속·정확한 자문 등으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지원, 민생 관련 법령해석 신속 회신
- ③ 입법 효율화를 위한 법제혁신
 - 행정기본법 국회 통과 추진 및 시행 사전 준비, 입법 효율화를 위한 정부입법시스템 개선

□ 국민이 공감하는 법제 개선

- 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한 법령정비
 - 청년 권익 증진 등을 위한 법령정비, 금전 납부 법령 정비, 인·허가 규제관련 행정규칙 정비
- ②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법령 심사·정비
 -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추진, 법령-조례 영향검토제 실시
- ③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제공 콘텐츠 구축, 알기 쉬운 행정규칙 및 조례 만들기(2년차) 추진

□ 국민·세계와 소통하는 법제서비스

- ① 국민이 신뢰하는 법령해석 서비스
 - 해석과정에 국민 참여 확대,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전문성 강화
- ② 생활밀착형 법령정보의 수집·관리·제공
 - 법령정보의 관리 방식 개선, 국민 수요 높은 생활법령 콘텐츠 우선 제공, 법령정보 서비스 접근성·활용성 제고
- ③ 세계로 나아가는 K-법제
 -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맞춤형 법제교육 실시 등을 통한 신남방 정책 추진 지원

3. 재정운용방향

□ (일반행정 부문)

○ 법령정보제공 사업

- 알기 쉬운 입법예고: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입법예고 법령안에 대하여 다양한 국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신중히 선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와 디자인으로 입법예고 홍보 추진
 - 만화를 통한 법령홍보: 어렵고 딱딱한 법령을 국민들이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참신한 아이디어를 접목한 만화 콘텐츠로 제작하여 책자로 발간·배포하고, 스마트폰 보급·이용률 확대에 따라 다양한 세대가 쉽게 접하고 전파될 수 있도록 온라인 및 모바일 매체를 통한 홍보를 적극 수행
 - 법제정책 알리기: 국민에게 유용한 주요 정책 사업 및 법령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책고객 반응·홍보 트렌드 등을 반영한 새로운 포맷의 (시트콤·웹드라마 등) 콘텐츠를 개발하고, 영상 콘텐츠 중심의 뉴미디어 추세를 고려한 영상 제작 강화 및 확산으로 홍보 효과 향상
 - 어린이법제관 사업: 오래된 교육 자료의 법령 등 내용을 현행화하고, 어린이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신규 교육 콘텐츠를 개발·제공하여 어린이들의 법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준법정신 함양 도모
 - 청소년법제관 사업: 청소년법제관들이 직접 학교규칙 제·개정할 수 있도록 법제교육 등을 통해 지원하고, 그 결과를 전국의 다른 청소년들과 공유하면서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 제공
 -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
 - ▶ 콘텐츠 개발 대상 용어 및 조문 검토를 위한 책임연구원급 인건비 지원
 - ▶ 콘텐츠 라이선스 취득 및 그래픽 디자인을 위한 위탁용역비 지원
 - ▶ 법령별 주요 용어 및 체계 자문료 지원
- * '21년 예산 1,925백만원 → '22년 요구 3,342백만원(증1,417백,+73.6%)

○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사업

- 우리나라와 교류가 활발한 주요 국가의 중점관리대상법령 및 맞춤형 신청 법령 중심으로 번역본 서비스를 확대하여 이용자 편의성 제고
- 해외 법령 번역 시 신속한 작업, 오류 최소화 등 효율적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한 번역 솔루션 활용으로 제공 서비스 품질 제고
-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관(중기부, 산업부 등)과의 협업 강화 및 다양한 홍보 실시로 서비스를 확산하고 기재부에서 추진 중인 '(가칭) 대외경제 정보센터' 구축에 참여하여 해외진출관련 정보 통합 제공에 기여
- 각 기관별 법령 번역 사업에 대한 총괄·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중복 번역 방지 및 우선순위를 고려한 효율적 법령 번역 추진
- 번역된 법령이 「법령 영문 번역 기준」에 따라 번역되었는지에 대한 감수를 통해 번역 품질 관리
- 남북 상호간의 법제도를 이해하고 통일 시 수월한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남북 간에 통용될 수 있는 법제도 기반 구축과 관련된 연구 필요
- 북한법령의 내용 검토, 오류 수정 및 현행화를 통해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법제 분야에서 뒷받침

* '21년 예산 769백만원 → '22년 요구 875백만원(증106백,+13.8%)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사업

- (국문 콘텐츠) 지식도 스낵(snack)처럼 소비하는 **스낵컬처**의 시대에 맞춰 필요한 법령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콘텐츠 구성 다양화
 - 법령정보의 접근 및 이해가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에게 표와 그림을 활용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 형태의 콘텐츠 개발 확대**
- (다국어 콘텐츠) 맞춤형 서비스 확대 및 법률분쟁 관련 번역 법령정보 개발을 통하여 **외국인의 조기 정착에 필요한 법령정보의 직접적 지원**
 - 외국인 국내 거주비율을 고려하여 다국어 맞춤형 서비스('20. 4월 개시)의 **제공언어를 2개(영어, 중국어)에서 4개(태국어, 베트남어 추가)로 확대**
 -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민사소송 등 법률분쟁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여, 번역·제공
- (홍보) 서비스 만족도 조사 등 **대국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정보취약 계층·청소년·주한 외국인 대상 **온라인·오프라인 홍보를 확대**하여 **보편적 법령 접근성 보장**하고 국민의 법인식 제고
 - 다국어 생활법령 주요 콘텐츠를 주제별로 묶어 **책자 발간 및 배부**

* '21년 예산 1,047백만원 → '22년 요구 1,510백만원(증463백,+44.2%)

○ 법령심사지원 사업

- 법령심사지원 사업

- 법령안의 입법지원, 심사, 국회제출 및 공포 등 입법절차 전반에 걸쳐 정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

- 법령입법지원 사업

- 법령체계 간에 조화를 이루고 정부 정책이 입법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반영되도록 법령을 입안·심사할 때 필요한 입법 기준을 마련하여 배포
- 적절하고 신속한 입법 기준 마련을 위해 해외 입법례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입법사례 등을 수집·분석하는 등 조사·연구 기능 강화
-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책이 적시에 법제화되도록 입안 단계부터 법제 전문가가 조문화를 지원하고 법리적 쟁점을 검토하는 등 입안 과정의 효율화를 도모

- 법제업무 역량강화 사업

- 법령 입안 및 적용 현장에서 적극행정 법제 확산과 정부 부처의 법제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 '21년 예산 370백만원 → '22년 요구 733백만원(증363백,+98.1%)

○ 법제정비 사업

- 법령정비 사업

- 국민 일상생활 영역에서의 '공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특혜 폐지를 폐지하고 법규적용에서의 불공정 해소 및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청년 등 상대적으로 소외된 사각지대의 지원을 위한 법령정비과제 발굴·정비
- 국민아이디어 공모제, 현장간담회, 국민참여입법센터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하고 있는 불편·불합리한 법령의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생활에 밀접한 정비과제를 발굴·정비
- 법령정비 등 법제업무의 민주성과 현장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이 법제업무에 지속적·체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국민법제관 제도 운영, 법령안 심사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국민참여 심사제 실시 등 국민참여입법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

-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 지원 사업

- 법제처-집행기관-지방의회 3자 협의체를 운영하여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간 이견에 대해 협의체 운영을 통해 조정을

실시하고 신속한 해결 지원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자치법규가 상위법령과 조화되고, 자치입법 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법적 쟁점에 대해 응답해주는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 운영 및 홍보 등 지속 실시
- 공식적 의견제시 제도와 병행하여 유선 또는 정부입법지원센터의 질의응답 창구를 통해 자치법규 입안·집행 관련 상담을 제공하는 ‘자치법제상담 119’ 지속 운영
- 조례의 용어와 문장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 상위법령 위반 등 입법체계상 부적절한 조례 정비 추진
- 지방자치단체 법제담당자 회의 개최,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자치법규 입안 및 해석 지원의 현장성 강화
- 자치법규 입안·해석 및 정비에 필요한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집’ 등을 발간하여 배포
-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법제화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자치법규 입안 체계 확립 및 품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을 지속 발간하여 배포
- 자치법규의 입안 등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을 종합하여 정리한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새롭게 발간되는 『법령 입안·심사 기준』, 제·개정되는 「행정기본법」 및 「지방자치법」 등을 반영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개정판 발간 추진
- 입법컨설팅 안건 중 심도 있는 자문이 필요한 안건의 업무 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형 입법컨설팅을 지속 실시**하고, 완성도 높은 조례의 우수성을 다른 지자체에 홍보하여 입법컨설팅 제도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을 환기하는 한편 필수조례 적기 마련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로 위임조례 입안 지원 제도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 자치입법활동 지자체를 선정하여 표창 및 포상금 수여**
- 위임조례가 지속 증가하고 있고, 국가 주요정책의 세부 내용이 위임조례에 따라 집행되면서 그 중요성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위임조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 인력 운영

- 알기 쉬운 법제구축 사업

-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하여 **어려운 법령용어 사전 차단 및 사후 정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를 발굴하여 정비 지원
 - ▶ 사전 차단 및 사후 정비의 지속 추진을 위한 전문연구원 인건비 지원
 - ▶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법령용어 정비위원회 등 수당 및 임차료 지원
 - ▶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발굴 및 정비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 지원
-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법령안 새로 쓰기 사업 예산 지원**
-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실시를 통하여 다양하고 참신한 국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지원
- 권위적·차별적·부정적 법령용어 발굴 및 정비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등 기획 정비
- 국민과 함께하는 **통합 알법 플랫폼** 구축을 위한 **알법 사업 기초 자료 DB 구축 및 알법 앱 구현 및 브랜드화 추진**

* '21년 예산 1,383백만원 → '22년 요구 2,430백만원(증1,047백,+75.7%)

○ 법제업무정보화추진(정보화)

- 차세대 국가법령정보서비스를 위한 중장기 정보화전략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차세대 법령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 기반 마련, 고객지향적 법령정보시스템 개발, 지능형 서비스 구축 및 지속적 데이터 품질 강화 등 이행과제 추진
- 국가법령 데이터베이스의 중복을 제거하고 서비스 확장과 지능형 검색을 지원할 수 있는 구조로 DB 재설계
- 컴퓨터가 법령, 판례 등의 내용을 이해하는 법령지식 베이스를 구축하고, 사용자 질의에 답변을 추론할 수 있는 환경 구성
- 민간 지능정보화기술과 연계함으로써 다양한 디바이스(AI 스피커 등)를 통해 법령정보의 접근성 확대
- 정부입법시스템 노후 서버장비 교체 및 장비증설 인프라 재구성
 - (노후장비 교체) 노후 서버 장비('14년 도입) 교체를 통한 장비 노후화로 인한 장애 발생방지 및 지속적인 업무 연속 서비스 제공
 - (장비증설) 단독 구성된 서비스를 이중화하여 안정성 및 처리 속도 향상하고, 망(외부망↔내부망) 보안강화

* '21년 예산 7,051백만원 → '22년 요구 9,924백만원(증2,873백,+40.7%)

○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

- 수요자 맞춤형의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교재개발 고도화하며 우수강사를 확보·배정하여 공직자의 법제전문성을 향상
 - 지방공무원의 자치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확대 등 추진으로 실질적 지방분권 강화에 기여
 - 비대면 교육방식 전환에 맞춘 법제교육과정 정비 및 이러닝 콘텐츠 확대 개발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안정적인 법제교육 제공 기반 마련
 - 교육과정 신규 개발 및 교육수요 확보 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 법제교육원 개원 후, 국내 유일의 법제전문 교육훈련기관으로의 조기 정착을 도모
 -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법령 교육 실시 등을 통한 국민의 법이해도 향상
- * '21년 예산 1,394백만원 → '22년 요구 1,997백만원(증603백,+43.3%)

○ 외국법제기관교류 사업

- 신남방 정책과 연계된 전략적 법제교류 추진
 - 인도네시아와 체결한 '2020-2021년도 실행계획'을 기반으로 인니의 역점 사업인 △ 일원화된 법제전문기관 설립, △ 법제공무원 역량 강화, △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등 한-인니 법제교류 지속 강화
 - 특히 인니 공무원 대상 법제역량 강화 지원 사업이 정부의 신남방 정책 플러스에 포함됨에 따라 이의 적극·지속적 이행 필요
 - 인니 외 신남방 정책 국가 법제담당 공무원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법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시행함
 -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 발전
 - 신남방 국가들의 관심 및 결과 활용도 높은 분야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 해당 주제로 ALES 개최하는 등 아시아 법제 현안 연구용역과 ALES 연계 추진
 -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제8회 ALES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ALES 역시 화상회의, 온라인 생중계 등 비대면 수단의 활용을 확대하여 참여국 다원화 및 내용 내실화 등 노력 제고
- * '21년 예산 317백만원 → '22년 요구 443백만원(증126백,+39.7%)

○ 행정기본법제 개선

- 국민·법조계·학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 토론회 개최 및 법 인식 설문조사 등을 통해 미래 행정법제 혁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폭넓은 의견 수렴 추진
 - 판례나 학설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행정법 분야 의제 중 행정법제 혁신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기본법에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주요 의제들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
 - 현행법상 산재해 있는 공통 제도를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정비가 필요한 개별 행정법령에 관해 조사·분석하여 법령을 정비하기 위하여 연구용역 및 전문가 자문 등도 지속 추진
 - 행정기본법 제정 이후 국민과 공무원들의 적응을 돕고 원활한 법 집행을 유도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및 해설서(실무편람) 등 제작·배포
- * '21년 예산 300백만원 → '22년 요구 320백만원(증+20백,+6.7%)

○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발간

- 법령상의 현행법령집 발행·보급 의무 준수 및 국가적 사료 보전을 위해 손실누적 등으로 인한 사업유지 곤란을 표명한 한국법령정보원의 법령집 발행 대행 사업 지원
 - 법령집 추록의 발행·보존은 법치주의 국가의 책무이자,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한 사실상 의무지출 사업
- ⇒ 현행법령집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상징물로서,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등에 상징·홍보 목적으로 지속 비치
- * '21년 예산 - → '22년 요구 2,105백만원(증+2,105백,순증)

< 법제처 향후 5년간 재정운용계획 >

(단위 : 억원, %)

구 분	'21예산	'22	'23	'24	'25	연평균 증가율
계	407	516	553	548	566	8.6
○ 예 산	407	516	553	548	566	8.6
【일반공공행정분야】	407	516	553	548	566	8.6
▪ 일반행정 부문	407	516	553	548	566	8.6

<참고> '20~'24계획 vs '21~'25계획 대비표

구분		'21~'25 계획	'20~'24 계획
여건변동 사항		- 모바일·동영상 중심 홍보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포맷의 (시트콤·웹드라마 등) 콘텐츠 제작 및 법제처 캐릭터를 활용한 국민 참여·소통형 콘텐츠로 법령 정보 및 법제처 사업 홍보 - 미확인 정보가 넘쳐나는 '정보과잉 시대'에서 정확하고 검증된 법령정보를 신속히 전달할 의무 증대 - 국민의 민원업무(소송, 등기 등)의 직접 수행 증가에 따라 민원 및 정책 참여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대한 수요 증가 - 국내거주 외국인의 법적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번역·해설된 국내 법령에 대한 수요 증가	- 모바일·동영상 중심 홍보환경에 맞춘 다양한 콘텐츠 제작 및 법제처 캐릭터를 활용한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로 법령 정보 및 법제처 사업 홍보 -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발맞추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법령정보를 선제적으로 개발·제공할 필요 -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필요한 생활법령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법령정보의 수집·관리 총괄 및 신속·정확하고 효율적인 법령 정보 제공 기반 마련 - 정부입법시스템 서버 장비의 노후화로 인한 장애 발생 가능성 및 보안 취약사항 등이 존재해 개선 필요	
중기 투자 방향	일반 행정 부문	어린이들의 관심을 유도하면서 학습 효과도 높이기 위하여 친구들과 함께 접속하여 실행할 수 있는 온라인 게임 개발 필요	어린이법제관의 참여기회 실질적 보장을 위한 권역별 행사의 보안을 추진하고, 어린이 법제처 온라인 콘텐츠의 법령 현행화 등 신규 콘텐츠 개발을 추진하여 어린이법제관들에 대한 교육 효과 제고
		청소년법제관의 진로탐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기관 종사자와의 간담회 등 법 관련 직업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법 관련 직종의 적성과 소질을 발굴하도록 지원	청소년법제관들이 직접 학교규칙 제·개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활동 결과를 청소년법제관 뿐만 아니라 전국의 청소년들과 공유하면서 민주시민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 검증된 법령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접하도록 콘텐츠 구성 다양화 - 맞춤형 다국어 서비스의 언어권을 확대하고, 주한 외국인의 행정민원 및 법률분쟁 등에 필요한 법령정보 콘텐츠 개발 - 서비스 개선을 위한 대국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정보취약계층의 법령 접근성 제고를 위한 오프라인 책자 발간·홍보 병행	- 기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생활법령정보를 책자형태로 유관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법령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 - 외국인의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다국어 생활법령정보 개발을 확대하고, 콘텐츠 품질 향상을 통해 법령 정보 활용도 및 만족도를 향상

		▪ 차세대 국가법령정보서비스 중장기 정보화전략계획에 따른 이행과제 추진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 발생에 따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버 및 관련 자원 증설
		• 인니 신남방 공무원 대상 법제역량 강화 지원 사업이 정부의 신남방 정책 플러스에 포함됨에 따라 이의 적극 이행 필요	•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으로 우리의 우수한 법제역량을 전파하고 법제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아시아 한국법센터' 설립 추진
		• 인니 외 신남방 정책 국가 법제담당 공무원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법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시행함	•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회의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정책연구용역' 추진
		▪ 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법령 제공 방식의 변화를 도모하는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제공” 사업 신규 추진	

4. 성과목표(지표)

< 지표로 본 5년 후의 모습 >

구 분	'20(실적)	'21	'22	'23	'24	'25
○ 법제처 공식 SNS 고착수(명)	-	177,000	187,000	197,000	207,000	22,000
○ 세계법제정보센터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실적(건)	1,069	1,060	1,070	1,080	1,090	1,100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시스템 일일 방문자수(명)	53,637	54,500	55,500	56,500	57,500	58,500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점)	91	91	91	91	91	91
○ 법령정보과제의 부처 수용률(%)	78.3	74.1	78.5	78.5	78.5	78.5
○ 불합리한 법령 발굴 실적(건)	599	531	430	440	450	460
○ 법령입안지원 실적(건)	275	212	217	222	227	232
○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일괄 정비안 등 마련 실적(건)	243	244	240	240	240	240
○ 어려운 법령용어 사전 차단 실적(건)	525	469	450	450	450	450
○ 자치법규 의견제시 반려율(%) * 하향지표	5.9%	8.5%	8.4%	8.3%	8.2%	8.1%
○ 연간 법제교육 참가자 실 인원수(명)	14,093	22,000	23,000	23,500	24,000	24,500
○ 법제교육 피교육자 만족도(점)	91.8	91.5	91.8	92	92	92.1
○ 법제교육 전후 실력 향상도(점)	92.6	92.5	92.7	92.8	92.9	93
○ 법령정보 공동 활용기관 증가수(개)	88	90	90	92	92	94
○ 법령안편집기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점)	81.4	82	84	85	85	85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 만족도(점)	88.5	88.5	88.5	88.5	88.5	88.5
○ 정부입법센터 대한 사용자 만족도(점)	82.3	83	84	85	85	85

Ⅲ. 재정혁신 추진계획

- 해당사항 없음

IV. 중기 지출계획

1.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 백만원)

분야	부문	프로그램	(회계·기금)	단위사업	'21 예산	'22	'23	'24	'25
일반·지방행정					40,737	51,590	55,382	54,832	56,722
일반행정					40,737	51,590	55,382	54,832	56,722
▪ 정부입법 총괄·지원					40,737	51,590	55,382	54,832	56,722
(일반) 법제정보서비스					3,741	7,832	6,107	6,402	26,855
(일반) 정부입법 총괄·관리					1,753	3,163	3,684	2,291	2,262
(일반) 법제전문성향상					2,011	2,775	3,813	4,238	4,363
(일반) 본부인건비					22,430	24,000	25,680	27,478	29,401
(일반) 본부기본경비					3,681	3,791	3,905	4,022	4,143
(일반) 정책연구개발(R&D)					70	105	105	105	105
(일반) 법제업무정보화지원(정보화)					7,051	9,924	12,088	10,296	9,593
□ 총지출(A)					40,737	51,590	55,382	54,832	56,722
※ 내부거래지출(B)					-	-	-	-	-
보전지출(C)					-	-	-	-	-
□ 총 계(A+B+C)					40,737	51,590	55,382	54,832	56,722

2. 지출변동 내역

(1) 법제처 지출변동 개요

□ '21~'25계획 총지출은 '20~'24계획 대비 연평균 4.8p% 수준 증가

○ '21~'25계획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8.6%('20~'24계획 연평균 증가율 3.8%)로 세출 증가요인이 발생하여 '20~'24계획보다 증액하여 계획 수립

- ①법령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한 차세대 국가법령 정보시스템 구축(국법2.0), ②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령을 만들기 위한 법령정비 및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 추진, ③공무원의 법제전문성 향상을 위한 공무원 법제교육 기반 마련 등을 위하여 연평균 39.7억원 수준으로 지출 증가

< 법제처 지출변동 총괄표 >

(단위 : 억원, %)

구 분	'20	'21	'22	'23	'24	'25	연평균 증가율
◆ 총 지 출							
▪ '20~'24 계획(A)	403.2	410.9	432.3	448.7	468.7		3.8
▪ '21~'25 계획(B)		407.4	515.9	553.4	548.3	567.2	8.6
증감(B-A)		△3.5	83.6	104.7	79.6		
○ 예 산							
▪ '20~'24 계획(A)	403.2	410.9	432.3	448.7	468.7		3.8
▪ '21~'25 계획(B)		407.4	515.9	553.4	548.3	567.2	8.6
증감(B-A)		△3.5	83.6	104.7	79.6		
【일반지방행정 분야】							
▪ '20~'24 계획(A)	403.2	410.9	432.3	448.7	468.7		3.8
▪ '21~'25 계획(B)		407.4	515.9	553.4	548.3	567.2	8.6
증감(B-A)		△3.5	83.6	104.7	79.6		
<일반행정 부문>							
▪ '20~'24 계획(A)	403.2	410.9	432.3	448.7	468.7		3.8
▪ '21~'25 계획(B)		407.4	515.9	553.4	548.3	567.2	8.6
증감(B-A)		△3.5	83.6	104.7	79.6		

(2) 부문별 지출변동 세부내역

□ 법제처는 일반행정 부문 1개로 구성되어 '21~'25계획 총지출은 '20~'24 계획 대비 연평균 4.8p% 수준 증가

- '21~'25계획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8.6%('20~'24계획 연평균 증가율 3.8%)로 세출 증가요인이 발생하여 '20~'24계획보다 증액하여 계획 수립
 - ①법령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한 차세대 국가법령 정보시스템 구축(국법2.0), ②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령을 만들기 위한 법령정비 및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 추진, ③공무원의 법제전문성 향상을 위한 공무원 법제교육 기반 마련 등을 위하여 연평균 39.7억원 수준으로 지출 증가

< 일반행정 부문 지출변동 내역 >

(단위 : 억원, %)

구 분	'20	'21	'22	'23	'24	'25	연평균 증가율
< 일반행정 부문 >							
▪ '20~'24 계획(A)	403.2	410.9	432.3	448.7	468.7		3.8
▪ '21~'25 계획(B)		407.4	515.9	553.4	548.3	567.2	8.6
증감(B-A)		△3.5	83.6	104.7	79.6		
(정부입법 총괄 지원 프로그램)							
▪ '20~'24 계획(A)	403.2	410.9	432.3	448.7	468.7		3.8
▪ '21~'25 계획(B)		407.4	515.9	553.4	548.3	567.2	8.6
증감(B-A)		△3.5	83.6	104.7	79.6		

참고 1**완료사업 전체 리스트(총지출 기준)**

○ 해당사항 없음

참고 2**신규사업 전체 리스트(총지출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21예산	'22예산(안)			비 고 ¹⁾
		당초	요구	검토	
합 계					
일반회계 계					
○ 대한민국헌행법령 집 발간사업	-	-	21.1		예타 대상 아님

참고 3**보조사업 전체 리스트**

○ 해당사항 없음

3. 의무·재량지출 규모 및 관리계획

(1) 법제처 의무·재량지출 개요

(1-1) 의무지출 규모 및 산출내역

☐ 해당사항 없음

(1-2) 재량지출 규모 및 산출내역

☐ '21~'25계획 재량지출 규모는 연평균 518억원 수준(연평균 증가율 8.6%)

< 재량지출 규모 및 내역 >

(단위 : 억원, %)

구 분	'21	'22	'23	'24	'25	연평균 증가율
< 재량지출 >						
▪ '21~'25 계획	407.4	515.9	553.8	548.3	567.2	8.6
【 일반·지방행정 분야 】						
▪ '21~'25 계획	407.4	515.9	553.8	548.3	567.2	8.6
(일반행정 부문)						
▪ '21~'25 계획	407.4	515.9	553.8	548.3	567.2	8.6

(2) 의무·재량지출 관리계획

① 의무지출 관리계획

○ 해당사항 없음

② 재량지출 관리계획

☐ '21~'25계획 재량지출 규모는 연평균 518억원 수준(연평균 증가율 8.6%)

- 예산의 세출 증가요인이 발생하여 '20~'24계획 연평균 증가율 3.8% 보다 높은 수준으로 계획 수립

4. 국정과제 추진계획 : 해당사항 없음

V. 프로그램별 설명서

정부입법 총괄 지원

(분야)일반지방행정 - (부문)일반행정

(1)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사업목적

○ 법령정보제공 사업

- 온라인 및 지면 광고를 이용한 입법예고 홍보를 통해 주요 정책 사항을 포함한 법령안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에 대해 더 많은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널리 알림
- 국민 생활에 밀접한 주요 제정·개정·폐지 법령안 및 법령해석사례 등을 만화로 구성하여 시행법령 및 관련 정책 등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 온라인 매체 등 파급력 있는 매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이를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및 주요 법제 정책을 널리 알림으로써 국민들이 새롭게 바뀐 법·제도를 몰라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법령을 홍보
-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어린이법제관들에게 법령퀴즈 골든벨, 법안 만들기 대회, 국회 탐방 등 다양한 입법체험활동과 온라인 주제토론 등 온라인 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민주시민사회의 기반 마련
- 청소년을 대상으로 민주 시민의식과 준법정신을 체득할 수 있는 다양한 입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준법정신 및 법치행정의 중요성을 학습시키고 청소년들에게 진로탐색의 기회 제공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내에 검색되는 법령 중 국민 실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정보를 그림·사진·표 등을 활용한 마우스 오버(mouse-over) 기술을 통해 한눈에 보기 쉽게 제공

○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사업

- 세계법제 연구지원
 - 우리 국민·기업·정부의 대외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법제 정보센터를 운영, 주요 국가 등의 법령정보를 수집·번역·게시하고 맞춤형 서비스·법제 동향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 국가법령 외국어 번역 업무의 총괄·조정 기능 수행을 통하여 국내 진출 해외 기업·외국인 및 교류 국가 등에게 국내 주요 법령에 대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정보 제공

- 남북법제 연구

- 통일에 대비한 분야별 남북한 법제통합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통일 과정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혼란을 방지하고, 통일국가 형성에 이바지
- 남북 간 상이한 법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해결 방안 등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관계 부처와 공유함으로써 관계 부처의 입법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법제 업무의 역량을 강화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사업

- 국민들이 생활에서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소관 부처별 법령정보를 **수요자중심별로 재구성**하고, **쉽게 해설하여 제공**
- 국내 거주 외국인(결혼이민자, 외국인노동자 등)들이 정착에 필요한 법령을 차별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12개국 언어로 번역·해설한 법령정보 제공**
- **정보취약계층**(노년층, 저소득층 등)이 개인상황별로 필요한 법령·제도를 쉽게 이해하도록 **생애주기별·주제별 맞춤형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외국인의 국내법령 검색·이해 지원을 위한 **맞춤형 다국어 서비스** 실시

○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발간 사업(신규)

- **법령상**(「법령정보의 제공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현행 법령집 편찬·발행 및 보급 의무의 수행**을 위한 종합법령집 수록 발행 및 보급
- 그간 별도 예산보조 없이 법령집 수록 발행·보급을 대행한 (재)한국법령정보원이 지속된 적자발생에 따른 대행업무 곤란 표명
→ 대행업무 중단 시, 법령집 편찬 등 법령상 의무 위반 결과 초래
- 「법령정보의 제공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법령집 발행·보급 대행자로 지정된 (재)한국법령정보원의 현행 법령집 수록 발행·보급에 대한 예산 보조 및 관리·감독 필요
- * '20년 12월말 기준 중앙행정기관 현행법령집 보유율 24%(13개 기관만 보유), 지방자치단체 보유율 28%(기초·광역자치단체 중 67개 기관만 보유)

○ 법령심사지원 사업

- 법령심사지원 사업

- 민생·국정과제 등 정부 정책추진의 근거가 되는 각종 법률안의 국회 제출 및 공포 등 입법절차의 전반에 걸쳐 정부의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

- 법령입법지원 사업

- 법령체계 간에 조화를 이루고 정부 정책이 입법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반영되도록 법령을 입안·심사할 때 필요한 입법 기준을 마련
-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법령안에 대해 법제 전문가가 입안 단계부터 조문화를 지원하고 법리적 쟁점 검토를 검토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입법 추진을 도모
-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입법 기준 마련 등 입법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기능 강화

- 법제업무 역량강화 사업

- 적극행정 법제가 자연스럽게 발현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법제의 내용 및 기준을 일선 공무원에게까지 확산하고, 부처 법제업무를 지원·점검

○ 법제정비 사업

- 법령정비 사업

- 국민,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각계각층의 법제도 개선의견을 수집하고 검토·연구하여 각종 법령 속의 불합리한 규제 및 불편법령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정비함으로써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법제도 개선
-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법제정책 변화와 수요에 대응하고, 공정 사회 구현 등 국정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업 추진
- 국민법제관, 국민참여심사제 등을 통해 정부입법과정 및 법제개선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정부입법과정의 민주성을 제고하고, 현장 중심의 국민체감형 법제개선 추진

- 자치법규 입안지원 사업

-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제고하고 법령-조례-규칙간 위임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품질을 높이고 자치법규가 상위법령과 조화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입안·해석 및 정비에 대한 종합 지원 체계 구축

- 알기 쉬운 법제구축 사업

-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자치법규 등을 정비함으로써 **국민 중심의 법률문화 조성**
-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법령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고침으로써 **소수 전문가의 전유물이었던 법령을 일반 국민 위주의 법령으로 전환**

○ 법제업무정보화추진(정보화)

- 법령과 연혁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 등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 정보를 통합·서비스하여 법령정보 접근성 제고하고, 법령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관리하여 안정적인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 법령안 입안·심사, 법령해석, 입법예고 및 법령안편집기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최신 정보기술을 반영하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법제업무와 국민의 입법참여 등을 전자적으로 지원

○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 사업

- (법제교육) 공무원·공공기관 등 법규 실무자의 법령 입안 및 운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업무 관련 법령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전문적·체계적인 법제교육 실시
-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혁신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법 관련 학자, 인문·교양 전문가를 초빙한 체계적인 처내교육훈련을 통해 입법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고, 직원들에게 자기계발의 기회와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법제실무인력전문성향상) 법제실무인력의 자발적 연구·학습활동을 지원하고, 연구모임(CoP)을 중심으로 학계 등 외부전문가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식교류를 실시하며, 해외 선진법제를 체험함으로써 법제실무인력의 전문성을 향상

○ 외국법제기관교류 사업

- 국정과제인 신남방 정책을 법제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신남방 국가를 중심으로 활발한 법제교류협력 추진
- 대한민국의 법제 발전 경험과 법제행정 분야의 노하우를 외국 법제기관에 소개·제공하여 해당국가의 법제발전을 도모

- 외국 법제기관과 폭넓은 교류협력을 통해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및 법령 정보 등을 수집하고, 이를 대한민국 법제 발전에 활용
- 아시아 법제전문가 간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한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ALES)’의 개최를 통해 아시아 공통 현안에 대한 법제적 해결방안 모색
- 외국 법제기관과 폭넓은 교류협력을 통해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및 법령 정보 등을 수집하고, 이를 대한민국 법제 발전에 활용
- 아시아 법제전문가 간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한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의 개최를 통해 아시아 각국의 법제 선진화 등을 지원

○ 행정기본법제 개선

- 국민·법조계·학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 토론회 개최 및 법 인식 설문조사 등을 통해 미래 행정법제 혁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의견 수렴 추진
- 판례나 학설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행정법 분야 의제 중 행정법제 혁신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기본법에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주요 의제들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
- 현행법상 산재해 있는 공통 제도를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정비가 필요한 개별 행정법령에 관해 조사·분석하여 법령을 정비하기 위하여 연구용역 및 전문가 자문 등도 지속 추진
- 행정기본법 제정 이후 국민과 공무원들의 적응을 돕고 원활한 법 집행을 유도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및 해설서(실무편람) 등 발간 추진

□ 기대효과

○ 법령정보제공 사업

- 입법예고 중인 제정·개정 법령안의 주요 내용을 일간지 및 전문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모바일 등에 매월 8~32건(연간 총 200건 이상) 광고하여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입법과정의 민주성 도모
- 국민 생활에 유용한 법령 중 새롭게 바뀌는 법령내용과 관련 정책, 법령해석사례 등을 만화형식으로 제작하여 매월 1회 전국 지자체 및 우체국 등에 약 12,000부씩 배포함으로써 국민의 법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고 알권리를 충족시킴
- 법제처 주요 사업 및 그 성과를 홍보영상, 인포그래픽, 웹툰 등 쉽고 재미있는 홍보콘텐츠로 제작, 접근성이 높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매주 5~10건 게재·홍보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그 달의 시행법령을 매월 5~10건씩 선정하여 알림으로써 법을 모르거나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
-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통해 어린 시절부터 준법의식을 고취시킴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및 법치행정의 토대를 마련하고 준법의식을 제고하여 국민중심 법률문화 조성에 기여
- 청소년법제관 활동을 통해 학생 상호간에 토론을 통하여 스스로 학교 규칙을 제·개정해봄으로써 상호 배려·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정착시키고 학생들에게 법치행정의 중요성 및 준법정신 함양
-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제공을 통해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검색된 개별법령의 내용 중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 및 용어에 대해서 그림·사진·표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국민들이 해당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데 기여

○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사업

- 세계법제 연구지원
 - 우리 국민·중소기업이 필요한 해외법령 맞춤형 제공으로 해외진출 지원하고 정부·공공기관에 해외 사례 적시 제공하여 정부 정책 수립 지원
 - 국민·기업의 신청을 받아 해외 법령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의 편의성 및 정보 접근성 강화

- 국정과제 관련 법령 등 주요 법령의 번역을 통하여 정책의 대외 홍보 및 국가 이미지 제고
- 법령의 외국어 번역 계획 수립, 번역기준을 기반으로 한 감수를 통해 법령의 중복 번역으로 인한 비효율성 해소 및 번역 품질 제고

- 남북법제 연구

- 남북 간 통용될 수 있는 법제도 기반 구축 및 관련 법률적 쟁점 검토, 중앙행정기관의 법제정비 지원 등을 통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법제적 뒷받침 및 공고화에 기여
-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여 각 부처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법제 분야에서 지원하고 담당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에 기여
- 연구자료의 검토·보완을 통해 기존 연구자료의 활용성을 강화하여 적시에 활용할 수 있는 연구결과 축적·관리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사업

- 복잡하고 방대한 법령을 일상생활 분야별로 분류하고 해설하여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보편적 법령 접근성 보장 및 법인식 제고
- 생애주기별·주제별 맞춤형 서비스, 카드뉴스·웹툰 등 다양한 형태의 법령정보서비스를 통해 정보취약계층의 법령·정책 이해도 및 활용도를 제고하고, 법 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 결혼이민자, 외국인노동자 등 의 국내 법령 검색·이해를 지원하여 주한 외국인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고, 국내 법령·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를 통해 건전한 다문화사회 발전의 기반 마련

○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발간 사업(신규)

- 「법령정보의 제공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현행 법령집 편찬·발행 및 보급 의무의 이행
- 법치국가의 근본이자 공신력을 지닌 정부 유일의 종합법령집을 출판 및 보존하여 법치주의 실현에 이바지
- 전쟁·자연재해로 인한 기반시설 파괴 및 인터넷 마비와 같은 국가 위기상황에 대비

○ 법령심사지원 사업

- 법령심사지원 사업

- 신속한 입법지원을 통해 민생·국정과제 정책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정책집행을 도모

- 법령입법지원 사업

- 다양한 조사·연구를 통해 합리적이고 명확한 법령 입안·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입안과 심사 과정을 효율화하고 올바른 법제 문화 정착에 기여
-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 추진 법령안 등에 대한 입안 지원을 강화하여 해당 정책의 적시 추진을 도모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 및 만족도를 제고

- 법제업무 역량강화 사업

- 행정 일반에서의 적극행정 법제의 정착·활용을 확대하고 법제업무 지원 체계를 통해 부처 친화적인 법제업무 환경 구축

○ 법제정비 사업

- 법령정비 사업

-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국민행복을 위한 법적 기반이 구축되고 법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
- 지능·정보화 사회로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법제정책 변화와 수요에 대응하고, 4차 산업 발전에 기여
- 국민법제관, 국민참여심사제 등 국민이 법제 업무에 참석하는 통로를 확대함으로써 정부입법과정의 민주성을 제고

- 자치법규 입안지원 사업

- 자치법규 입안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국법체계에 부합하는 자치법규를 마련함으로써 지자체의 자치입법 역량강화 및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 실현 강화에 기여

- 알기 쉬운 법제구축 사업

- 국민이 법령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 법치주의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함
- 공무원·전문가와 일반 국민 사이에 발생하는 법 접근성 및 법령 활용에 대한 차별을 해소

○ 법제업무정보화추진(정보화)

- 다양한 법령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통합·연계 서비스하여 법령·판례 등을 검색하고 활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단축
- 최신 지능정보화 기술을 적용하고, 차세대 법령정보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생활용어 중심의 법령정보 검색서비스 구축
- 입법단계마다 반복해서 작성하는 개정문 및 주요내용, 입법예고문 등을 쉽고 빠르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앙 및 지방 공무원의 법령안 입안·심사 기간을 단축
- “법령안 입안·삼사 기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 법령안 작성 방법에 대한 학습, 숙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기여
- 시스템 장애 발생 및 보안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 가능

○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 사업

- (법제교육) 공무원·공공기관 등 법제전문성 강화 및 공직사회의 법치주의 확산을 통한 공직신뢰도 제고로 국정 현안의 효율적·체계적 추진 기대
-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법제처 직원의 법 전반에 대한 이해도 및 법제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해 체계적·상시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교양·외국어 교육 등 직원들의 품격 함양과 자기계발을 위한 기회 제공
- (법제실무인력전문성향상) 학계와의 네트워크를 통한 지식교류를 촉진하고 법제처 내 자발적인 연구·학습활동 지원

○ 외국법제기관교류 사업

- 외국 법제기관과 양해각서 체결, 정례적 교류 강화, 법령정보 제공, 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우리법제의 세계화에 기여
- 신남방 정책 대상국에 법제행정 분야의 노하우를 전수함으로써 지식공유사업(KSP) 및 공적개발원조(ODA) 등 국가적 차원의 해외 지원사업의 효과 증대에 기여
- 우리 법제에 기반한 무형의 사회기반시설(Invisible SOC)을 정착시킴으로써 해외진출 기업과 해외 거주 국민들에게 거주 및 투자 친화적 여건 조성
-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를 지속 개최함으로써 아시아 공통 현안에 대한 각 국의 법제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

○ 행정기본법제 개선 사업

- 지속적인 행정법제 혁신 매커니즘을 마련하여 국민주권과 적극행정을 실현하는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로 근본적인 전환 추진
- * 추진절차 : 학계·국민 등 의견 수렴 ⇨ 의제 발굴 ⇨ 연구용역 수행 ⇨ 실무 검토 ⇨ 부처협의 ⇨ 행정법제 혁신 협의회 상정 ⇨ 개정안·정비안 제출
- 행정기본법 시행 이전 개별 행정법령 정비를 통해 행정법의 통일성 · 효율성 제고
- 행정기본법에 대한 온·오프라인 홍보, 해설서(실무편람) 등 발간을 통해 일선 공무원의 원활한 행정 법령 집행을 유도하고 국민의 권리 보호에 기여

(2) 프로그램 내역

(단위 : 백만원, %)

	'21	'22	'23	'24	'25	연평균 증가율
정부입법 총괄 · 지원(프로그램)	40,737	51,590	55,382	54,832	56,722	8.6
<일반>	40,737	51,590	55,382	54,832	56,722	8.6
□ 본부인건비(단위사업)	22,430	24,000	25,680	27,478	29,401	7.0
▪ 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	22,430	24,000	25,680	27,478	29,401	7.0
□ 본부기본경비(단위사업)	3,681	3,791	3,905	4,022	4,143	3.0
▪ 기관운영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1,543	1,589	1,637	1,686	1,737	3.0
▪ 기관운영기본경비	2,138	2,202	2,268	2,336	2,406	3.0
□ 법제정보서비스(단위사업)	3,741	7,832	6,107	6,402	6,855	16.3
▪ 법령정보제공	1,925	3,342	2,651	2,712	2,813	9.9
▪ 세계법제정보서비스	769	875	1,083	1,151	1,187	11.5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서비스	1,047	1,510	1,985	2,239	2,530	24.7
▪ 대한민국헌행법령집 발간	-	2,105	388	300	325	순증
□ 정부입법 총괄 · 관리(단위사업)	1,753	3,163	3,684	2,291	2,262	6.6
▪ 법령심사지원	370	733	536	436	400	2.0
▪ 법제정비	1,383	2,430	3,148	1,855	1,862	7.7
□ 법제업무정보화지원	7,051	9,924	12,088	10,296	4,276	8.0
▪ 법제업무정보화추진(정보화)	7,051	9,924	12,088	10,296	9,593	8.0
□ 법제전문성향상(단위사업)	2,011	2,775	3,813	4,238	4,363	21.4
▪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	1,394	2,012	2,800	3,320	3,380	24.8
▪ 외국법제기관교류	317	443	480	535	600	17.3
▪ 행정기본법제개선	300	320	533	383	383	6.3
□ 정책연구개발(단위사업)	70	105	105	105	105	10.7
▪ 법제정책연구개발(R&D)	70	105	105	105	105	10.7

(3) 지출변동 내역 및 사유

① 법령정보제공 사업(재량지출)

(담당자: 5급 고주석, 044-200-6512, 7급 안상호, 044-200-6518)

(담당자: 7급 백선주, 044-200-6576, 7급 윤현정, 044-200-6583)

(담당자: 5급 박예지, 044-200-6855, 6급 최혜옥, 044-200-6857)

□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국정과제	해당 없음
사업내용	- 알기 쉬운 입법예고: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정·개정 법령안의 주요 내용을 온라인·모바일매체, 신문 지면 등에 게재 - 만화를 통한 법령홍보: 제정·개정 법령 정보, 생활법령정보 및 법령해석사례 등을 만화로 제작하여 월간지 형태로 12,000부를 발간하여 배포하고, 웹툰으로 편집하여 온라인 및 모바일을 통하여 홍보 - 법제정책 알리기: 법제처 홍보영상, 홍보책자, 홍보 웹툰, 인포그래픽 등 홍보콘텐츠를 제작하고, TV·라디오·신문 등 기존 홍보매체 외에도 온라인, SNS등 새로운 홍보매체를 발굴·송출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 - 어린이·청소년법제관 운영: 어린이·청소년법제관을 연간 모집하여 법제교육 및 다양한 입법체험활동(토론대회, 법 관련 퀴즈대회 등)을 온·오프라인으로 실시 -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내에 검색되는 법령 중 국민 실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나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정보를 그림·사진·표 등을 활용한 마우스오버(mouse-over) 기술을 통해 한눈에 보기 쉽게 제공
사업기간	'03년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법제처

□ 변동내역 및 변동요인

<법령정보제공 사업 지출변동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결산	'21예산	'22	'23	'24	'25	연평균 증가율
'20~'24계획 (증가율)	1,394	1,946 (39.6)	2,043 (5)	2,004 (△1.9)	2,024 (1)		9.8
'21~'25요구 (증가율)		1,925	3,342 (73.6)	2,651 (△20.7)	2,712 (2.3)	2,813 (3.7)	9.9

○ 세부 변동내역 및 변동요인

- 만화를 통한 법령홍보: 새로운 만화 콘텐츠 도입, 유명작가섭외 등 관련 기획 및 구성을 개선하여 만화의 질을 꾸준히 향상시키고, 우체국·민원실 등 다중집합장소 등에 대한 발간물 배포와 함께 온라인 홍보를 활성화 하기 위해 만화를 통한 법령홍보 사업의 지출소요 증가(24백만원 증액)
- 법제정책 알리기: 영상 콘텐츠 제작 강화 및 법제처 정책·사업 및 주요 법령 정보를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제작비, 광고비 등 130백만원 증액 필요
- 어린이·청소년법제관 사업: 어린이들의 관심을 유도하면서 학습효과도 높이기 위하여, 친구들과 함께 접속하여 실행할 수 있는 온라인 게임 개발 필요에 따라 592백만원 증액
-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 주요 현안 등 국민 관심 법령에 대한 콘텐츠 제공을 확대하고 전문가 및 국민 자문단의 의견 등을 수렴한 한눈법령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800백만원 증액

□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년도	금 액		산 출 근 거
'21*	'20~'24(당초)	1,946	- 알기 쉬운 입법예고: 158백만원 ·온라인 알기 쉬운 입법예고 5회 × 17.3백만원 ·신문 알기 쉬운 입법예고 5회 × 11.32백만원 ·광고제작비 6회 × 2백만원 ·기타(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등) 3.3백만원 - 만화를 통한 법령홍보: 238백만원 ·법나들이 발간 및 DM 12회 × 17.46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2회 × 2.1백만원 ·기타(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등) 3.3백만원 - 법제정책 알리기: 699백만원 ·홍보콘텐츠 제작 및 뉴미디어 홍보 등 1건 × 443백만원 ·온라인 홍보 플랫폼 운영 12회 × 17.42백만원 ·지원인력 보수 1명 × 26백만원 ·기타(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등) 21백만원 - 어린이법제관 사업: 442백만원 ·입법 체험 행사 26회 x 8.7백만원(1회 평균) ·지원인력 1명 x 32.2백만원 ·홍보 포스터 제작 및 발송 1건 x 13.2백만원 ·활동노트 등 참고책자 제작 및 발송 1건 x 13.5백만원 ·수료증 제작 및 발송 1건 x 6.5백만원 ·온라인 콘텐츠 개발 5과정 x 30백만원 - 청소년법제관 사업: 108백만원 ·입법 체험 행사 16회 x 5.7백만원(1회 평균) ·홍보 포스터 제작 및 발송 1건 x 7.4백만원 ·운영사례 등 참고책자 제작 및 발송 1건 x 5.6백만원 ·위촉장 제작 및 발송 1건 x 3.5백만원 -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제공 사업: 300백만원 ·콘텐츠 개발 10회 x 27백만원 ·홍보 및 운영 2회 x 5.5백만원 ·전문가자문단 간담회 등 운영 6회 x 3.17백만원
	'21~'25(요구)	1,925	- 알기 쉬운 입법예고: 158백만원 ·온라인 알기 쉬운 입법예고 5회 × 17.3백만원 ·신문 알기 쉬운 입법예고 5회 × 11.32백만원 ·광고제작비 6회 × 2백만원 ·기타(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등) 3.3백만원 - 만화를 통한 법령홍보: 238백만원 ·법나들이 발간 및 DM 12회 × 17.46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2회 × 2.1백만원 ·기타(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등) 3.3백만원 - 법제정책 알리기: 699백만원 ·홍보콘텐츠 제작 및 뉴미디어 홍보 등 1건 × 443백만원 ·온라인 홍보 플랫폼 운영 12회 × 17.42백만원 ·지원인력 보수 1명 × 26백만원 ·기타(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등) 21백만원 - 어린이법제관 사업: 442백만원 ·입법 체험 행사 26회 x 8.7백만원(1회 평균)

			· 지원인력 1명 x 32.2백만원 · 홍보 포스터 제작 및 발송 1건 x 13.2백만원 · 활동노트 등 참고책자 제작 및 발송 1건 x 13.5백만원 · 수료증 제작 및 발송 1건 x 6.5백만원 · 온라인 콘텐츠 개발 5과정 x 30백만원 - 청소년법제관 사업: 108백만원 · 입법 체험 행사 16회 x 5.7백만원(1회 평균) · 홍보 포스터 제작 및 발송 1건 x 7.4백만원 · 운영사례 등 참고책자 제작 및 발송 1건 x 5.6백만원 · 위촉장 제작 및 발송 1건 x 3.5백만원 -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제공 사업: 279백만원 · 콘텐츠 개발 10회 x 25.7백만원 · 홍보 및 운영 2회 x 2.5백만원 · 전문가자문단 간담회 등 운영 4회 x 4.25백만원
'22	'20~'24(당초)	2,043	- 알기 쉬운 입법예고: 158백만원 · 온라인 알기 쉬운 입법예고 5회 x 17.3백만원 · 신문 알기 쉬운 입법예고 5회 x 11.32백만원 · 광고제작비 6회 x 2백만원 · 기타(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등) 3.3백만원 - 만화를 통한 법령홍보: 238백만원 · 법나들이 발간 및 DM 12회 x 17.46백만원 · 공공요금 및 제세 12회 x 2.1백만원 · 기타(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등) 3.3백만원 - 법제정책 알리기: 796백만원 · 홍보콘텐츠 제작 및 뉴미디어 홍보 등 1건 x 503백만원 · 온라인 홍보 플랫폼 운영 12회 x 20.42백만원 · 지원인력 보수 1명 x 27백만원 · 기타(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등) 21백만원 - 어린이법제관 사업: 442백만원 · 입법 체험 행사 26회 x 8.7백만원(1회 평균) · 지원인력 1명 x 32.2백만원 · 홍보 포스터 제작 및 발송 1건 x 13.2백만원 · 활동노트 등 참고책자 제작 및 발송 1건 x 13.5백만원 · 수료증 제작 및 발송 1건 x 6.5백만원 · 온라인 콘텐츠 개발 5과정 x 30백만원 - 청소년법제관 사업: 108백만원 · 입법 체험 행사 16회 x 5.7백만원(1회 평균) · 홍보 포스터 제작 및 발송 1건 x 7.4백만원 · 운영사례 등 참고책자 제작 및 발송 1건 x 5.6백만원 · 위촉장 제작 및 발송 1건 x 3.5백만원 -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제공 사업: 300백만원 · 콘텐츠 개발 10회 x 27백만원 · 홍보 및 운영 2회 x 5.5백만원 · 전문가자문단 간담회 등 운영 6회 x 3.17백만원
	'21~'25(요구)	3,342	- 알기 쉬운 입법예고: 158백만원 · 온라인 알기 쉬운 입법예고 5회 x 17.3백만원 · 신문 알기 쉬운 입법예고 5회 x 11.32백만원 · 광고제작비 6회 x 2백만원 · 기타(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등) 3.3백만원 - 만화를 통한 법령홍보: 262.4백만원

			· 법나들이 발간 및 DM 12회 × 19.3백만원 · 공공요금 및 제세 12회 × 2.3백만원 · 기타(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등) 3.2백만원 - 법제정책 알리기: 829백만원 · 홍보콘텐츠 제작 및 뉴미디어 홍보 등 1건 × 532백만원 · 온라인 홍보 운영 12회 × 20.8백만원 · 지원인력 보수 1명 × 26백만원 · 기타(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등) 21백만원 - 어린이·청소년법제관 사업: 993백만원 · 입법 체험 행사 42회 x 7.6백만원(1회 평균) · 지원인력 1명 x 33.2백만원 · 어린이법제관 홍보 포스터 제작 및 발송 1건 x 13.2백만원 · 청소년법제관 홍보 포스터 제작 및 발송 1건 x 7.4백만원 · 어린이법제관 활동노트 등 참고책자 제작 및 발송 1건 x 13.5백만원 · 청소년법제관 운영사례 등 참고책자 제작 및 발송 1건 x 5.6백만원 · 어린이법제관 수료증 제작 및 발송 1건 x 6.5백만원 · 청소년법제관 위촉장 제작 및 발송 1건 x 3.5백만원 · 어린이법제관 온라인 법 교육 게임 개발 1건 x 592백만원 -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 1,100백만원 · 콘텐츠 개발 총괄 책임연구원 3.94백만원 × 12월 = 47백만원 · 법령별 주요용어·체계 자문료 400천원 × 18개법령 × 18건 = 130백만원 · 콘텐츠 라이선스 취득 대행 및 그래픽 디자인 위탁 = 270백만원 · 한눈보기 사업 구축 방향 관련 연구용역 23백만원 · 전문가간담회 운영 등 20백만원 ·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문가 자문 및 국민의견 조사 10백만원 · 시스템 구축 비용 600백만원
'23	'20~'24(당초)	2,004	- 알기 쉬운 입법예고: 158백만원 · 온라인 알기 쉬운 입법예고 5회 × 17.3백만원 · 신문 알기 쉬운 입법예고 5회 × 11.32백만원 · 광고제작비 6회 × 2백만원 · 기타(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등) 3.3백만원 - 만화를 통한 법령홍보: 238백만원 · 법나들이 발간 및 DM 12회 × 17.46백만원 · 공공요금 및 제세 12회 × 2.1백만원 · 기타(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등) 3.3백만원 - 법제정책 알리기: 757백만원 · 홍보콘텐츠 제작 및 뉴미디어 홍보 등 1건 × 476백만원 · 온라인 홍보 플랫폼 운영 12회 × 19.42백만원 · 지원인력 보수 1명 × 27백만원 · 기타(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등) 21백만원 - 어린이법제관 사업: 442백만원 · 입법 체험 행사 26회 x 8.7백만원(1회 평균) · 지원인력 1명 x 32.2백만원 · 홍보 포스터 제작 및 발송 1건 x 13.2백만원 · 활동노트 등 참고책자 제작 및 발송 1건 x 13.5백만원 · 수료증 제작 및 발송 1건 x 6.5백만원 · 온라인 콘텐츠 개발 5과정 x 30백만원 - 청소년법제관 사업: 108백만원 · 입법 체험 행사 16회 x 5.7백만원(1회 평균) · 홍보 포스터 제작 및 발송 1건 x 7.4백만원

			· 운영사례 등 참고책자 제작 및 발송 1건 x 5.6백만원 · 위촉장 제작 및 발송 1건 x 3.5백만원 -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제공 사업: 300백만원 · 콘텐츠 개발 10회 x 27백만원 · 홍보 및 운영 2회 x 5.5백만원 · 전문가자문단 간담회 등 운영 6회 x 3.17백만원
	'21~'25(요구)	2,651	- 알기 쉬운 입법예고: 158백만원 · 온라인 알기 쉬운 입법예고 5회 x 17.3백만원 · 신문 알기 쉬운 입법예고 5회 x 11.32백만원 · 광고제작비 6회 x 2백만원 · 기타(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등) 3.3백만원 - 만화를 통한 법령홍보: 262.4백만원 · 법나들이 발간 및 DM 12회 x 19.3백만원 · 공공요금 및 제세 12회 x 2.3백만원 · 기타(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등) 3.2백만원 - 법제정책 알리기: 879백만원 · 홍보콘텐츠 제작 및 뉴미디어 홍보 등 1건 x 582백만원 · 온라인 홍보 운영 12회 x 20.8백만원 · 지원인력 보수 1명 x 26백만원 · 기타(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등) 21백만원 - 어린이· 청소년법제관 사업: 552백만원 · 입법 체험 행사 42회 x 7.6백만원(1회 평균) · 지원인력 1명 x 34.2백만원 · 어린이법제관 홍보 포스터 제작 및 발송 1건 x 13.2백만원 · 청소년법제관 홍보 포스터 제작 및 발송 1건 x 7.4백만원 · 어린이법제관 활동노트 등 참고책자 제작 및 발송 1건 x 13.5백만원 · 청소년법제관 운영사례 등 참고책자 제작 및 발송 1건 x 5.6백만원 · 어린이법제관 수료증 제작 및 발송 1건 x 6.5백만원 · 청소년법제관 위촉장 제작 및 발송 1건 x 3.5백만원 · 어린이법제관 온라인 콘텐츠 유지·보수 5과정 x 30백만원 -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 800백만원 · 콘텐츠 개발 총괄 책임연구원 3.94백만원 x 12월 = 47백만원 · 콘텐츠 개발 지원 전문인력 3.3백만원 x 2명 x 12월 = 118백만원 · 법령별 주요용어·체계 자문료 400천원 x 30개법령 x 20건 = 240백만원 · 콘텐츠 라이선스 취득 대행 및 그래픽 디자인 위탁 = 275백만원 · 전문가간담회 운영 등 20백만원 · 시스템 유지·보수 100백만원
'24	'20~'24(당초)	2,024	- 알기 쉬운 입법예고: 158백만원 · 온라인 알기 쉬운 입법예고 5회 x 17.3백만원 · 신문 알기 쉬운 입법예고 5회 x 11.32백만원 · 광고제작비 6회 x 2백만원 · 기타(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등) 3.3백만원 - 만화를 통한 법령홍보: 238백만원 · 법나들이 발간 및 DM 12회 x 17.46백만원 · 공공요금 및 제세 12회 x 2.1백만원 · 기타(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등) 3.3백만원

			- 법제정책 알리기: 777백만원 · 홍보콘텐츠 제작 및 뉴미디어 홍보 등 1건 × 496백만원 · 온라인 홍보 플랫폼 운영 12회 × 19.42백만원 · 지원인력 보수 1명 × 27백만원 · 기타(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등) 21백만원 - 어린이법제관 사업: 442백만원 · 입법 체험 행사 26회 x 8.7백만원(1회 평균) · 지원인력 1명 x 32.2백만원 · 홍보 포스터 제작 및 발송 1건 x 13.2백만원 · 활동노트 등 참고책자 제작 및 발송 1건 x 13.5백만원 · 수료증 제작 및 발송 1건 x 6.5백만원 · 온라인 콘텐츠 개발 5과정 x 30백만원 - 청소년법제관 사업: 108백만원 · 입법 체험 행사 16회 x 5.7백만원(1회 평균) · 홍보 포스터 제작 및 발송 1건 x 7.4백만원 · 운영사례 등 참고책자 제작 및 발송 1건 x 5.6백만원 · 위촉장 제작 및 발송 1건 x 3.5백만원 -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제공 사업: 300백만원 · 콘텐츠 개발 10회 x 27백만원 · 홍보 및 운영 2회 x 5.5백만원 · 전문가자문단 간담회 등 운영 6회 x 3.17백만원
			- 알기 쉬운 입법예고: 158백만원 · 온라인 알기 쉬운 입법예고 5회 × 17.3백만원 · 신문 알기 쉬운 입법예고 5회 × 11.32백만원 · 광고제작비 6회 × 2백만원 · 기타(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등) 3.3백만원 - 만화를 통한 법령홍보: 262.4백만원 · 법나들이 발간 및 DM 12회 × 19.3백만원 · 공공요금 및 제세 12회 × 2.3백만원 · 기타(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등) 3.2백만원 - 법제정책 알리기: 939백만원 · 홍보콘텐츠 제작 및 뉴미디어 홍보 등 1건 × 642백만원 · 온라인 홍보 운영 12회 × 20.8백만원 · 지원인력 보수 1명 × 26백만원 · 기타(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등) 21백만원 - 어린이·청소년법제관 사업: 553백만원 · 입법 체험 행사 42회 x 7.6백만원(1회 평균) · 지원인력 1명 x 35.2백만원 · 어린이법제관 홍보 포스터 제작 및 발송 1건 x 13.2백만원 · 청소년법제관 홍보 포스터 제작 및 발송 1건 x 7.4백만원 · 어린이법제관 활동노트 등 참고책자 제작 및 발송 1건 x 13.5백만원 · 청소년법제관 운영사례 등 참고책자 제작 및 발송 1건 x 5.6백만원 · 어린이법제관 수료증 제작 및 발송 1건 x 6.5백만원 · 청소년법제관 위촉장 제작 및 발송 1건 x 3.5백만원 · 어린이법제관 온라인 콘텐츠 유지·보수 5과정 x 30백만원 -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 800백만원 · 콘텐츠 개발 총괄 책임연구원 3.94백만원 × 12월 = 47백만원 · 콘텐츠 개발 지원 전문인력 3.3백만원 × 2명 × 12월 = 118백만원

'21~'25(요구) 2712

			· 법령별 주요용어 · 체계 자문료 400천원 × 30개법령 × 20건 = 240백만원 · 콘텐츠 라이선스 취득 대행 및 그래픽 디자인 위탁 = 275백만원 · 콘텐츠 홍보 및 전문가 간담회 운영 등 20백만원 · 시스템 유지 · 보수 100백만원
'25	'20~'24(요구)	2813	- 알기 쉬운 입법예고: 158백만원 · 온라인 알기 쉬운 입법예고 5회 × 17.3백만원 · 신문 알기 쉬운 입법예고 5회 × 11.32백만원 · 광고제작비 6회 × 2백만원 · 기타(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등) 3.3백만원 - 만화를 통한 법령홍보: 262.4백만원 · 법나들이 발간 및 DM 12회 × 19.3백만원 · 공공요금 및 체제 12회 × 2.3백만원 · 기타(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등) 3.2백만원 - 법제정책 알리기: 939백만원 · 홍보콘텐츠 제작 및 뉴미디어 홍보 등 1건 × 642백만원 · 온라인 홍보 운영 12회 × 20.8백만원 · 지원인력 보수 1명 × 26백만원 · 기타(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등) 21백만원 - 어린이 · 청소년법제관 사업: 554백만원 · 입법 체험 행사 42회 x 7.6백만원(1회 평균) · 지원인력 1명 x 36.2백만원 · 어린이법제관 홍보 포스터 제작 및 발송 1건 x 13.2백만원 · 청소년법제관 홍보 포스터 제작 및 발송 1건 x 7.4백만원 · 어린이법제관 활동노트 등 참고책자 제작 및 발송 1건 x 13.5백만원 · 청소년법제관 운영사례 등 참고책자 제작 및 발송 1건 x 5.6백만원 · 어린이법제관 수료증 제작 및 발송 1건 x 6.5백만원 · 청소년법제관 위촉장 제작 및 발송 1건 x 3.5백만원 · 어린이법제관 온라인 콘텐츠 유지·보수 5과정 x 30백만원 -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 900백만원 · 콘텐츠 개발 총괄 책임연구원 3.94백만원 × 12월 = 47백만원 · 콘텐츠 개발 지원 전문인력 3.3백만원 × 2명 × 12월 = 118백만원 · 법령별 주요용어 · 체계 자문료 400천원 × 30개법령 × 20건 = 240백만원 · 콘텐츠 라이선스 취득 대행 및 그래픽 디자인 위탁 = 275백만원 · 콘텐츠 홍보 및 전문가 간담회 운영 등 20백만원 · 시스템 유지 · 보수 100백만원 · 한눈보기 사업과 법령정비 연계방안 관련 연구용역 100백만원

□ 고려사항

○ 최근 3년간('18~'20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단위 : 백만원)

년 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8	1,437	-	△83	1,354	1,345	-	9
'19	1,476	-	-	1,476	1,454	-	22
'20	1,438	-	-	1,438	1,394	-	44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외부기관	지적사항	조치내용
2018년 국회 예결위 결산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지양	○ '19년 예산안에 대변인실 여비를 확대 편성하였으며, 지적 이후에는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함
2018년 국회 법사위 결산	○ 어린이법제관 참여활동 강화 및 수료 기준 개선	○ 입법체험행사 중 법안만들기 대회를 확대개최(전국 1회 → 권역별 4회)하여 어린이법제관의 참여활동을 강화하고, 그에 따라 2017년부터 부여된 행사 참여 마일리지 획득 기회 또한 동시에 확대되면서 수료기준 실질적 개선
2018년 국회 법사위 예산	○ 온라인 홍보 플랫폼 '여기로'의 이용률 제고	○ '여기로'를 통해 제공하는 정책 및 법령 정보에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 개발, '여기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수단 적극 활용
	○ 특수지를 통한 입법예고 시 일반 법령안과 특정 분야 법령안의 선정 비율을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	○ 해당 월의 선정된 입법예고안을 분석해 일반 법령안과 특정 분야 법령안의 비율을 균형적으로(20%~30%) 배분
	○ '알기 쉬운 법령안 입법예고' 사업의 적절한 운영 필요	○ 향후 입법예고안 선정 시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지 여부 등을 더욱 신중히 검토하여 선정할 계획
	○ 어린이법제관 수료율 제고를 통한 수료증 예산의 효율적 집행 필요	○ 온·오프라인활동의 연계 강화, 참여형 콘텐츠 확대 등을 통하여 어린이법제관들의 적극적인 활동 유도하여 수료율 개선
	○ 청소년법제관 선정 지역안배 필요	○ 신청학교의 권역별 배분을 고려하여 청소년법제관 운영학교 선정

2019년 국회 예결위 결산	○ 어린이법제관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및 수익률 실질적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모의의회, 온라인 법안 토론 등 참여형 활동을 신설·확대하였고, 온라인 교육 내용을 오프라인 활동에 적극 활용하는 등 온·오프라인 활동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음
2020년 국정감사	○ 청소년법제관은 좋은, 중요한 사업으로, 내실 있게 운영될 필요	○ 청소년법제관 활성화를 위해 홍보 및 콘텐츠를 강화하고 청소년법제관이 만족할 수 있는 행사를 준비·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겠음
2020년 국회 예결위 결산	○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	○ 청소년법제관 모집시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시·도 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임.
2020년 국회 예산	○ 기존의 찾기쉬운 생활법령 서비스와 상호 보완작용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필요	○ 콘텐츠 개발 대상 법령을 선정하는 단계 또는 용어를 발굴하는 단계에서 생활법령 정보 서비스의 이용자의 관심도가 높은 법령 및 주제 등을 참고하여 사업 추진 예정
2020년 국회 예산	○ 법령용어 발굴 단계에서부터 국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함으로써 동 사업 추진 목적에 보다 부합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법제처에서 운영 중인 “국민과 함께하는 법령안 새로 쓰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국민참여단을 콘텐츠 개발 단계부터 참여하도록 계획 마련

② 세계법제정보서비스(재량지출)

(담당자: 5급 권용준 044-200-6827,

6급 조은진 044-200-6829)

□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국정과제	해당없음
사업내용	- 세계법제 연구지원 · (세계법제정보센터 운영) 언어권별 연구원을 통해 중점관리대상 국가·법령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가 직접 신청한 법령 정보를 제공하는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 등 제공 · (세계법제정보센터 홍보) 중기부·산업부 등 유관기관 협업 및 매체광고 등을 통한 홍보로 세계법제정보센터 접근성 강화 · (법령 외국어 번역 총괄·관리) 정부부처와 민간 대상 수요조사를 통해 연간 법령 번역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기관 간 협의회를 운영하여 효율적인 법령 번역 체계 구축 · (법령 번역에 대한 감수) 중앙부처에서 자체 번역한 법령을 「법령 영문 번역 기준」에 부합하는지 감수하여 법령 번역의 신뢰성 및 통일성 제고 - 남북법제 연구사업 · (남북교류협력법제 연구) 남북 간 통용될 수 있는 법제도의 기반 구축과 관련된 심화 연구 추진 · (남북법제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원) 법제전문기관으로서 전문성을 활용, ① 단기적으로는 각 부처의 교류협력사업 추진 지원을 위한 법령 정비, ② 장기적으로는 통일 대비 법령정비 지원을 위하여 협의회를 개최하여 관련 자료 제공 및 법령정비과정 지원 · (현안 연구 및 이슈페이퍼 발간) 남북관계 급변에 따라 시급히 논의되어야 하는 법적 쟁점, 북한법령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이슈페이퍼를 발간 · (대내외 정보제공과 소통 강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남북 법제 연구위원회 운영, 관계부처 공동 세미나 등을 통한 국내외 관련 기관·학계와의 협력 강화 ※ 법제처·법무부·통일부 지속적인 공동세미나 개최 중
사업기간	‘04년 ~ 계속
총사업비 ¹⁾	해당없음
사업규모 ²⁾	해당없음
지원조건 ³⁾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법제처

□ 변동내역 및 변동요인

<세계법제정보서비스사업 지출변동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결산 ¹⁾	'21예산	'22	'23	'24	'25	연평균 증가율
'20~'24계획 (증가율)	597	789 (32.2)	830 (5.2)	813 (△2.0)	821 (1.0)		8.3
'21~'25요구 (증가율)		769	875 (13.8)	1,083 (23.8)	1,151 (6.8)	1,187 (3.1)	11.5

□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년도	금 액		산 출 근 거
'21*	'20~'24(당초)	789	- 세계법제 연구지원(632백만원) · 세계법제정보센터 운영 및 홍보 일반용역비(1년) 574백만원 ※ 연구원 총 12.5명: (전일제) 영어2, 아랍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마인어, 독일어 (반일제) 영어 · 세계법제정보센터 홍보 자료 제작(약 2,000부) 5백만원 · 세계법제정보센터 운영 업무협약(수시출장 등) 1백만원 · 세계법제 지원 관련 사업추진비 3백만원 · 번역계획 수립 등을 위한 전문가 회의(2회) 3백만원 · 세계법제 번역솔루션SW 구입비 46백만원 - 남북법제 연구사업(157백만원) · 남북법제 전문연구원 채용 등(2명) 80백만원 · 남북법제 주요법령 통합방안 연구 1건×30백만원=30백만원 ·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운영 4회×4백만원=16백만원 · 통일대비 법령정비협의회 개최 2회×4백만원=8백만원 ·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발간 1회×11백만원=11백만원 · 정책연구용역 수행, 평가 및 자문 수당, 여비 등 12백만원
	'21~'25(요구)	769	- 세계법제 연구지원(632백만원) · 세계법제정보센터 운영 및 홍보 일반용역비(1년) 574백만원 ※ 연구원 총 12.5명: (전일제) 영어2, 아랍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마인어, 독일어 (반일제) 영어 · 세계법제정보센터 홍보 자료 제작(약 2,000부) 5백만원 · 세계법제정보센터 운영 업무협약(수시출장 등) 1백만원 · 세계법제 지원 관련 사업추진비 3백만원 · 번역계획 수립 등을 위한 전문가 회의(2회) 3백만원 · 세계법제 번역솔루션SW 구입비 46백만 - 남북법제 연구사업(137백만원) · 남북법제 전문연구원 채용 등(2명) 80백만원 · 남북법제 주요법령 통합방안 연구 1건×28백만원=28백만원

			·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운영 3회×3백만원=9백만원 · 통일대비 법령정보협의회 개최 1회×3백만원=3백만원 · 정책연구용역 수행, 평가 및 자문 수당, 여비 등 17백만원
'22	'20~'24(당초)	830	- 세계법제 연구지원(688백만원) · 세계법제정보센터 운영 및 홍보 일반용역비(1년)663백만원 ※ 연구원 총 14명: (전일제) 영어3, 아랍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중국어2,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마인어, 독일어 · 세계법제정보센터 홍보 자료 제작(약 2,000부) 5백만원 · 세계법제정보센터 운영 업무협의(수시출장 등) 1백만원 · 세계법제 지원 관련 사업추진비 3백만원 · 번역계획 수립 등을 위한 전문가 회의(2회) 6백만원 · 세계법제 번역솔루션SW 구입 및 유지관리비 10백만 - 남북법제 연구사업(142백만원) · 남북법제 전문연구원 채용 등(2명) 80백만원 · 남북법제 주요법령 통합방안 연구 1건×30백만원=30백만원 ·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운영 3회×3백만원=9백만원 · 통일대비 법령정보협의회 개최 2회×3백만원=6백만원 · 정책연구용역 수행, 평가 및 자문 수당, 여비 등 17백만원
	'21~'25(요구)	875	- 세계법제 연구지원(675백만원) · 세계법제정보센터 운영 및 홍보 일반용역비(1년)655백만원 ※ 연구원 총 13명: (전일제) 영어3, 아랍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마인어, 독일어 · 세계법제정보센터 홍보 자료 제작(약 2,000부) 5백만원 · 세계법제정보센터 운영 업무협의(수시출장 등) 1백만원 · 세계법제 지원 관련 사업추진비 3백만원 · 번역계획 수립 등을 위한 전문가 회의(2회) 6백만원 · 세계법제 번역솔루션SW 유지관리비 5백만 - 남북법제 연구사업(200백만원) · 남북법제 전문연구원 채용 등(2명) 80백만원 · 남북법제 주요법령 통합방안 연구 2건×30백만원=60백만원 ·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운영 6회×2.5백만원=15백만원 · 통일대비 법령정보협의회 개최 4회×5백만원=20백만원 · 정책연구용역 수행, 평가 및 자문 수당, 여비 등 25백만원
'23	'20~'24(당초)	813	- 세계법제 연구지원(661백만원) · 세계법제정보센터 운영 및 홍보 일반용역비(1년)644백만원 ※ 연구원 총 13명: (전일제) 영어3, 아랍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마인어, 독일어 · 세계법제정보센터 홍보 자료 제작(약 2,000부) 5백만원 · 세계법제정보센터 운영 업무협의(수시출장 등) 1백만원 · 세계법제 지원 관련 사업추진비 3백만원 · 번역계획 수립 등을 위한 전문가 회의(2회) 3백만원 · 세계법제 번역솔루션SW 유지관리비 5백만원 - 남북법제 연구사업(152백만원) · 남북법제 전문연구원 채용 등(2명) 80백만원 · 남북법제 주요법령 통합방안 연구 1건×40백만원=40백만원 ·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운영 3회×3백만원=9백만원 · 통일대비 법령정보협의회 개최 2회×3백만원=6백만원 · 정책연구용역 수행, 평가 및 자문 수당, 여비 등 17백만원

	'21~'25(요구)	1,083	- 세계법제 연구지원(728백만원) · 세계법제정보센터 운영 및 홍보 일반용역비(1년) 703백만원 ※ 연구원 총 14명: (전일제) 영어3, 아랍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중국어2,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마인어, 독일어 · 세계법제정보센터 홍보 자료 제작(약 2,000부) 5백만원 · 세계법제정보센터 운영 업무협약(수시출장 등) 1백만원 · 세계법제 지원 관련 사업추진비 3백만원 · 번역계획 수립 등을 위한 전문가 회의(2회) 6백만원 · 세계법제 번역솔루션SW 구입 및 유지관리비 10백만원 - 남북법제 연구사업(355백만원) · 남북법제 전문연구원 채용 등(3명)=170백만원 · 남북법제 주요법령 통합방안 연구 3건×30백만원=90백만원 ·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운영 6회×2.5백만원=15백만원 · 통일대비 법령정비협의회 개최 4회×5백만원=20백만원 · 남북법제 세미나 개최 1회=10백만원 ·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발간=20백만원 · 정책연구용역 수행, 평가 및 자문 수당, 여비 등 30백만원
'24	'20~'24(당초)	821	- 세계법제 연구지원(656백만원) · 세계법제정보센터 운영 및 홍보 일반용역비(1년) 639백만원 ※ 연구원 총 13명: 영어3, 아랍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마인어, 태국어, 독일어 · 세계법제정보센터 홍보 자료 제작(약 2,000부) 5백만원 · 세계법제정보센터 운영 업무협약(수시출장 등) 1백만원 · 세계법제 지원 관련 사업추진비 3백만원 · 번역계획 수립 등을 위한 전문가 회의(2회) 3백만원 · 세계법제 번역솔루션SW 유지관리비 5백만원 - 남북법제 연구사업(165백만원) · 남북법제 전문연구원 채용 등(2명) 80백만원 · 남북법제 주요법령 통합방안 연구 1건×50백만원=50백만원 ·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운영 4회×3백만원=12백만원 · 통일대비 법령정비협의회 개최 2회×3백만원=6백만원 · 정책연구용역 수행, 평가 및 자문 수당, 여비 등 17백만원
	'21~'25(요구)	1,151	- 세계법제 연구지원(781백만원) · 세계법제정보센터 운영 및 홍보 일반용역비(1년) 751백만원 ※ 연구원 총 15명: (전일제) 영어3, 아랍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중국어2, 일본어2, 베트남어, 태국어, 마인어, 독일어 · 세계법제정보센터 홍보 자료 제작(약 2,000부) 5백만원 · 세계법제정보센터 운영 업무협약(수시출장 등) 1백만원 · 세계법제 지원 관련 사업추진비 3백만원 · 번역계획 수립 등을 위한 전문가 회의(2회) 6백만원 · 세계법제 번역솔루션SW 구입 및 유지관리비 15백만원 - 남북법제 연구사업(370백만원) · 남북법제 전문연구원 채용 등(3명)=180백만원 · 남북법제 주요법령 통합방안 연구 3건×30백만원=90백만원 ·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운영 6회×2.5백만원=15백만원 · 통일대비 법령정비협의회 개최 4회×5백만원=20백만원 · 남북법제 세미나 개최 1회=10백만원 ·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발간=20백만원 · 정책연구용역 수행, 평가 및 자문 수당, 여비 등 35백만원

'25	'20~'24(요구)	1,187	- 세계법제 연구지원(787백만원) · 세계법제정보센터 운영 및 홍보 일반용역비(1년) 757백만원 ※ 연구원 총 15명: (전일제) 영어3, 아랍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중국어2, 일본어2, 베트남어, 태국어, 마인어, 독일어, · 세계법제정보센터 홍보 자료 제작(약 2,000부) 5백만원 · 세계법제정보센터 운영 업무협약(수시출장 등) 1백만원 · 세계법제 지원 관련 사업추진비 3백만원 · 번역계획 수립 등을 위한 전문가 회의(2회) 6백만원 · 세계법제 번역솔루션SW 구입 및 유지관리비 15백만 - 남북법제 연구사업(400백만원) · 남북법제 전문연구원 채용 등(3명)=180백만원 · 남북법제 주요법령 통합방안 연구 3건×40백만원=120백만원 ·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운영 6회×2.5백만원=15백만원 · 통일대비 법령정비협의회 개최 4회×5백만원=20백만원 · 남북법제 세미나 개최 1회=10백만원 ·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발간=20백만원 · 정책연구용역 수행, 평가 및 자문 수당, 여비 등 35백만원
-----	-------------	-------	--

□ 고려사항

○ 최근 3년간('18~'20년) 이 · 전용, 이월 · 불용실적

(단위 : 백만원)

년 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 · 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8	580		△14	566	545		21
'19	700			700	673		27
'20	628			628	597		31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세계법제 연구지원

외부기관	지적사항
국회 법사위 (‘17년 결산심의, ‘18년 국정감사)	○ 실효성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예산·인력 확대 필요 ○ 위탁사업 성과지표 목표치를 적정하게 설정하여 효과적인 성과관리를 할 필요가 있으며, 만족도 관련 성과지표 측정 기준 합리적 재설정 필요
국회 예결위 (‘20년 예산심의)	○ 해외법령정보에 관한 번역서비스 확대 등 사업 내실화 필요
국회 법사위 및 예결위 (‘19년 결산심의)	○ 낙찰차액 활용한 불필요한 지출 방지 대책 마련 및 기념품 지급내역 정리 할 것 ○ 해외법령 번역본 확대 및 위탁사업 성과관리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남북법제 연구

외부기관	지적사항
국회 (‘17년도 결산심의)	○ 남북법제 사업 관련 부처간 협업 강화 및 대국민 홍보 추진 필요
국회 (‘19년도 예산심의)	○ 남북법제 연구용역 신규 주제 발굴 필요,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과 정보공유 및 협업 강화 필요
국회 (‘20년도 예산심의)	○ 중복 추진되지 않도록 각 부처의 통일 대비 업무 범위 명확화 필요

③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사업(재량지출)

(담당자: 4급 정승택, 044-200-6781,
8급 변정현, 044-200-6791)

□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국정과제	해당 없음
사업내용	어렵고 복잡한 법령 정보를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분야별로 재분류하여 법령정보를 제공
사업기간	'09년 ~ 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및 민간위탁
사업시행주체	법제처 및 민간위탁자

□ 변동내역 및 변동요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사업 지출변동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결산 ¹⁾	'21예산	'22	'23	'24	'25	연평균 증가율
'20~'24계획 (증가율)	1,013	1,047 (3.4)	1,099 (5.0)	1,078 (△1.9)	1,089 (1.0)		(1.8)
'21~'25요구 (증가율)		1,047	1,510 (44.2)	1,985 (31.5)	2,239 (12.8)	2,530 (13.0)	(24.7)

○ 세무 변동내역 및 변동요인

- 생활법령 콘텐츠 개발 용역 관련 운영경비 등 반영(중 328백만원)

○ 일반용역비(210-14): 328백만원 중액

- (운영경비 반영)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상 편성하도록 규정된 운영경비,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미반영으로 실제 연구원 인건비가 지나치게 낮은 상황, 연구원의 잦은 이직으로 안정적 법령정보서비스 제공에 한계
- 동일한 기관에 위탁 중인 국가법령정보서비스 사업의 예산편성과 동일하게 운영경비를 인건비의 30%로 반영하여, 연구원 처우 개선을 통한 연속적·안정적 생활법령정보 콘텐츠 개발 추진
- (다국어 서비스 확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240만명 도달하는 현재, 외국인이 당사자가 되는 법률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법령에 대한 접근성은 매우 제한
- 사전에 국내법령을 숙지하도록 하여 법률분쟁을 예방하고, 관련 법령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맞춤형 검색·상담 서비스 언어권 확대

* ('21년) 영어, 중국어 → ('22년) 영어, 중국어 + 베트남어, 태국어

< '22년도 예산요구액 >

- 국문 콘텐츠 개발·업데이트: 936백만원[18명*3.04백만원*12월*1.3*1.1]
- 외국어 콘텐츠 개발: 182백만원[4명*2.65백만원*12월*1.3*1.1]

◆ 운영경비 반영 필요성 ◆

① 안정적 사업 운영상의 어려움

- 법제처가 직접 수행한 사업을 '12년부터 (재)한국법령정보원으로 위탁하는 과정에서 예산계상 시 운영경비, 인건비 중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상여금 등을 미반영하여 수탁사업 운영 어려움 발생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 「법령정보의 제공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법령상 위탁사업으로서, 콘텐츠 개발·홍보를 '12년부터 (재)한국법령정보원 위탁
- 일반용역사업과 달리, 콘텐츠 개발 연구원의 동 위탁사업 참여율 100%
-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위탁사업 수행 경비 지원 규정 有

- 현재 편성된 인건비(303만원) 일부를 운영경비(사무비품·사무용 OS 구입, 여비, 인쇄비) 및 4대보험료·퇴직급여충당금으로 사용함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실제 연구원 인건비는 평균 약 230만원(세전) 수준에 불과

*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6조: 인건비는 '기준단가+퇴직급여충당금, 상여금'으로 편성, 제27조: 학술연구용역에 인건비 외에 경비를 편성하도록 규정

-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수탁 수행에 따른 적자 발생

- 유사업무 대비 지나치게 낮은 보수, 상여금 미지급 등으로 인하여 인력 유출이 심하여 연속적·안정적 업무 수행이 불가

* 최근 2년간 생활법령 연구원 정원(20명) 대비 퇴사자 비율 34% ('19년 8명, '20년 5명) → 지방의회(월임금 약 400만원) 등 유사직종으로 이직

<유사직종 월 임금총액(성과급 포함) 대비 정보원 직원 임금 수준>

(단위: 천원)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A)		30인미만(최소규모) 사업장(B)		한국법령정보원 생활법령 연구원(C)			
				구분	월임금총액	C/A	C/B
대졸	4,124	대졸이상	3,338	연구직 (대학원졸)	2,371	57%	70%
대학원졸	6,133	대학원졸	-	책임연구원	3,063	49%	-

*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항목은 고용노동부 <2019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 (2020년 6월 발행) p. 57 정규근로자의 학력별 월임금 총액

** 한국법령정보원 생활법령 연구원 임금 수준은 2020년 12월 기준

- 전체 연구원이 법학석사 이상의 학력이며, 전일제로 위탁업무를 전담하여 **용역참여율이 100%**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건비는 (계약예규) 학술연구 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의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에 따르면 **용역참여율이 100%일 경우 책임연구원은 월 6,492천원, 연구원은 월 4,978천원**이 지급 기준단가

② 동일 성격의 수탁사업 간 합리적 이유 없는 예산편성 차이

- (재)한국법령정보원에 위탁하는 국가법령정보사업은 **운영경비가 인건비의 30%로 반영**된 반면, 생활법령정보사업의 경우 운영경비가 반영되지 않아 위탁사업 간 합리적 이유 없는 예산편성 차이 발생
- 최초 예산편성 시, 운영경비를 반영하지 못한 사항을 개선하여 수탁사업 간 형평성을 맞추는 필요가 있음.
- 국가법령정보사업과 생활법령정보사업을 담당하는 연구원은 유사업무를 수행하며, 양 사업간 연구원 교류·이동 등도 함에도 불구하고 두 사업의 운영경비 편성 여부에 차이가 있어 사업운영에 어려움 호소

◆ 다국어 서비스 언어권 확대 ◆

- (맞춤형 다국어 서비스) 국내 거주 외국인이 법령정보를 요청하면 기존 다국어 콘텐츠 검색·국문 콘텐츠 발췌번역·관련 조문 발췌제공 등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법령정보만 맞춤형으로 신속 제공('20. 4월~)

※ 맞춤형 법령 검색·상담 프로세스

주한 외국인이 법령정보 요청 → ① 기존 다국어 콘텐츠 검색 ② 국문 콘텐츠 검색·발췌번역 ③ 번역된 법령의 관련조문 발췌 등을 통하여 요청 법령정보의 맞춤형 제공

- 국내 법령의 외국어번역이 미흡한 상황에서,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등 주한 외국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령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
- 국내 거주 외국인의 비율을 고려하여, 서비스 언어를 2개 → 4개로 확대
 - 다국어 생활법령의 수요가 높은 언어권(베트남어, 태국어)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추가 실시

• 정보취약계층의 법령 접근성 보장을 위한 책자 발간(증 136백만원)

○ 일반수용비(210-14) 등: 136백만원 증액

- (수요자 맞춤형 생활법령 책자 발간·배포) 디지털 소외계층의 법령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정책 대상별 맞춤형 생활법령 책자를 제작하여 관련기관에 홍보·배포 필요

* [예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담안내 결과, 필요한 법령의 제명·형태에 대한 사전지식이 전무할 뿐 아니라, 법령검색을 지원해도 해당 조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 특히,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요건 및 재계약 기준, 보조금 지원근거 등에 대한 근거법령 문의가 많으나, 대부분 빈곤노년층으로 온라인을 통한 법령검색에 어려움 호소

- '21년 3개 분야(다문화·빈곤노인·장애인) 생활법령책자 제작하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주민자치센터, 장애인지원센터 등을 통하여 배부
- 단순한 법령의 일방적 나열이 아닌, 주제별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근거법령조문, 판례·해석례의 해설, FAQ 등으로 구성하여, 실생활의 법률분쟁, 민원, 허가, 신청 등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제작

◀ '22년도 예산요구액 ▶

· 수요자 맞춤형 생활법령 책자 발간·배포: 136백만원

- 생활법령 책자 인쇄(210-01): 108백만원[15,000원x2,400부x3개 주제]
- 생활법령 콘텐츠 편집·보완 용역(210-14): 21백만원[7백만원x3개 주제]
- 생활법령 책자 배포 공공요금(210-02): 7백만원(7,200부x1,000원)

◆ 수요자 맞춤형 생활법령 책자 발간·배포 필요성 ◆

◀ 정보취약계층의 법령접근성 수단 개발에 대한 외부기관 지적 ▶

※ 2016년,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결과

-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회적 약자(노인, 장애인 등)도 쉽게 법령정보를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정보서비스 개선 필요

※ 2017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

- 법제처는 저소득층,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게 법령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보다 다양한 정보제공 수단을 개발할 것

- 대부분의 법령 및 정책정보가 인터넷, 모바일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제공됨에 따라, 노령층, 저소득층 등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이 발생
- 국민이 쉽게 법령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주제별 맞춤형 생활법령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노년층, 저소득층,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은 여전히 법령 접근 및 이해의 사각지대에 위치
- 이러한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생활에 꼭 필요한 법령정보를 책자로 발간·배포하여 오프라인을 통한 생활법령정보 접근성 제고 필요
- 다문화, 빈곤노인, 장애인이 생활 속에서 필요할 수 있는 법령정보를 책자로 제작하여,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주민자치센터 등을 통하여 배부
- * (예시) 다문화가족 관련 책자는 출생신고, 입학특례, 임대주택 입주, 가정폭력, 근로계약, 국적취득 관련 법령을 책자에 담아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취업지원센터 등 배포

□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년도	금 액		산 출 근 거
'21*	'20~'24(당초)	1,047	- 기타직보수 1명*27백만원 = 27백만원 - 생활법령정보 블로그 기자단 6명*12월*0.1백만원 = 7백만원 - 생활법령정보 일반용역비 973백만원 · 국문 콘텐츠 개발 · 업데이트 18명*3.04백만원*12월*1.1= 720백만원 · 외국어 콘텐츠 개발(반일제) 2명*2.65백만원*12월*1.1= 70백만원 · 다국어 콘텐츠 번역 및 업데이트 28개*5백만원 =140백만원 · 생활법령정보홍보 온 · 오프라인 광고 4회*10.5백만원= 42백만원 - 생활법령 세미나 개최 2회*5.4백만원 = 11백만원 - 기타 일반수용비 등 29백만원
	'21~'25(요구)	1,047	- 기타직보수 1명*27백만원 = 27백만원 - 생활법령정보 블로그 기자단 6명*12월*0.1백만원 = 7백만원 - 생활법령정보 일반용역비 973백만원 · 국문 콘텐츠 개발 · 업데이트 18명*3.04백만원*12월*1.1= 720백만원 · 외국어 콘텐츠 개발(반일제) 2명*2.65백만원*12월*1.1= 70백만원 · 다국어 콘텐츠 번역 및 업데이트 28개*5백만원 =140백만원 · 생활법령정보홍보 온 · 오프라인 광고 4회*10.5백만원= 42백만원 - 생활법령 세미나 개최 2회*5.4백만원 = 11백만원 - 기타 일반수용비 등 29백만원
'22	'20~'24(당초)	1,099	- 기타직보수 1명*27백만원 = 27백만원 - 생활법령정보 블로그 기자단 6명*12월*0.1백만원 = 7백만원 - 생활법령정보 일반용역비 1,025백만원 · 국문 콘텐츠 개발 · 업데이트 18명*3.04백만원*12월*1.1= 720백만원 · 외국어 콘텐츠 개발(전일제) 2명*3.65백만원*12월*1.1= 96백만원 · 다국어 콘텐츠 번역 및 업데이트 28개*5백만원 =140백만원 · 생활법령정보홍보 온 · 오프라인 광고 4회*12.2백만원= 49백만원 · 다국어 콘텐츠 온라인 홍보(SNS이벤트) 4회*5백만원=20백만원 - 생활법령 세미나 개최 2회*5.4백만원 = 11백만원 - 기타 일반수용비 등 29백만원
	'21~'25(요구)	1,510	- 기타직보수 1명*27백만원 = 27백만원 - 생활법령 책자 발간 · 배포: 136백만원 - 생활법령정보 블로그 기자단 6명*12월*0.1백만원 = 7백만원 - 생활법령정보 일반용역비 1,300백만원 · 콘텐츠 개발 · 업데이트 18명*3.04백만원*12월*1.3*1.1= 936백만원 · 다국어 콘텐츠 개발(반일제) 4명*2.6백만원*12월*1.3*1.1= 182백만원 · 다국어 콘텐츠 번역 및 업데이트 28개*5백만원 =140백만원 · 생활법령정보홍보 온 · 오프라인 광고 4회*10.5백만원= 42백만원 - 생활법령 세미나 개최 2회*5.4백만원 = 11백만원 - 기타 일반수용비 등 29백만원
'23	'20~'24(당초)	1,078	- 기타직보수 1명*27백만원 = 27백만원 - 생활법령정보 블로그 기자단 6명*12월*0.1백만원 = 7백만원 - 생활법령정보 일반용역비 1,004백만원 · 국문 콘텐츠 개발 · 업데이트 18명*3.04백만원*12월*1.1= 720백만원 · 외국어 콘텐츠 개발(전일제) 2명*3.65백만원*12월*1.1= 96백만원

			· 다국어 콘텐츠 번역 및 업데이트 28개*5백만원 =140백만원 · 생활법령정보홍보 온·오프라인 광고 3회*13백만원= 39백만원 · 다국어 콘텐츠 온라인 홍보(SNS이벤트) 3회*3백만원=9백만원 - 생활법령 세미나 개최 2회*5.4백만원 = 11백만원 - 기타 일반수용비 등 29백만원
	'21~'25(요구)	1,985	- 기타직보수 1명*27백만원 = 27백만원 - 생활법령 책자 발간·배포: 136백만원 - 생활법령정보 블로그 기자단 6명*12월*0.1백만원 = 7백만원 - 생활법령정보 일반용역비 1,775백만원 · 콘텐츠 개발·업데이트 18명*3.8백만원*12월*1.3*1.1= 1,173백만원 · 법령자문·상담 서비스 2명*4.10백만원*12월*1.3*1.1= 141백만원 · 다국어 콘텐츠 개발(전일제) 4명*3.65백만원*12월*1.3*1.1= 251백만원 · 다국어 콘텐츠 번역 및 업데이트 28개*5백만원 =140백만원 · 생활법령정보홍보 온·오프라인 광고 4회*10.5백만원= 42백만원 · 생활법령정보 대국민 설문조사 2회*5백만원=10백만원 · 다국어 콘텐츠 온라인 홍보(SNS이벤트) 6회*3백만원=18백만원 - 생활법령 세미나 개최 2회*5.4백만원 = 11백만원 - 기타 일반수용비 등 29백만원
'24	'20~'24(당초)	1,089	- 기타직보수 1명*27백만원 = 27백만원 - 생활법령정보 블로그 기자단 6명*12월*0.1백만원 = 7백만원 - 생활법령정보 일반용역비 1,015백만원 · 국문 콘텐츠 개발·업데이트 18명*3.04백만원*12월*1.1= 720백만원 · 외국어 콘텐츠 개발(전일제) 2명*3.65백만원*12월*1.1= 96백만원 · 다국어 콘텐츠 번역 및 업데이트 28개*5백만원 =140백만원 · 생활법령정보홍보 온·오프라인 광고 3회*13백만원= 39백만원 · 다국어 콘텐츠 온라인 홍보(SNS이벤트) 4회*5백만원=20백만원 - 생활법령 세미나 개최 2회*5.4백만원 = 11백만원 - 기타 일반수용비 등 29백만원
	'21~'25(요구)	2,239	- 기타직보수 1명*27백만원 = 27백만원 - 생활법령 책자 발간·배포: 136백만원 - 생활법령정보 블로그 기자단 6명*12월*0.1백만원 = 7백만원 - 생활법령정보 일반용역비 2,029백만원 · 콘텐츠 개발·업데이트 18명*4.2백만원*12월*1.3*1.1= 1,297백만원 · 법령자문·상담 서비스 2명*4.10백만원*12월*1.3*1.1= 141백만원 · 다국어 콘텐츠 개발(전일제) 6명*3.7백만원*12월*1.3*1.1= 381백만원 · 다국어 콘텐츠 번역 및 업데이트 28개*5백만원 =140백만원 · 생활법령정보홍보 온·오프라인 광고 4회*10.5백만원= 42백만원 · 생활법령정보 대국민 설문조사 2회*5백만원=10백만원 · 다국어 콘텐츠 온라인 홍보(SNS이벤트) 6회*3백만원=18백만원 - 생활법령 세미나 개최 2회*5.4백만원 = 11백만원 - 기타 일반수용비 등 29백만원
'25	'20~'24(요구)	2,530	- 기타직보수 1명*27백만원 = 27백만원 - 생활법령 책자 발간·배포: 136백만원 - 생활법령정보 블로그 기자단 6명*12월*0.1백만원 = 7백만원 - 생활법령정보 일반용역비 2,320백만원 · 콘텐츠 개발·업데이트 18명*4.6백만원*12월*1.3*1.1= 1,420백만원 · 법령자문·상담 서비스 2명*4.10백만원*12월*1.3*1.1= 141백만원 · 다국어 콘텐츠 개발(전일제) 8명*4.0백만원*12월*1.3*1.1= 549백만원

			· 다국어 콘텐츠 번역 및 업데이트 28개*5백만원 =140백만원 · 생활법령정보홍보 온·오프라인 광고 4회*10.5백만원= 42백만원 · 생활법령정보 대국민 설문조사 2회*5백만원=10백만원 · 다국어 콘텐츠 온라인 홍보(SNS이벤트) 6회*3백만원=18백만원 - 생활법령 세미나 개최 2회*5백만원 = 11백만원 - 기타 일반수용비 등 29백만원
--	--	--	--

□ 고려사항

○ 최근 3년간('18~'20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단위 : 백만원)

년 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8	983	-	△20	963	953	-	10
'19	955	-	-	955	936	-	19
'20	1,046	-	-	1,046	1,013	-	33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8년, 국회 결산 검토보고서) 저소득층,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게 법령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보다 다양한 정보제공 수단을 개발할 필요
- ('18년, 국회 예산 검토보고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콘텐츠 명칭이 유사한 경우가 많아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불필요한 메뉴 간 소화 필요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④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발간 사업(재량지출)

(담당자: 4급 정승택, 044-200-6781,
8급 변정현, 044-200-6791)

□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국정과제	해당 없음
사업내용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추록 발간 및 종이법령집 대본 제작 - 법령집의 주기적 추록 발간(연 12회)을 통해 법령정보의 현행성 유지 - 발행 후 20년이 경과한 종이법령집 대본을 신규로 제작하여 법령집의 정확성·현행성 유지 및 활용성 제고 - CD 형식의 전자 현행법령집을 발간·배부하여 법령상 법령집 편찬·발행의 의무를 수행하고, 전쟁, 자연재해 및 인터넷 마비 등 국가위기상황에 대응
사업기간	‘22년 ~ 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및 민간위탁
사업시행주체	법제처 및 민간위탁자

□ 변동내역 및 변동요인

< 대한민국현행법령집 발간사업 지출변동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결산	‘21예산	‘22	‘23	‘24	‘25	연평균 증가율
‘20~‘24계획 (증가율)	-	- (-)	- (-)	- (-)	- (-)		
‘21~‘25요구 (증가율)			2,105 (순증)	388 (△81.6%)	300 (△22.7%)	325 (8.3%)	순증

○ 세부 변동내역 및 변동요인

•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발간 사업 소요예산(신규, 중 2,105백만원)

○ 일반용역비(210-14): 2,089백만원 증액

〈'22년도 예산요구액〉

- 법령집 추록 발행·보급비: 240백만원
- 추록 편집 및 발행 인력 4명*3.5백만원*12월*1.3*1.1=240백만원
- 종이법령집 대본 제작비: 1,865백만원
- 32.93(대본원가, 재료·인쇄·제본비 등)*78,000면*720부= 1,849백만원
- 133만원(70권, 72,000면 기준)*12월= 16백만원

◆ 법령집 발행 관련 예산 신설 필요성 ◆

○ 현행 법령집 발행의 법적 근거 및 그간의 현황

- (법령집 추록 발행 의무) 「법령 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법제처장은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대본 및 추록을 편찬하여 발행·보급하여야 하고,
 - 「법령 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법제처장은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발행자로 (재)한국법령정보원을 지정하여 현행 법령집 추록을 발행·판매 중
 - (비용 부담) 법률에 따라 법제처장이 (재)한국법령정보원을 법령집 발행 대행자로 지정함에 따라, 대행에 따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여야 하나,
 - 국가 예산에 계상되지 못하여 (재)한국법령정보원의 자체 예산으로 법령집 추록 발간 인력 운용 및 출판·보급 비용 부담, 판매비용으로 충당
 - (발행 중단 위기)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한 법령정보 제공 확산으로 종이 법령집 수요가 급감함에 따라 추록 발간부수가 매년 급격히 감소
 - 법령집 추록 발행에 따른 손실이 누적되고 있으나, 예산이 전혀 보조되지 않아, 현행법령집 발간 사업 유지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
- ※ '2019년 12월 기준 3억 2,600만원 적자, 누적액 약 26억원

○ 법령집 추록 발행 관련 예산 지원의 필요성

- 현행법령집 발간사업은 '63년 법제처에서 최초 발행 이후 법령편찬보급회('81~'90.6) 및 한국법제연구원('90.7.~'11.6)을 거쳐 한국법령정보원('11. 7.~현재)으로 그 발행·대행자가 변경되며 이어져 온 역사적 보존가치를 가진 중요사업
- 실물(종이) 법령집을 지속적으로 발행·보존하는 것은 법치주의 수호를 위한 국가적 책무 및 역사적 사명이자,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준수하는

것으로 수익성 여부에 관계없이 당위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

- 현행법령집은 1963년부터 현재까지 정부가 편찬하는 유일의 종합법령집으로서 국내에서 가장 정확한 법령정보의 집합체이므로 역사적 보존 및 활용 가치가 뛰어나.
- 현행법령집은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비상사태 대비 등과 같은 사유로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입법·사법·헌법기관에 항상 비치할 필요가 있음.
- 지진, 정전, 사이버 테러 등 인터넷 사용이 중단되는 재난 및 비상상황에 적극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발생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서비스 장애 등에 대한 대비도 시급
 - * 최근 KT 아현지사 화재 사고('18. 11. 25)와 같이 인근 관공서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민업무 차질 등 국민 불편 초래
 - ** '19년 11월 이후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비스 장애(서비스 불가/검색속도 저하 등) 총 4번 발생
- 또한, 분단국가로서 전쟁의 위험이 상존한 상황에서 종이 법령집을 발행·보존하는 것은 전시상황의 대비 및 전후복구에 필수불가결한 대비책임.
- (해외사례) 미국·영국·독일·중국 및 일본 등에서도 국가기관에서 국가 예산으로 현행 법령집 발행 사업을 지속하면서 법령집을 역사적으로 보존함.

국가	해외 사례
미국	○ 하원에서 회기별 법령집인 United States Code(U.S.C.) 발간 ○ 정부인쇄국에서 주제별 법령집인 US Statutes at Large(US Codes) 매 6년마다 개정판, 매 1년마다 증보판 발행·보급
일본	○ 의회 법제국에서 편집한 현행법령인 現行法規總覽 발간(총 138책) ○ 법무성이 교세이(민간출판사)에 의뢰하여 現行日本法規 발행
독일	○ 연방법무부가 발간하는 공식적인 법령관보인 「연방법령관보」 및 총 36권의 가제식 법령집인 「Das Deutsche Bundesrecht」 발행
영국	○ 정부간행물출판국(HMSO)에서 편찬한 가제식 법령집(총 54권)인 「Halsbury's Statutes of England and Wales」을 발간
중국	○ 전인대 상무위원회 판공청에서 헌법 및 법률 법령집을, 국무원 법제공판실에서 명령·행정법규집을 발간 중

◆ 소요예산의 산정 ◆

① 신판 대본 발간

- 현행법령집은 대본을 중심으로 매월 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한 추록을 가제하여 법령집의 현행성을 유지·관리하고 있으나,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중 대본을 갖추지 않고 있는 기관이 상당수 존재하여 신판 대본을 발간하여 각 기관에 배포할 필요
 - * '20년 12월말 기준 중앙행정기관 중 13개 기관만 보유 중(보유율 24%), 지방자치단체(기초·광역포함) 중 67개 기관만 보유(보유율 28%)

- 또한, 기존 법령집 대본은 '89년에 발간한 이후 개정판 대본의 발행 無
 - 20여년 동안 법령 제·개정사항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한 권 (바인더)당 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한 추록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신판 대본 발간이 시급한 상황**
 - 새롭게 발행할 법령집(대본)은 법령목록 및 내용 등을 주제별로 사용자가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분류하고 재구성하는 등 이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법령집을 기획 및 편집하여 출판할 계획
 - 현재 대본보다 분량을 다소 축소(조약 및 서식 등 삭제)하여 필요 법령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하여 발행할 계획으로, 예산사업화를 통해 전체 정부기관 및 입법·사법기관에 보급할 필요
- * (종전 대본 1세트) 총 82권 97,000페이지 → (신규 대본) 총 70권 78,000페이지

② 추록 발간

- 현행법령집 대본을 보관·유지 중인 기관에 법령 제·개정 사항을 추록 가제로 발간하여 주기적(월 1회)으로 반영·갱신 중
- 신판 대본 발행 전까지 추록 발간을 지속하여 현행 법령집의 현행성을 유지·관리할 필요

〈신판 대본 및 추록 보급부수 산정기준〉

-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 입법기관 및 사법기관 등 독립된 기관에 **최소 2부씩은 비치할 필요가 있어 총 360개 기관에 720부 발행을 기준으로 산정**
- [참고] 전시법령의 경우에도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법령집을 각 기관 실·국별로 1부 이상 보유(중앙·지자체 포함 총 3,200부를 발간하여 배포)하도록 하고 있음

□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년도	금 액		산 출 근 거
'21*	'20~'24(당초)	-	
	'21~'25(요구)	-	
'22	'20~'24(당초)	-	
	'21~'25(요구)	2,105	- 법령집 추록 발행 · 보급비 - 추록 편집 및 발행 인력 4명*3.5백만원*12월*1.3*1.1=240백만원 - 법령집 대본 제작비: 1,849백만원 - 32.93(대본원가, 재료·인쇄·제본비 등)×78,000면×720부= 1,849백만원 - 133만원(70권, 72,000면 기준)×12월= 16백만원
'23	'20~'24(당초)	-	
	'21~'25(요구)	388	- 법령집 추록 발행 · 보급비 - 추록 편집 및 발행 인력 4명*3.8백만원*12월*1.3*1.1=260백만원 - 법령CD 제작비: 128백만원 - 29,746원(제조원가, 재료·노무비·경비 등)×360개×12월= 128백만원
'24	'20~'24(당초)	-	
	'21~'25(요구)	300	- 법령집 추록 발행 · 보급비: 300백만원 - 추록 편집 및 발행 인력 4명*3.5백만원*12월*1.3*1.1=240백만원 - 법령CD 업데이트 인력 1명*3.5백만원*12월*1.3*1.1=60백만원
'25	'20~'24(요구)	325	- 법령집 추록 발행 · 보급비: 325백만원 - 추록 편집 및 발행 인력 4명*3.8백만원*12월*1.3*1.1=260백만원 - 법령CD 업데이트 인력 1명*3.8백만원*12월*1.3*1.1=65백만원

□ 고려사항

- 최근 3년간('16~'18년) 이 · 전용, 이월 · 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미국) 하원에서 회기별 법령집인 United States Code(U.S.C.) 발간, 정부인쇄국(U.S. Government Printing Office)에서 주제별 법령집인 US Statutes at Large(US Codes) 매 6년마다 개정판, 매 1년마다 증보판 발행 · 보급
 - (일본) 중의원 및 참의원의 법제국에서 편집한 현행법령인 現行法規總覽 발간(총 138책)하고, 법무성이 교세이(민간출판사)에 의뢰하여 現行日本法規 발행
 - (독일) 연방법무부가 발간하는 공식적인 법령관보인 「연방법령관보」 및 총 36권의 가제식 법령집인 「Das Deutsche Bundesrecht」 발행
 - (영국) 정부간행물출판국(HMSO)에서 편찬한 가제식 법령집(총 54권)인 「Halsbury's Statutes of England and Wales」 을 발간
 -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 판공청에서 헌법 및 법률 법령집을, 국무원 법제공판실에서 명령 · 행정법규집을 발간 중

⑤ 법령심사지원 사업(재량지출)

(담당자: 6급 이철규, 044-200-6564, 6급 최인숙, 044-200-6834,
6급 권정아, 044-200-6596)

□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국정과제	해당없음
사업내용	· 전시법령 및 국회제출 법률안 인쇄, 법제업무편람 발간, 국정과제 관련 입법지원 등 입법절차 전반에 걸쳐 정부의 원활한 법제업무 수행 지원 · 법령체계 간에 조화를 이루고 정부 정책이 입법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법령을 입안·심사할 때 필요한 입법 기준을 마련 · 입법내용의 전문화, 다수 부처 관련 융·복합 법령이나 이해관계가 복잡한 쟁점 법령안의 증대 등으로 각 부처의 입안단계에서부터 전문적 법제 지원에 대한 수요가 커짐에 따라 정책을 구체화하는 법령안의 입안과 법리적 검토를 지원하기 위한 법령입안지원제도 운영 ·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배포 및 교육 등 적극행정 법제 전파 · 법제업무평가 실시 등 환류·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법제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부처 친화적인 법제업무 환경 구축
사업기간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법제처

□ 변동내역 및 변동요인

<법령심사지원 사업 지출변동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결산 ¹⁾	'21예산	'22	'23	'24	'25	연평균 증가율
'20~'24계획 (증가율)	390	370 (△16.7)	388 (4.9)	381 (△1.8)	385 (1.0)		△3.5
'21~'25요구 (증가율)		370	733 (98.1)	536 (△26.9)	436 (18.7)	400 (△8.3)	2.0

□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년도	금 액		산 출 근 거
'21*	'20~'24(당초)	370	- 법령심사지원사업: 100백만원 · 국회제출법률안 및 전시법령안 등 인쇄 280건×0.075백만원 · 법제업무편람 인쇄 1,000부×0.015백만원 · 정부입법계획 인쇄 500부×0.003백만원×2건 · 법령심사지원 활동 사업추진비 12월×2.9백만원 · 법령심사지원 기타경비 12월×2.2백만원 - 법령입법지원사업: 212백만원 · 지원 인력 보수 3인 × 37백만원 · 법령입안심사기준 책자 발간 1,770부×0.011백만원 · 법령입법지원 전문가 자문료 34회×0.6백만원 · 법령입법지원 활동 사업추진비 12월×0.9백만원 · 국외출장 1회×8.7백만원 · 법령입법지원 기타경비 12월×3.5백만원 - 법제업무 역량강화: 58백만원 · 적극행정법제 가이드라인 인쇄 2,000부×0.015백만원 · 법제업무평가위원회 2회×3.5백만원 · 법무담당관 적극행정 법제 간담회 1회×6백만원 · 법제업무평가 및 적극행정 법제 우수기관 포상금 1회×12백만원 · 법제업무역량강화 기타경비 3백만원
	'21~'25(요구)	370	- 법령심사지원사업: 100백만원 · 국회제출법률안 및 전시법령안 등 인쇄 280건×0.075백만원 · 법제업무편람 인쇄 1,000부×0.015백만원 · 정부입법계획 인쇄 500부×0.003백만원×2건 · 법령심사지원 활동 사업추진비 12월×2.9백만원 · 법령심사지원 기타경비 12월×2.2백만원 - 법령입법지원사업: 212백만원 · 지원 인력 보수 3인 × 37백만원 · 법령입안심사기준 책자 발간 1,770부×0.011백만원

			· 법령입법지원 전문가 자문료 34회×0.6백만원 · 법령입법지원 활동 사업추진비 12월×0.9백만원 · 국외출장 1회×8.7백만원 · 법령입법지원 기타경비 12월×3.5백만원 - 법제업무 역량강화: 58백만원 · 적극행정법제 가이드라인 인쇄 2,000부×0.015백만원 · 법제업무평가위원회 2회×3.5백만원 · 법무담당관 적극행정 법제 간담회 1회×6백만원 · 법제업무평가 및 적극행정 법제 우수기관 포상금 1회×12백만원 · 법제업무역량강화 기타경비 3백만원
'22	'20~'24(당초)	388	- 법령심사지원사업: 97백만원 · 국회제출법률안 및 전시법령안 등 인쇄 270건×0.075백만원 · 법제업무편람 인쇄 900부×0.015백만원 · 정부입법계획 인쇄 700부×0.003백만원×2건 · 법령심사지원 활동 사업추진비 12월×3.15백만원 · 법령심사지원 기타경비 12월×1.75백만원 - 법령입법지원사업: 212백만원 · 지원 인력 보수 3인 × 37백만원 · 법령입안심사기준 책자 발간 1,770부×0.011백만원 · 법령입법지원 전문가 자문료 34회×0.6백만원 · 법령입법지원 활동 사업추진비 12월×0.9백만원 · 국외출장 1회×8.7백만원 · 법령입법지원 기타경비 12월×3.5백만원 - 법제업무 역량강화: 79백만원 · 적극행정법제 가이드라인 인쇄 2,500부×0.015백만원 · 법제업무평가위원회 2회 = 6백만원 · 법무담당관 적극행정 법제교육 간담회 1회 = 6백만원 · 법제업무평가 및 적극행정 법제 우수기관 포상금 1회×17백만원 · 법제업무평가 역량강화 관련 사업추진비 12월×0.5백만원 · 법제업무역량강화 기타경비 12월×0.5백만원
	'21~'25(요구)	733	- 법령심사지원사업: 133백만원 · 국회제출법률안 및 전시법령안 등 인쇄 280건×0.075백만원 · 법제업무편람 인쇄 1,000부×0.015백만원 · 정부입법계획 인쇄 500부×0.003백만원×2건 · 법령심사지원 활동 사업추진비 12월×2.9백만원 · 법령심사지원 기타경비 12월×2.2백만원 · 공무원 근로자 신규채용 경비 12월×2.75백만원 - 법령입법지원사업: 519백만원 · 지원 인력 보수 3인 × 37백만원 · 법령입안심사기준 책자 발간 1,700부×0.015백만원 · 법령입법지원 전문가 자문료 34회×0.6백만원 · 법령입법지원 활동 사업추진비 12월×0.9백만원 · 국외출장 1회×8.7백만원 · 법령입법지원 기타경비 12월×3.5백만원 · 법령입안·심사기준 고도화를 위한 연구용역 3건×100백만원 - 법제업무 역량강화: 81백만원 · 적극행정법제 가이드라인 인쇄 2,000부×0.015백만원

			· 법제업무평가위원회 2회×3.5백만원 · 법무담당관 적극행정 법제 간담회 1회×6백만원 · 법제업무평가 및 적극행정 법제 우수기관 포상금 1회×29백만원 · 법제업무평가 역량강화 관련 사업추진비 12월×0.5백만원 · 법제업무역량강화 기타경비 3백만원
'23	'20~'24(당초)	381	- 법령심사지원사업: 88백만원 · 국회제출법률안 및 전시법령안 등 인쇄 270건×0.075백만원 · 법제업무편람 인쇄 900부×0.015백만원 · 정부입법계획 인쇄 700부×0.003백만원×2건 · 법령심사지원 활동 사업추진비 12월×3.15백만원 · 법령심사지원 기타경비 12월×1백만원 - 법령입법지원사업: 212백만원 · 지원 인력 보수 3인 × 37백만원 · 법령입안심사기준 책자 발간 1,770부×0.011백만원 · 법령입법지원 전문가 자문료 34회×0.6백만원 · 법령입법지원 활동 사업추진비 12월×0.9백만원 · 국외출장 1회×8.7백만원 · 법령입법지원 기타경비 12월×3.5백만원 - 법제업무 역량강화: 81백만원 · 적극행정법제 가이드라인 인쇄 2,500부×0.015백만원 · 법제업무평가위원회 2회 = 6백만원 · 법무담당관 적극행정 법제교육 간담회 1회 = 6백만원 · 법제업무평가 및 적극행정 법제 우수기관 포상금 1회×19백만원 · 법제업무평가 역량강화 관련 사업추진비 12월×0.5백만원 · 법제업무역량강화 기타경비 12월×0.5백만원
	'21~'25(요구)	536	- 법령심사지원사업: 136백만원 · 국회제출법률안 및 전시법령안 등 인쇄 280건×0.075백만원 · 법제업무편람 인쇄 1,000부×0.015백만원 · 정부입법계획 인쇄 500부×0.003백만원×2건 · 법령심사지원 활동 사업추진비 12월×2.9백만원 · 법령심사지원 기타경비 12월×2.2백만원 · 공무원 근로자 신규채용 경비 12월×3백만원 - 법령입법지원사업: 319백만원 · 지원 인력 보수 3인 × 37백만원 · 법령입안심사기준 책자 발간 1,700부×0.015백만원 · 법령입법지원 전문가 자문료 34회×0.6백만원 · 법령입법지원 활동 사업추진비 12월×0.9백만원 · 국외출장 1회×8.7백만원 · 법령입법지원 기타경비 12월×3.5백만원 · 법령입안·심사기준 고도화를 위한 연구용역 1건×100백만원 - 법제업무 역량강화: 81백만원 · 적극행정법제 가이드라인 인쇄 2,000부×0.015백만원 · 법제업무평가위원회 2회×3.5백만원 · 법무담당관 적극행정 법제 간담회 1회×6백만원 · 법제업무평가 및 적극행정 법제 우수기관 포상금 1회×29백만원 · 법제업무평가 역량강화 관련 사업추진비 12월×0.5백만원 · 법제업무역량강화 기타경비 3백만원

'24	'20~'24(당초)	385	- 법령심사지원사업: 88백만원 · 국회제출법률안 및 전시법령안 등 인쇄 270건×0.075백만원 · 법제업무편람 인쇄 900부×0.015백만원 · 정부입법계획 인쇄 700부×0.003백만원×2건 · 법령심사지원 활동 사업추진비 12월×3.15백만원 · 법령심사지원 기타경비 12월×1백만원 - 법령입법지원사업: 212백만원 · 지원 인력 보수 3인 × 37백만원 · 법령입안심사기준 책자 발간 1,770부×0.011백만원 · 법령입법지원 전문가 자문료 34회×0.6백만원 · 법령입법지원 활동 사업추진비 12월×0.9백만원 · 국외출장 1회×8.7백만원 · 법령입법지원 기타경비 12월×3.5백만원 - 법제업무 역량강화: 85백만원 · 적극행정법제 가이드라인 인쇄 2,500부×0.015백만원 · 법제업무평가위원회 2회 = 6백만원 · 법무담당관 적극행정 법제교육 간담회 1회 = 6백만원 · 법제업무평가 및 적극행정 법제 우수기관 포상금 1회×23백만원 · 법제업무평가 역량강화 관련 사업추진비 12월×0.5백만원 · 법제업무역량강화 기타경비 12월×0.5백만원
	'21~'25(요구)	436	- 법령심사지원사업: 136백만원 · 국회제출법률안 및 전시법령안 등 인쇄 280건×0.075백만원 · 법제업무편람 인쇄 1,000부×0.015백만원 · 정부입법계획 인쇄 500부×0.003백만원×2건 · 법령심사지원 활동 사업추진비 12월×2.9백만원 · 법령심사지원 기타경비 12월×2.2백만원 · 공무원 근로자 신규채용 경비 12월×3백만원 - 법령입법지원사업: 219백만원 · 지원 인력 보수 3인 × 37백만원 · 법령입안심사기준 책자 발간 1,700부×0.015백만원 · 법령입법지원 전문가 자문료 34회×0.6백만원 · 법령입법지원 활동 사업추진비 12월×0.9백만원 · 국외출장 1회×8.7백만원 · 법령입법지원 기타경비 12월×3.5백만원 - 법제업무 역량강화: 81백만원 · 적극행정법제 가이드라인 인쇄 2,000부×0.015백만원 · 법제업무평가위원회 2회×3.5백만원 · 법무담당관 적극행정 법제 간담회 1회×6백만원 · 법제업무평가 및 적극행정 법제 우수기관 포상금 1회×29백만원 · 법제업무평가 역량강화 관련 사업추진비 12월×0.5백만원 · 법제업무역량강화 기타경비 3백만원
	'25 '20~'24(요구)	400	- 법령심사지원사업: 100백만원 · 국회제출법률안 및 전시법령안 등 인쇄 280건×0.075백만원 · 법제업무편람 인쇄 1,000부×0.015백만원 · 정부입법계획 인쇄 500부×0.003백만원×2건 · 법령심사지원 활동 사업추진비 12월×2.9백만원 · 법령심사지원 기타경비 12월×2.2백만원 · 공무원 근로자 신규채용 경비 12월×3백만원

			- 법령입법지원사업: 219백만원 · 지원 인력 보수 3인 × 37백만원 · 법령입안심사기준 책자 발간 1,770부×0.011백만원 · 법령입법지원 전문가 자문료 34회×0.6백만원 · 법령입법지원 활동 사업추진비 12월×0.9백만원 · 국외출장 1회×8.7백만원 · 법령입법지원 기타경비 12월×3.5백만원 - 법제업무 역량강화: 81백만원 · 적극행정법제 가이드라인 인쇄 2,000부×0.015백만원 · 법제업무평가위원회 2회×3.5백만원 · 법무담당관 적극행정 법제 간담회 1회×6백만원 · 법제업무평가 및 적극행정 법제 우수기관 포상금 1회×29백만원 · 법제업무평가 역량강화 관련 사업추진비 12월×0.5백만원 · 법제업무역량강화 기타경비 3백만원
--	--	--	--

□ 고려사항

○ 최근 3년간('17~'19년) 이 · 전용, 이월 · 불용실적

(단위 : 백만원)

년 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 · 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8	389	-	△40	349	332	-	17
'19	300	-	20	320	301	-	19
'20	444	-	-	444	390	-	54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법령심사지원 사업

연도	외부기관	지적사항	조치사항
2020년	국회 (‘19회계 연도 결산)	법률안 제출시기 조정 및 제출계획의 이행률 제고 필요	2021년도 법제업무평가 시 법률안 제 출 시기 및 제출계획의 이행률을 준 수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개선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겠음.

- 법령입법지원 사업

연도	외부기관	지적사항	조치사항
2018년	국회 (‘19년 예산 법사위 및 예결위)	법령 입안 관련 외부 위탁으로 법령 소관 부처의 연구용역비가 과다 지출되는 상황임. 법제처는 법제 관련 전문기관으로 법령입안지원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하지만, 입안지원 사업 담당 인력은 1명에	법령입안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움. 앞으로 안전 검토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계약직 연구원을 증원할 계획임.

연도	외부기관	지적사항	조치사항
		불과하여 법령입안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법령입안지원 사업 인건비 114백만원 증액 요구	
	국회 (‘19년 예산 법사위)	법령입안지원 의견 반영 여부에 대한 관리 필요	법령입안지원 의견 반영 여부를 부처 협의 및 심사 등 입법 단계별로 확인하여 관리할 예정임.
	국회 (‘19년 예산 법사위 및 예결위)	(법사위)기존의 8음절 이상 법률 제명에 대한 약칭 사업이 상당부분 완료됨에 따라 2019년도 법률 제명 약칭 사업은 2019년도에 제정되는 법률을 위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위원회 서면회의 개최 횟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2019년도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 운영 관련 예산은 과다 편성된 측면이 있다고 보이므로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예결위)동 사업은 기존 사업이 상당 부분 완료됨에 따라 신규 제정법 수요만 남은 상황이므로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이므로 사업예산을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음	법률 제명 약칭 사업 관련 2019년 예산 전액 삭감(12백만원)
2019년	국회 (2018회계 연도결산심사)	(예결위) 법제처는 입안지원과 법령심사와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입안 지원 절차와 조직을 재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법령입안지원은 부처 입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와 구분됨. 다만, 입안과 심사 간 조직 연계를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⑥ 법제정비 사업(재량지출)

(담당자: 6급 성예정, 044-200-6575)

(담당자: 6급 임현규, 044-200-6758)

(담당자: 7급 김민정, 044-200-6761)

(담당자: 6급 최혜옥, 044-200-6758)

□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국정과제	· 해당없음
사업내용	(법령정비) · 현실에 맞지 않거나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국민과 기업 등에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 · 국민 참여에 기반한 법령정비를 통하여 법제업무의 민주성과 현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참여 입법제도 운영 (자치법규 입안 및 정ب지원) · 지방자치단체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 하고, 법령-조례-규칙 간 위임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자치 법규 입안 및 정비를 지원 ·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의 품질을 제고하고 국가 법령체계와의 조화를 실현하여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 · 자치법규 조례 제정·개정안을 대상으로 상위법령 위반 및 조문 체계 등 종합적인 입법컨설팅 제공 · 필수조례 중에서 내용의 중요성·자치입법모델로서의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실정에 맞는 맞춤형 입법 컨설팅 지원 · 중앙행정기관에서 마련한 참고 자치법규안에 대해 상위법령 위반 등을 종합적 검토·자문함으로써 참고 자치법규안의 상시적인 품질 관리 제고 (알기 쉬운 법제 구축) · 국민이 법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의 용어, 문장, 체계를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정비 ·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하여 어려운 법령용어의 사전 차단 및 사후 정비 실시 ·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를 발굴 하여 각 부처의 정비를 지원 · 제정되거나 전부개정되는 법령안 및 조례안을 검토하여 국민이 알기 쉽도록 정비
사업기간	계속
총사업비 ¹⁾	해당없음
사업규모 ²⁾	해당없음
지원조건 ³⁾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법제처

□ 변동내역 및 변동요인

<법제정비사업 지출변동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결산 ¹⁾	'21예산	'22	'23	'24	'25	연평균 증가율
'20~'24계획 (증가율)	1,425	1,403 (-1.5)	1,473 (5)	1,445 (△1.9)	1,459 (1.0)	-	0.6
'21~'25요구 (증가율)	-	1,383	2,430 (75.7)	3,148 (29.5)	1,855 (△41.1)	1,862 (0.4)	7.7

□ 산출근거

년도	금 액	산 출 근 거
'21*	'20~'24(당초) 1,403	- 법령정비사업 365백만원 · 계약직 3명 × 37백만원=110백만원 ·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 (1회) 61백만원 · 법령정비 사례집 (3,000부) 23백만원 · 국민법제관 등 국민참여입법 관련 회의 등 관련 수당(120회) 23백만원 · 국민법제관 등 국민참여입법 관련 회의 운영 23백만원 · 법령정비 과제 발굴 관련 회의 등 35회 × 1백만원= 35백만원 · 연구용역 3건 × 30백만원=90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지원 및 정비 281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지원 사례집 발간 3회 × 18백만원=54백만원 · 자치법규 업무담당자 워크숍 개최 2회 × 20백만원=40백만원 · 자치법규 발전 세미나 개최 1회 × 14백만원=14백만원 · 자율정비 지원 등 업무관련 회의 25회 × 0.52백만원=13백만원 · 자치법규 전문가 자문수당 24회 × 0.3백만원=7백만원 · 선진국 자치법규 입안지원 사례 조사·연구 7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정비지원 관련 연구용역 100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지원 인력 인건비 17백만원 · 우수 자치입법 지자체 포상금 9백만원 · 기타(특근매식비, 사무용품 등) 20백만원 - 알기 쉬운 법제 구축 사업 757백만 · 알법 연구용역 30백만원 × 6건 =180백만원 · 알법 정비기준책자 8,500원 × 3,294부 =28백만원 · 법령용어 정비위원회 등 4백만원 × 12회 =48백만원 · 국제학술대회 참석 4백만원×2명 =8백만원 · 알법 정비과제 발굴 관리 지원 전문인력 3.3백만원×6명×12월 =238백만원 · 알법 정비과제 관리 등 업무지원 인력 2.78백만원×1명×12월=33.3백만원 · 기타정비(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부처협의 출장 등) 56백만원 · 법령안 새로 쓰기 제도 위탁운영 123.6백만원 · 알법 아이디어 공모제 42백만원

	'21~'25(요구)	1,383	- 법령정비사업 345백만원 · 계약직 3명 × 37백만원=110백만원 ·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 (1회) 61백만원 · 법령정비 사례집 (2,800부) 21백만원 · 국민법제관 등 국민참여입법 관련 회의 등 관련 수당(60회) 12백만원 · 국민법제관 등 국민참여입법 관련 회의 운영 15백만원 · 법령정비 과제 발굴 관련 회의 등 35회 × 1백만원= 35백만원 · 연구용역 3건 × 30백만원=90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지원 및 정비 281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지원 사례집 발간 3회 × 18백만원=54백만원 · 자치법규 업무담당자 워크숍 개최 2회 × 20백만원=40백만원 · 자치법규 발전 세미나 개최 1회 × 14백만원=14백만원 · 자율정비 지원 등 업무관련 회의 25회 × 0.52백만원=13백만원 · 자치법규 전문가 자문수당 24회 × 0.3백만원=7백만원 · 선진국 자치법규 입안지원 사례 조사·연구 7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정비지원 관련 연구용역 100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지원 인력 인건비 17백만원 · 우수 자치입법 지자체 포상금 9백만원 · 기타(특근매식비, 사무용품 등) 20백만원 - 알기 쉬운 법제 구축 사업 757백만 · 알법 연구용역 30백만원 × 6건 =180백만원 · 알법 정비기준책자 8,500원 × 3,294부 =28백만원 · 법령용어 정비위원회 등 4백만원 × 12회 =48백만원 · 국제학술대회 참석 4백만원×2명 =8백만원 · 알법 정비과제 발굴 관리 지원 전문인력 3.3백만원×6명×12월 =238백만원 · 알법 정비과제 관리 등 업무지원 인력 2.78백만원×1명×12월=33.3백만원 · 기타정비(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부처협의 출장 등) 56백만원 · 법령안 새로 쓰기 제도 위탁운영 123.6백만원 · 알법 아이디어 공모제 42백만원
'22	'20~'24(당초)	1,473	- 법령정비사업 365백만원 · 계약직 3명 × 37백만원=110백만원 ·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 (1회) 61백만원 · 법령정비 사례집 (3,000부) 23백만원 · 국민법제관 등 국민참여입법 관련 회의 등 관련 수당(120회) 23백만원 · 국민법제관 등 국민참여입법 관련 회의 운영 23백만원 · 법령정비 과제 발굴 관련 회의 등 35회 × 1백만원= 35백만원 · 연구용역 3건 × 30백만원=90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지원 및 정비 281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지원 사례집 발간 3회 × 18백만원=54백만원 · 자치법규 업무담당자 워크숍 개최 2회 × 20백만원=40백만원 · 자치법규 발전 세미나 개최 1회 × 14백만원=14백만원 · 자율정비 지원 등 업무관련 회의 25회 × 0.52백만원=13백만원 · 자치법규 전문가 자문수당 24회 × 0.3백만원=7백만원 · 선진국 자치법규 입안지원 사례 조사·연구 7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정비지원 관련 연구용역 100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지원 인력 인건비 17백만원

			· 우수 자치입법 지자체 포상금 9백만원 · 기타(특근매식비, 사무용품 등) 20백만원 - 알기 쉬운 법제 구축 사업 827백만 · 알법 연구용역 30백만원 × 6건 =180백만원 · 알법 정비기준책자 8,500원 × 3,294부 =28백만원 · 법령용어 정비위원회 등 4백만원 × 12회 =48백만원 · 국제학술대회 참석 4백만원×2명 =8백만원 · 알법 정비과제 발굴 관리 지원 전문인력 3.3백만원×6명×12월 =238백만원 · 알법 정비과제 관리 등 업무지원 인력 2.78백만원×1명×12월=33.3백만원 · 기타정비(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부처협의 출장 등) 64백만원 · 법령안 새로 쓰기 제도 위탁운영 186백만원 · 알법 아이디어 공모제 42백만원
	'21~'25(요구)	2,430	- 법령정비사업 485백만원 · 계약직 3명 × 37백만원=110백만원 ·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 1회 × 63백만원=63백만원 · 법령정비 사례집 (3,000부) 23백만원 · 국민법제관 등 국민참여입법 관련 회의 등 관련 수당(170회) 28백만원 · 국민법제관 등 국민참여입법 관련 회의 운영 30백만원 · 법령정비 과제 발굴 관련 회의 등 41회 ×1백만원= 41백만원 · 연구용역 (3건 × 30백만원) + (1건 × 100백만원) =190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지원 및 정비 536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지원 사례집 발간 3회 × 18백만원=54백만원 · 자치법규 업무담당자 워크숍 개최 2회 × 20백만원=40백만원 · 자치법규 발전 세미나 개최 1회 × 14백만원=14백만원 · 자율정비 지원 등 업무관련 회의 25회 × 0.52백만원=13백만원 · 자치법규 전문가 자문수당 24회 × 0.3백만원=7백만원 · 선진국 자치법규 입안지원 사례 조사·연구 7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정비지원 관련 연구용역 100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지원 인력 인건비 32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발간 1회 = 40백만원 · 우수 자치입법 지자체 포상금 9백만원 · 위임조례지원시스템 설계 연구용역 200백만원 · 기타(특근매식비, 사무용품 등) 20백만원 - 알기 쉬운 법제 구축 사업 1,409백만 · 알법 연구용역 30백만원 × 15건 =450백만원 · 알법 정비기준책자 8,500원 × 3,294부 =28백만원 · 법령용어 정비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회의 4백만원 × 17회 =68백만원 · 국제학술대회 참석 5백만원×2명 =10백만원 · 알법 정비과제 발굴 관리 지원 전문인력 3.3백만원×6명×12월 =238백만원 · 알법 정비과제 관리 등 업무지원 인력 2.78백만원×1명×12월=35백만원 · 기타정비(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부처협의 출장 등) 60백만원 · 법령안 새로 쓰기 제도 위탁운영 150백만원 · 알법 아이디어 공모제 50백만원 · 권위적·차별적·부정적 용어 정비를 위한 국민만족도 조사

			10백만원 · 알법 사업 DB 구축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160백만원 · 알법 플랫폼 구축 및 앱 구현을 위한 연구용역 150백만원
'23	'20~'24(당초)	1,445	- 법령정비사업 365백만원 · 계약직 3명 × 37백만원=110백만원 ·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 (1회) 61백만원 · 법령정비 사례집 (3,000부) 23백만원 · 국민법제관 등 국민참여입법 관련 회의 등 관련 수당(120회) 23백만원 · 국민법제관 등 국민참여입법 관련 회의 운영 23백만원 · 법령정비 과제 발굴 관련 회의 등 35회 × 1백만원= 35백만원 · 연구용역 3건 × 30백만원=90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지원 및 정비 336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지원 사례집 발간 3회 × 18백만원=54백만원 · 자치법규 업무담당자 워크숍 개최 2회 × 20백만원=40백만원 · 자치법규 발전 세미나 개최 1회 × 14백만원=14백만원 · 자율정비 지원 등 업무관련 회의 25회 × 0.52백만원=13백만원 · 자치법규 전문가 자문수당 24회 × 0.3백만원=7백만원 · 선진국 자치법규 입안지원 사례 조사·연구 7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정비지원 관련 연구용역 100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지원인력 인건비 32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발간 1회 = 40백만원 · 우수 자치입법 지자체 포상금 9백만원 · 기타(특근매식비, 사무용품 등) 20백만원 - 알기 쉬운 법제 구축 사업 744백만 · 알법 연구용역 30백만원 × 6건 =180백만원 · 알법 정비기준책자 8,500원 × 3,294부 =28백만원 · 법령용어 정비위원회 등 4백만원 × 12회 =48백만원 · 국제학술대회 참석 4백만원×2명 =8백만원 · 알법 정비과제 발굴 관리 지원 전문인력 3.3백만원×6명×12월 =238백만원 · 알법 정비과제 관리 등 업무지원 인력 2.78백만원×1명×12월=33.3백만원 · 기타정비(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부처협의 출장 등) 56백만원 · 법령안 새로 쓰기 제도 위탁운영 111백만원 · 알법 아이디어 공모제 42백만원
	'21~'25(요구)	3,148	- 법령정비사업 492백만원 · 계약직 3명 × 37백만원=110백만원 ·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 1회 × 63백만원=63백만원 · 법령정비 사례집 (3,000부) 23백만원 · 국민법제관 등 국민참여입법 관련 회의 등 관련 수당(170회) 28백만원 · 국민법제관 등 국민참여입법 관련 회의 운영 35백만원 · 법령정비 과제 발굴 관련 회의 등 43회 × 1백만원= 43백만원 · 연구용역 (3건 × 30백만원) + (1건 × 100백만원) =190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지원 및 정비 1,356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지원 사례집 발간 3회 × 18백만원=54백만원 · 자치법규 업무담당자 워크숍 개최 2회 × 20백만원=40백만원 · 자치법규 발전 세미나 개최 1회 × 14백만원=14백만원 · 자율정비 지원 등 업무관련 회의 25회 × 0.52백만원=13백만원 · 자치법규 전문가 자문수당 24회 × 0.3백만원=7백만원

			· 선진국 자치법규 입안지원 사례 조사·연구 7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정비지원 관련 연구용역 100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지원 인력 인건비 32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발간 1회 = 40백만원 · 우수 자치입법 지자체 포상금 9백만원 · 위임조례지원시스템 구축 1,000백만원 · 위임조례지원시스템 관련 지자체 협의회 개최 1회 × 20백만원 = 20백만원 · 기타(특근매식비, 사무용품 등) 20백만원 - 알기 쉬운 법제 구축 사업 1,300백만 · 알법 연구용역 50백만원 × 2건 = 100백만원 · 알법 정비기준책자 8,500원 × 5,000부 = 42.5백만원 · 법령용어 정비위원회 등 자문회의 4백만원 × 12회 = 48백만원 · 국제학술대회 참석 5백만원 × 2명 = 10백만원 · 알법 정비과제 발굴 관리 지원 전문인력 3.3백만원 × 6명 × 12월 = 238백만원 · 알법 정비과제 관리 등 업무지원 인력 2.78백만원 × 1명 × 12월 = 35백만원 · 기타경비(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부처협의 출장 등) 76백만원 · 법령안 새로 쓰기 제도 위탁운영 150백만원 · 통합 알법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 600백만원
'24	'20~'24(당초)	1,459	- 법령정비사업 365백만원 · 계약직 3명 × 37백만원 = 110백만원 ·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 (1회) 61백만원 · 법령정비 사례집 (3,000부) 23백만원 · 국민법제관 등 국민참여입법 관련 회의 등 관련 수당(120회) 23백만원 · 국민법제관 등 국민참여입법 관련 회의 운영 23백만원 · 법령정비 과제 발굴 관련 회의 등 35회 × 1백만원 = 35백만원 · 연구용역 3건 × 30백만원 = 90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지원 및 정비 336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지원 사례집 발간 3회 × 18백만원 = 54백만원 · 자치법규 업무담당자 워크숍 개최 2회 × 20백만원 = 40백만원 · 자치법규 발전 세미나 개최 1회 × 14백만원 = 14백만원 · 자율정비 지원 등 업무관련 회의 25회 × 0.52백만원 = 13백만원 · 자치법규 전문가 자문수당 24회 × 0.3백만원 = 7백만원 · 선진국 자치법규 입안지원 사례 조사·연구 7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정비지원 관련 연구용역 100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지원 인력 인건비 32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발간 1회 = 40백만원 · 우수 자치입법 지자체 포상금 9백만원 · 기타(특근매식비, 사무용품 등) 20백만원 - 알기 쉬운 법제 구축 사업 758백만 · 알법 연구용역 30백만원 × 6건 = 180백만원 · 알법 정비기준책자 8,500원 × 3,294부 = 28백만원 · 법령용어 정비위원회 등 4백만원 × 12회 = 48백만원 · 국제학술대회 참석 4백만원 × 2명 = 8백만원 · 알법 정비과제 발굴 관리 지원 전문인력 3.3백만원 × 6명 × 12월 = 238백만원 · 알법 정비과제 관리 등 업무지원 인력 2.78백만원 × 1명 × 12월 = 33.3백만원

			· 기타경비(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부처협의 출장 등) 42백만원 · 법령안 새로 쓰기 제도 위탁운영 139백만원 · 알법 아이디어 공모제 42백만원
	'21~'25(요구)	1,855	- 법령정비사업 499백만원 · 계약직 3명 × 37백만원=110백만원 ·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 1회 × 63백만원=63백만원 · 법령정비 사례집 (3,000부) 23백만원 · 국민법제관 등 국민참여입법 관련 회의 등 관련 수당(170회) 28백만원 · 국민법제관 등 국민참여입법 관련 회의 운영 40백만원 · 법령정비 과제 발굴 관련 회의 등 45회 × 1백만원= 45백만원 · 연구용역 (3건 × 30백만원) + (1건 × 100백만원) =190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지원 및 정비 456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지원 사례집 발간 3회 × 18백만원=54백만원 · 자치법규 업무담당자 워크숍 개최 2회 × 20백만원=40백만원 · 자치법규 발전 세미나 개최 1회 × 14백만원=14백만원 · 자율정비 지원 등 업무관련 회의 25회 × 0.52백만원=13백만원 · 자치법규 전문가 자문수당 24회 × 0.3백만원=7백만원 · 선진국 자치법규 입안지원 사례 조사·연구 7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정비지원 관련 연구용역 100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지원 인력 인건비 32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발간 1회 = 40백만원 · 우수 자치입법 지자체 포상금 9백만원 · 위임조례지원시스템 유지·보수 100백만원 · 위임조례지원시스템 관련 지자체 협의회 개최 1회 × 20백만원 =20백만원 · 기타(특근매식비, 사무용품 등) 20백만원 - 알기 쉬운 법제 구축 사업 900백만 · 알법 연구용역 50백만원 × 2건 =100백만원 · 알법 정비기준책자 8,500원 × 5,000부 =42.5백만원 · 법령용어 정비위원회 등 자문회의 4백만원 × 12회 =48백만원 · 국제학술대회 참석 5백만원×2명 =10백만원 · 알법 정비과제 발굴 관리 지원 전문인력 3.3백만원×6명×12월 =238백만원 · 알법 정비과제 관리 등 업무지원 인력 2.78백만원×1명×12월 =35백만원 · 기타경비(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부처협의 출장 등) 76백만원 · 법령안 새로 쓰기 제도 위탁운영 150백만원 · 통합 알법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콘텐츠 업데이트 200백만원
'25	'20~'24(요구)	1,862	- 법령정비사업 506백만원 · 계약직 3명 × 37백만원=110백만원 ·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 1회 × 63백만원=63백만원 · 법령정비 사례집 (3,000부) 23백만원 · 국민법제관 등 국민참여입법 관련 회의 등 관련 수당(170회) 28백만원 · 국민법제관 등 국민참여입법 관련 회의 운영 45백만원 · 법령정비 과제 발굴 관련 회의 등 47회 × 1백만원= 47백만원 · 연구용역 (3건 × 30백만원) + (1건 × 100백만원) =190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지원 및 정비 456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지원 사례집 발간 3회 × 18백만원=54백만원 · 자치법규 업무담당자 워크숍 개최 2회 × 20백만원=40백만원 · 자치법규 발전 세미나 개최 1회 × 14백만원=14백만원 · 자율정비 지원 등 업무관련 회의 25회 × 0.52백만원=13백만원 · 자치법규 전문가 자문수당 24회 × 0.3백만원=7백만원 · 선진국 자치법규 입안지원 사례 조사·연구 7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정비지원 관련 연구용역 100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지원 인력 인건비 32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발간 1회 = 40백만원 · 우수 자치입법 지자체 포상금 9백만원 · 위임조례지원시스템 유지·보수 100백만원 · 위임조례지원시스템 관련 지자체 협의회 개최 1회 × 20백만원=20백만원 · 기타(특근매식비, 사무용품 등) 20백만원 - 알기 쉬운 법제 구축 사업 900백만 · 알법 연구용역 50백만원 × 2건 =100백만원 · 알법 정비기준책자 8,500원 × 5,000부 =42.5백만원 · 법령용어 정비위원회 등 자문회의 4백만원 × 12회 =48백만원 · 국제학술대회 참석 5백만원×2명 =10백만원 · 알법 정비과제 발굴 관리 지원 전문인력 3.3백만원×6명×12월 =238백만원 · 알법 정비과제 관리 등 업무지원 인력 2.78백만원×1명×12월 =35백만원 · 기타경비(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부처협의 출장 등) 76백만원 · 법령안 새로 쓰기 제도 위탁운영 150백만원 · 통합 알법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콘텐츠 업데이트 200백만원
--	--	---

(단위 : 백만원)

□ 고려사항

○ 최근 3년간('18~'20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단위 : 백만원)

년 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8	835	-	156	991	935	-	56
'19	2,109	-	△20	2,089	1,933	-	176
'20	1,526	-	-	1,526	1,425		101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법령정비

외부기관	지적사항/조치사항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국민법제관 제도 활성화 필요('18년) (조치사항) 시스템을 활용하여 국민법제관 활동 편의성을 높이고, 관련 분야 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민법제관 활동을 적극 독려하겠음
국회 (‘19년 예산)	(지적사항) 국민법제관 구성 다양화 및 성과 제고 방안 마련 필요 (조치사항) 국민법제관 구성 다양화 및 활동 성과 제고를 위한 계획 수립
국회 (‘18년 결산)	(지적사항) 법령정비 사업 추진시, 외부 의견을 수렴한후 내부 검토를 거치는 방식의 경우 타부처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사업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검토할 것 (조치사항) 법령정비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방식의 부처 협의 지속 추진
국회 (‘19년 결산)	(지적사항) 국민법제관 활성화 및 구성의 다양성·참여 확보 필요 (조치사항) 국민법제관 위촉시 활동실적 저조자는 해촉하고 참여의지가 높은 국민법제관의 비중을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2020년 국민법제관 신규 위촉시 여성, 비수도권, 30대 이하 청년, 신산업·신기술 분야 기업가·전문가 등을 우선 위촉함.

- 알기 쉬운 법제 구축 사업

외부기관	지적사항/조치사항
국회 (‘18년 결산)	(지적사항) 법제처는 국회에서 심의한 예산편성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알기 쉬운 법제구축사업 추진 시 국회와 내용을 공유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 (조치사항) 앞으로 국회예산편성권을 존중하여 더욱 신중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것이며, 사업 추진 시 국회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 업무협약 체결('19.10.)
국회 (‘19년 결산)	(지적사항) 법제처는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과 미미한 사업 효과가 나타난 ‘국민과 함께 하는 법령안 새로 쓰기’ 사업의 지속여부 등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 (조치사항) 사업 내용 및 예산 조정(199백만원→123.6백만원)을 통해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음

⑦ 법제업무정보화추진(정보화)(재량지출)

(담당자: 6급 우승기, 044-200-6786)

□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국정과제	해당없음
사업내용	- 각급 행정기관에서 생산하는 법령정보를 지속적으로 통합 구축하고, 일반국민이 법령정보를 검색하고 이해·활용할 수 있도록 고품질의 다양한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 정부입법지원센터(법령안 입안·심사, 법령해석, 입법예고 등) 및 법령안편집기에 신기술을 접목하고 보다 이용하기 편리하게 개선하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법제업무와 국민의 입법참여 등을 전자적으로 지원 - 법제처 홈페이지 및 내부포털시스템 등 각종 시스템에 대한 내·외부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수렴·반영하고, 정보기술 환경의 변화에 따른 보안 활동 및 내부 정보 자원 보호
사업기간	'01년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법제처

□ 변동내역 및 변동요인

<법제업무정보화추진(정보화)사업 지출변동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결산	'21예산	'22	'23	'24	'25	연평균 증가율
'20~'24계획 (증가율)	8,824	7,051 (△20.1)	7,051 (-)	7,051 (-)	7,051 (-)		-
'21~'25요구 (증가율)		7,051	9,924 (40.7)	12,088 (21.8)	10,296 (△14.8)	9,593 (△6.8)	8.0

○ 세부 변동내역 및 변동요인

- 국가법령정보 통합검색서비스(증, 2,082백만원)
 - 차세대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에 따른 국가법령정보센터 DB 구조 개선, 법률 지식 DB 구축 등 1년차 이행과제 수행
 - 법령 현행화, 연계정보 관리 등 법령정보 관리업무 민간위탁 임금 상승분 반영, 공공기관 규정 수집 및 제공 및 연혁법령 전수 검증 완료
 - 2020년 구축한 정보시스템에 대해 2022년부터 유상 유지·보수 수행
 - 증감내역: 일반연구비 증 3,188백만원, 일반용역비 감 64백만원, 관리용역비 증 22백만원, 자산취득비 감 1,064백만원
- 정부입법지원(증, 515백만원)
 - 노후 서버장비 교체 및 장비증설에 따른 AP 이관
 - 데이터베이스(DBMS) 이중화에 따른 DB동기화 솔루션
 - 증감내역 : 관리용역비 증 279백만원, 자산취득비 증 236백만원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증, 223백만원)
 - 생활법령 콘텐츠의 효율적인 관리 및 서비스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재설계하는 등 중장기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2020년 구축한 정보시스템에 대해 2022년부터 유상 유지·보수 수행
 - 증감내역 : 관리용역비 감 6백만원, 일반연구비 증 229백만원
- 세계법제정보서비스(감, 1백만원)
 - 2020년 구축한 정보시스템에 대해 2022년부터 유상 유지·보수 수행
 - 증감내역 : 관리용역비 감 1백만원
- 처내업무 행정정보화(증, 51백만원)
 - 청소년법제관 운영방식 개선을 위한 청소년법제관 홈페이지 구축
 - 사무용 PC 보안 SW보급을 통한 보안 강화로 내부 개인정보 및 중요자료 보호 등 보안 기능 강화
 - 2020년 구축한 정보시스템에 대해 2022년부터 유상 유지·보수 수행
 - 증감내역 : 관리용역비 감 4백만원, 연구용역비 증 359백만원, 자산취득비 감 80백만원

- 사무용 PC 등 구입 및 유지보수(감, 1백만원)
- 조직개편 대비 추가 인력수요 충당을 위한 PC 구매 및 내용연수를 초과한 전산장비 교체
- 사무용 SW 보급을 통한 법제행정정보화 업무 효율 향상
- 증감내역 : 자산취득비 감 2백만원, 관리용역비 증 1백만원

□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년도	금 액		산 출 근 거
'21*	'20~'24(당초)	7,051	○ 국가법령정보 통합검색서비스 4,044백만원 - 데이터베이스 동기화 라이선스 추가 77백만원 × 63core -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솔루션 추가 46.5백만원 × 3건 - 검색엔진 라이선스 추가 22백만원 × 20건 - 민간법령용어사전 업데이트 5백만원 × 1건 - 법령정보 업데이트 및 구축 위탁 1,652백만원 × 1건 - 유지·보수 1,323백만원 × 1건 ○ 정부입법지원 1,363백만원 - PC원격지원 솔루션 구입 2.8백만원 × 4건 - 유지·보수 1,352백만원 × 1건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334백만원 - 유지·보수 334백만원 × 1건 ○ 세계법제정보서비스 85백만원 - 유지·보수 85백만원 × 1건 ○ 처내업무 행정정보화 647백만원 - 내부 메일·메신저 라이선스 80백만원 × 1건 - 바이러스 백신 등 사용료 5.2백만원 × 17건 - 유지·보수 478백만원 × 1건 ○ 사무용 PC 등 구입 및 유지보수 313백만원 - 사무용 PC 등 구입 1.1백만원 × 106건 - 사무용 SW 구입 0.4백만원 × 300건 - 유지·보수 77백만원 × 1건 ○ 상용임금 및 운영지원 등 265백만원 - 상용임금 27백만원 × 3명 - 기술평가 및 자문수당 2.2백만원 × 7건 - 홍보물 제작 12백만원 × 1건 - 레이저프린터 토너 0.5백만원 × 188개 - 정보화관련 서적 0.03백만원 × 4건 - 실명확인 서비스 3백만원 × 1건 - 정보보안 교육 강사비 0.3백만원 × 4건 - 특근매식비 12백만원 × 1건 - 복리후생비 0.4백만원 × 3건 - 국내여비 5백만원 × 1건 - 사업추진비 26백만원 × 1건 - 고용부담금 5.0백만원 × 3명
	'21~'25(요구)	7,051	○ 국가법령정보 통합검색서비스 4,044백만원

			- 데이터베이스 동기화 라이선스 추가 77백만원 × 63core -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솔루션 추가 46.5백만원 × 3건 - 검색엔진 라이선스 추가 22백만원 × 20건 - 민간법령용어사전 업데이트 5백만원 × 1건 - 법령정보 업데이트 및 구축 위탁 1,652백만원 × 1건 - 유지·보수 1,323백만원 × 1건 ○ 정부입법지원 1,363백만원 - PC원격지원 솔루션 구입 2.8백만원 × 4건 - 유지·보수 1,352백만원 × 1건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334백만원 - 유지·보수 334백만원 × 1건 ○ 세계법제정보서비스 85백만원 - 유지·보수 85백만원 × 1건 ○ 처내업무 행정정보화 647백만원 - 내부 메일·메신저 라이선스 80백만원 × 1건 - 바이러스 백신 등 사용료 5.2백만원 × 17건 - 유지·보수 478백만원 × 1건 ○ 사무용 PC 등 구입 및 유지보수 313백만원 - 사무용 PC 등 구입 1.1백만원 × 106건 - 사무용 SW 구입 0.4백만원 × 300건 - 유지·보수 77백만원 × 1건 ○ 상용임금 및 운영지원 등 265백만원 - 상용임금 27백만원 × 3명 - 기술평가 및 자문수당 2.2백만원 × 7건 - 홍보물 제작 12백만원 × 1건 - 레이저프린터 토너 0.5백만원 × 188개 - 정보화관련 서적 0.03백만원 × 4건 - 실명확인 서비스 3백만원 × 1건 - 정보보안 교육 강사비 0.3백만원 × 4건 - 특근매식비 12백만원 × 1건 - 복리후생비 0.4백만원 × 3건 - 국내여비 5백만원 × 1건 - 사업추진비 26백만원 × 1건 - 고용부담금 5.0백만원 × 3명
'22	'20~'24(당초)	7,051	○ 국가법령정보 통합검색서비스 3,890백만원 - 정보시스템 개발 1,094백만원 × 1건 - 민간법령용어사전 업데이트 5백만원 × 1건 - 법령정보 업데이트 및 구축 위탁 1,468백만원 × 1건 - 유지·보수 1,323백만원 × 1건 ○ 정부입법지원 1,594백만원 - 정보시스템 개발 242백만원 × 1건 - 유지·보수 1,352백만원 × 1건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334백만원 - 유지·보수 334백만원 × 1건 ○ 세계법제정보서비스 85백만원 - 유지·보수 85백만원 × 1건 ○ 처내업무 행정정보화 567백만원 - 바이러스 백신 등 사용료 5.2백만원 × 17건 - 유지·보수 445백만원 × 1건

		○ 사무용 PC 등 구입 및 유지보수 313백만원 - 사무용 PC 등 구입 1.1백만원 × 106건 - 사무용 SW 구입 0.4백만원 × 300건 - 유지·보수 77백만원 × 1건 ○ 상용임금 및 운영지원 등 268백만원 - 상용임금 27.7백만원 × 3명 - 기술평가 및 자문수당 2.2백만원 × 7건 - 홍보물 제작 12백만원 × 1건 - 레이저프린터 토너 0.5백만원 × 188개 - 정보화관련 서적 0.03백만원 × 4건 - 실명확인 서비스 3백만원 × 1건 - 정보보안 교육 강사비 0.3백만원 × 4건 - 특근매식비 12백만원 × 1건 - 복리후생비 0.4백만원 × 3건 - 국내여비 5백만원 × 1건 - 사업추진비 26백만원 × 1건 - 고용부담금 5.3백만원 × 3명
'21~'25(요구)	9,924	○ 국가법령정보 통합검색서비스 6,126백만원 - 정보화전략계획에 따른 시스템 구축 3,188백만원 × 1건 - 민간법령용어사전 업데이트 5백만원 × 1건 - 법령정보 업데이트 및 구축 위탁 1,588백만원 × 1건 - 유지·보수 1,345백만원 × 1건 ○ 정부입법지원 1,878백만원 - 정부입법시스템 AP 이관 279백만원 × 1건 - 데이터베이스 동기화 솔루션 247백만원 × 1건 - 유지·보수 1,352백만원 × 1건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557백만원 - 콘텐츠 관리 및 시스템 재설계를 위한 중장기 정보화전략 계획 수립(ISP) 229백만원 × 1건 - 유지·보수 328백만원 × 1건 ○ 세계법제정보서비스 84백만원 - 유지·보수 84백만원 × 1건 ○ 처내업무 행정정보화 698백만원 - 청소년법제관 홈페이지 구축 135백만원 × 1건 - 바이러스 백신 등 사용료 89백만원 × 1건 - 유지·보수 474백만원 × 1건 ○ 사무용 PC 등 구입 및 유지보수 312백만원 - 사무용 PC 등 구입 1.1백만원 × 60대 - 사무용 노트북 구입 1.5백만원 × 15대 - 사무용 프린터 구입 0.5백만원 × 50대 - 사무용 SW 구입 0.2백만원 × 600건 - 유지·보수 78백만원 × 1건 ○ 상용임금 및 운영지원 등 269백만원 - 상용임금 28백만원 × 3명 - 기술평가 및 자문수당 2.2백만원 × 7건 - 홍보물 제작 12백만원 × 1건 - 레이저프린터 토너 0.5백만원 × 188개 - 정보화관련 서적 0.03백만원 × 4건 - 실명확인 서비스 3백만원 × 1건

			- 정보보안 교육 강사비 0.3백만원 × 4건 - 특근매식비 12백만원 × 1건 - 복리후생비 0.4백만원 × 3건 - 국내여비 5백만원 × 1건 - 사업추진비 26백만원 × 1건 - 고용부담금 5.3백만원 × 3명
'23	'20~'24(당초)	7,051	○ 국가법령정보 통합검색서비스 3,518백만원 - 정보시스템 개발 722백만원 × 1건 - 민간법령용어사전 업데이트 5백만원 × 1건 - 법령정보 업데이트 및 구축 위탁 1,468백만원 × 1건 - 유지·보수 1,323백만원 × 1건 ○ 정부입법지원 1,680백만원 - 정보시스템 개발 328백만원 × 1건 - 유지·보수 1,352백만원 × 1건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616백만원 - 정보시스템 개발 282백만원 × 1건 - 유지·보수 334백만원 × 1건 ○ 세계법제정보서비스 85백만원 - 유지·보수 85백만원 × 1건 ○ 처내업무 행정정보화 567백만원 - 바이러스 백신 등 사용료 5.2백만원 × 17건 - 유지·보수 445백만원 × 1건 ○ 사무용 PC 등 구입 및 유지보수 313백만원 - 사무용 PC 등 구입 1.1백만원 × 106건 - 사무용 SW 구입 0.4백만원 × 300건 - 유지·보수 77백만원 × 1건 ○ 상용임금 및 운영지원 등 272백만원 - 상용임금 28.7백만원 × 3명 - 기술평가 및 자문수당 2.2백만원 × 7건 - 홍보물 제작 12백만원 × 1건 - 레이저프린터 토너 0.5백만원 × 188개 - 정보화관련 서적 0.03백만원 × 4건 - 실명확인 서비스 3백만원 × 1건 - 정보보안 교육 강사비 0.3백만원 × 4건 - 특근매식비 12백만원 × 1건 - 복리후생비 0.4백만원 × 3건 - 국내여비 5백만원 × 1건 - 사업추진비 26백만원 × 1건 - 고용부담금 5.6백만원 × 3명
	'21~'25(요구)	12,088	○ 국가법령정보 통합검색서비스 7,661백만원 - 정보화전략계획에 따른 시스템 구축 4,533백만원 × 1건 - 민간법령용어사전 업데이트 5백만원 × 1건 - 법령정보 업데이트 및 구축 위탁 1,667백만원 × 1건 - 유지·보수 1,456백만원 × 1건 ○ 정부입법지원 1,352백만원 - 유지·보수 1,352백만원 × 1건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1,426백만원 - 정보화전략계획에 따른 시스템 구축 1,096백만원 × 1건 - 유지·보수 330백만원 × 1건

			○ 세계법제정보서비스 185백만원 - 정보시스템 개발 100백만원 × 1건 - 유지·보수 85백만원 × 1건 ○ 처내업무 행정정보화 880백만원 - 정보시스템 개발 315백만원 × 1건 - 바이러스 백신 등 사용료 89백만원 × 1건 - 유지·보수 476백만원 × 1건 ○ 사무용 PC 등 구입 및 유지보수 311백만원 - 사무용 PC 등 구입 1.1백만원 × 80대 - 사무용 프린터 구입 0.5백만원 × 50대 - 사무용 SW 구입 0.2백만원 × 600건 - 유지·보수 78백만원 × 1건 ○ 상용임금 및 운영지원 등 273백만원 - 상용임금 29백만원 × 3명 - 기술평가 및 자문수당 2.2백만원 × 7건 - 홍보물 제작 12백만원 × 1건 - 레이저프린터 토너 0.5백만원 × 188개 - 정보화관련 서적 0.03백만원 × 4건 - 실명확인 서비스 3백만원 × 1건 - 정보보안 교육 강사비 0.3백만원 × 4건 - 특근매식비 12백만원 × 1건 - 복리후생비 0.4백만원 × 3건 - 국내여비 5백만원 × 1건 - 사업추진비 26백만원 × 1건 - 고용부담금 5.6백만원 × 3명
'24	'20~'24(당초)	7,051	○ 국가법령정보 통합검색서비스 3,394백만원 - 정보시스템 개발 598백만원 × 1건 - 민간법령용어사전 업데이트 5백만원 × 1건 - 법령정보 업데이트 및 구축 위탁 1,468백만원 × 1건 - 유지·보수 1,323백만원 × 1건 ○ 정부입법지원 1,775백만원 - 정보시스템 개발 423백만원 × 1건 - 유지·보수 1,352백만원 × 1건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641백만원 - 정보시스템 개발 307백만원 × 1건 - 유지·보수 334백만원 × 1건 ○ 세계법제정보서비스 85백만원 - 유지·보수 85백만원 × 1건 ○ 처내업무 행정정보화 567백만원 - 바이러스 백신 등 사용료 5.2백만원 × 17건 - 유지·보수 445백만원 × 1건 ○ 사무용 PC 등 구입 및 유지보수 313백만원 - 사무용 PC 등 구입 1.1백만원 × 106건 - 사무용 SW 구입 0.4백만원 × 300건 - 유지·보수 77백만원 × 1건 ○ 상용임금 및 운영지원 등 276백만원 - 상용임금 29.7백만원 × 3명 - 기술평가 및 자문수당 2.2백만원 × 7건 - 홍보물 제작 12백만원 × 1건

			- 레이저프린터 토너 0.5백만원 × 188개 - 정보화관련 서적 0.03백만원 × 4건 - 실명확인 서비스 3백만원 × 1건 - 정보보안 교육 강사비 0.3백만원 × 4건 - 특근매식비 12백만원 × 1건 - 복리후생비 0.4백만원 × 3건 - 국내여비 5백만원 × 1건 - 사업추진비 26백만원 × 1건 - 고용부담금 6.0백만원 × 3명
	'21~'25(요구)	10,296	○ 국가법령정보 통합검색서비스 5,559백만원 - 정보화전략계획에 따른 시스템 구축 2,347백만원 × 1건 - 민간법령용어사전 업데이트 5백만원 × 1건 - 법령정보 업데이트 및 구축 위탁 1,751백만원 × 1건 - 유지·보수 1,456백만원 × 1건 ○ 정부입법지원 2,729백만원 - 정보화전략계획에 따른 시스템 구축 927백만원 × 1건 - 유지·보수 1,352백만원 × 1건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654백만원 - 정보화전략계획에 따른 시스템 구축 322백만원 × 1건 - 유지·보수 332백만원 × 1건 ○ 세계법제정보서비스 86백만원 - 유지·보수 86백만원 × 1건 ○ 처내업무 행정정보화 1,160백만원 - 정보시스템 개발 542백만원 × 1건 - 바이러스 백신 등 사용료 89백만원 × 1건 - 유지·보수 529백만원 × 1건 ○ 사무용 PC 등 구입 및 유지보수 281백만원 - 사무용 PC 등 구입 1.1백만원 × 70대 - 사무용 프린터 구입 0.5백만원 × 10대 - 사무용 SW 구입 0.2백만원 × 600건 - 유지·보수 79백만원 × 1건 ○ 상용임금 및 운영지원 등 277백만원 - 상용임금 30백만원 × 3명 - 기술평가 및 자문수당 2.2백만원 × 7건 - 홍보물 제작 12백만원 × 1건 - 레이저프린터 토너 0.5백만원 × 188개 - 정보화관련 서적 0.03백만원 × 4건 - 실명확인 서비스 3백만원 × 1건 - 정보보안 교육 강사비 0.3백만원 × 4건 - 특근매식비 12백만원 × 1건 - 복리후생비 0.4백만원 × 3건 - 국내여비 5백만원 × 1건 - 사업추진비 26백만원 × 1건 - 고용부담금 6백만원 × 3명
'25	'20~'24(요구)	9,593	○ 국가법령정보 통합검색서비스 3,761백만원 - 정보화전략계획에 따른 시스템 구축 462백만원 × 1건 - 민간법령용어사전 업데이트 5백만원 × 1건 - 법령정보 업데이트 및 구축 위탁 1,838백만원 × 1건 - 유지·보수 1,456백만원 × 1건

		○ 정부입법지원 2,872백만원 - 정보화전략계획에 따른 시스템 구축 1,520백만원 × 1건 - 유지·보수 1,352백만원 × 1건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1,021백만원 - 정보화전략계획에 따른 시스템 구축 687백만원 × 1건 - 유지·보수 334백만원 × 1건 ○ 세계법제정보서비스 97백만원 - 유지·보수 97백만원 × 1건 ○ 처내업무 행정정보화 1,137백만원 - 정보시스템 개발 515백만원 × 1건 - 바이러스 백신 등 사용료 89백만원 × 1건 - 유지·보수 533백만원 × 1건 ○ 사무용 PC 등 구입 및 유지보수 424백만원 - 사무용 PC 등 구입 1.1백만원 × 200대 - 사무용 프린터 구입 0.5백만원 × 10대 - 사무용 SW 구입 0.2백만원 × 600건 - 유지·보수 79백만원 × 1건 ○ 상용임금 및 운영지원 등 281백만원 - 상용임금 31백만원 × 3명 - 기술평가 및 자문수당 2.2백만원 × 7건 - 홍보물 제작 12백만원 × 1건 - 레이저프린터 토너 0.5백만원 × 188개 - 정보화관련 서적 0.03백만원 × 4건 - 실명확인 서비스 3백만원 × 1건 - 정보보안 교육 강사비 0.3백만원 × 4건 - 특근매식비 12백만원 × 1건 - 복리후생비 0.4백만원 × 3건 - 국내여비 5백만원 × 1건 - 사업추진비 26백만원 × 1건 - 고용부담금 6.3백만원 × 3명
--	--	--

□ 고려사항

○ 최근 3년간('18~'20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단위 : 백만원)

년 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8	6,398	-	-	6,398	6,138	-	260
'19	6,248	-	111 (예비비)	6,359	6,136	-	223
'20	9,026	-	-	9,026	8,824	-	202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법제업무정보화추진(정보화)사업 재정사업자율평가(2018. 3.)]

‘우수’ 평가

[법제업무정보화추진(정보화)사업 재정사업자율평가(2019. 3.)]

‘우수’ 평가

[법제업무정보화추진(정보화)사업 재정사업자율평가(2020. 3.)]

‘우수’ 평가

[국회(법사위) 지적사항(2017회계연도 결산)(2018. 8.)]

4/4분기에 집중적으로 소모성 물품을 구입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필요 물품을 미리 조사하고 매월 말 잔여 물품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구입함으로써 4/4분기 집중적인 물품 구입을 지양하겠음

[국회(법사위) 지적사항(2019회계연도 결산)(2020. 8.)]

윈도우7 보안기술 지원종료는 2019년 예산안 편성 당시 이미 확정되어 있었고 예비비 사용 신청 시점(11월)에 불용액의 발생을 예상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었는데도 예비비 지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할 경우 불용액 발생 여부 및 활용 등 기정예산으로의 충당가능성을 면밀히 검토 후 예비비를 신청하겠음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⑧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재량지출)

(담당자: 5급 박지윤, 044-200-6768, 6급 장진욱, 044-200-6772)

□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국정과제	해당없음
사업내용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법령 입안 및 운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문적·체계적 법제전문교육 실시 - 혁신적인 조직문화 조성 및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입법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고, 미래를 대비하는 창의적인 법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법제업무의 품질을 제고 - 법제실무인력의 자발적 연구·학습활동을 지원, 연구모임을 중심으로 학계 등 전문가 사이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식 교류 및 해외 선진법제를 체험함으로써 법제실무인력 전문성 향상 도모 ※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 사업은 3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 - ㉠법제교육, - ㉡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 - ㉢법제실무인력전문성향상
사업기간	'05년 ~ 계속
총사업비 ¹⁾	해당없음
사업규모 ²⁾	해당없음
지원조건 ³⁾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법제처

□ 변동내역 및 변동요인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 사업 지출변동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결산 ¹⁾	'21예산	'22	'23	'24	'25	연평균 증가율
'20~'24계획 (증가율)	964	1,394 (44.6)	1,463 (3.8)	1,436 (△1.8)	1,450 (1.0)		10.7
'21~'25요구 (증가율)		1,394	2,012 (44.3)	2,800 (39.2)	3,320 (18.6)	3,380 (1.8)	24.8

○ 법제교육

- 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방식 교육수요 증가에 따라 사이버 법제교육의 확대를 추진하고 집합교육과 연계되는 이러닝 콘텐츠 개발을 통해 효과적인 법제 교육 체계 구축**[+200백만원]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사이버 교육 확대)**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닝 콘텐츠를 확대 개발하여 교육 수요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필요

※ 사이버교육 실적: ('17)5,222명 → ('18)6,441명 → ('19)9,738명 → ('20)15,737명

【 법제처 이러닝 콘텐츠 개발 현황 】

연번	과목명	개발연도	비고
1	행정쟁송 실무	2015	
2	공무원이 알아야 할 주요판례	2016	
3	법령 입안 사례 연구 I	2016	
4	법령 입안 사례 연구 II	2016	
5	법령체계와 입법절차	2018	
6	행정규칙 입안·정비 길잡이	2018	
7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2020	기 존 콘 텐 츠 재 개발 실시
8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	2020	
9	자치법규 입안실무	2020	
10	사례로 보는 규제 법령 정비	2020	
11	공직자가 알아야 할 법제업무 운영규정	2021	개발 진행 예정
12	법령안편집기 사용법	2021	
13	국가법령정보센터 200% 활용하기	2021	

- **(집합교육 연계 이러닝콘텐츠 개발)** 집합교육 실시 전 사전 이수 교육 및 집합교육 이후 심화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교육생의 법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단발성 집합교육의 한계를 극복

② 법제교육원('23년 상반기 준공 예정) 개원에 대비한 교육 콘텐츠 신규개발 · 보완 및 시범사업 실시 등 관련 예산 반영 필요[+404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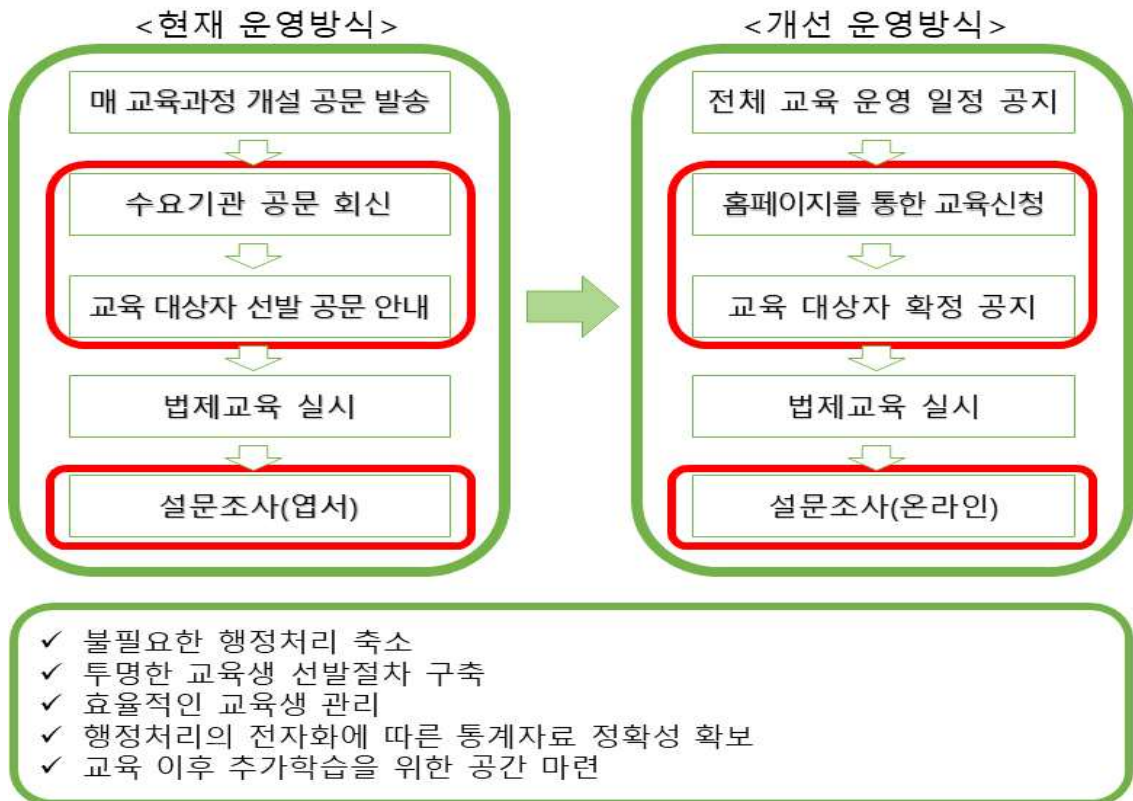
- (법제교육과정 개편 및 교재개발) 법제교육원 개원('23)이 임박함에 따라 법제교육원 개원을 대비한 법제교육과정 개편 및 고도화되는 교육 수준 · 교육과정에 맞는 교재 신규개발 · 업데이트 실시

【 연도별 법제교육 교재 개발 내역 】

연 도	개 발 교재	예 산
2019년	교육관계법령 사례 연구	30백만원
	지방재정법	20백만원
	자치법규주요쟁점	8백만원
2020년	국유재산법·공유재산법	28백만원
2021년	①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② 법령 · 자치법규 입안 심화 ③ 건축관계법령 사례 연구	120백만원
2022년 요구	① 보건분야 법령 사례 연구 ② 사회복지분야 법령 사례 연구	120백만원

- (법제교육원 개원 대비 장기교육과정 시범사업 실시) 법제교육원에서 실시될 장기교육과정(5일 이상 교육과정) 마련 및 과정 신규 개설 · 운영에 필요한 과정개발 연구개발비 및 교육운영비 예산 반영
- 현재 협소한 교육 공간 등으로 인해 증가하는 교육수요에도 불구하고 단기과정(1일~3일 교육과정) 위주의 제한된 교육 서비스 제공 중으로 신설 교육원 입주 시 확충된 강의장 · 숙박시설 등을 활용하여 최대의 교육효과를 낼 수 있도록 부처별 · 지자체별 수요에 맞는 신규 강의과정 편성 · 운영 필요
- 장기교육과정 시범실시를 통해 교육생의 니즈를 파악하여 장기교육과정 과목구성 등 운영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장기교육운영상 애로사항 등을 사전에 파악하는 등 장기교육으로 전환에 따른 교육운영상 혼란 최소화
- (체계적인 교육 운영 · 관리를 위한 교육운영시스템 구축) 법제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매년 운영과정을 확대 운영하고 있고 이에 따른 행정업무량이 늘어나고 있으나, 교육신청 · 수료처리 · 통계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 전반적인 행정절차를 담당 공무원이 수동으로 처리하여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발생하고 있어 체계적 · 효율적인 교육운영 추진을 위해 교육운영시스템 개발 필요
- 홈페이지를 통하여 법제교육 안내, 법제교육신청 · 취소, 교육 수료 이후

만족도 조사 및 수료증 출력 기능, 자료실 등을 구현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
· 자동화하고 교육생이 편리하게 교육을 신청·수료할 수 있는 시스템 구현
· 집합교육 현장강의 동영상 등 교육 자료를 게재하여 교육 전·후에 자율
학습을 도모하고, 반복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 법제교육 효과를
극대화



□ 산출근거

(단위: 백만원)

년도	금 액		산 출 근 거
'21*	'20~'24(당초)	1,410	○ 법제교육 : 1,198백만원 - 법제교육과정 운영 614백만원 · 법제교육 과정 221회 × 2.78백만원 - 법제교육 동영상 제작 2백만원 · 동영상 제작 2회 × 1백만원 - 법제교육 기본교재 고도화 용역 10백만원 · 표준강의안 시각화 개선 용역 2회 × 5백만원 - 법제교육 연구용역비 320백만원 · 수요자 맞춤형 법제교육 교재 개발 용역 4회 × 30백만원 · 장기 적합형 교육과정 개발 용역 2회 × 50백만원 · 이러닝 콘텐츠 개발용역 2회 × 50백만원 - 법제업무 담당자 단기 해외연수 46백만원 · 해외연수경비 2회 × 23백만원 - 법제교육센터 시설 및 자산 관리 141백만원 · 법제교육센터 경비·청소용역비 3명 × 2.5백만원 × 12개월 · 법제교육센터 시설장비유지비 6백만원 · 법제교육센터 시설 운용 공공요금 12개월 × 3.7백만원 - 법제교육 지원 무기계약직 인건비 65백만원 · 무기계약직 급여 및 고용부담금 등 2명 × 12개월 × 2.73백만원 ○ 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 : 100백만원 - 전직원 워크숍 24백만원 - 지식인서재 도서구입 5백만원 - 민간위탁교육 59백만원 - 처내직원교육 12백만원 · 전문가초청강연회 11회 × 0.5백만원 · 법역량강화과정 12회 × 0.4백만원 · 정부시책교육 5회 × 0.3백만원 ○ 법제실무인력 전문성 향상 : 111백만원 - 법제실무인력 전문성향상을 위한 세미나 개최 63백만원 - 연구회 운영 48백만원 · 통합연구보고서 발간 5백만원 · 자료구입비 등 4백만원 · 전문가참석수당 7백만원 · 법제실무연구회 개최 16백만원 - 법제선진화를 위한 현장방문 16백만원 · 현장방문 3회 × 5.3백만원
	'21~'25(요구)	1,394	○ 법제교육 : 1,198백만원 - 법제교육과정 운영 614백만원 · 법제교육 과정 221회 × 2.78백만원 - 법제교육 동영상 제작 2백만원 · 동영상 제작 2회 × 1백만원 - 법제교육 기본교재 고도화 용역 10백만원 · 표준강의안 시각화 개선 용역 2회 × 5백만원

			- 법제교육 연구용역비 320백만원 · 수요자 맞춤형 법제교육 교재 개발 용역 4회 × 30백만원 · 장기 적합형 교육과정 개발 용역 2회 × 50백만원 · 이러닝 콘텐츠 개발용역 2회 × 50백만원 - 법제업무 담당자 단기 해외연수 46백만원 · 해외연수경비 2회 × 23백만원 - 법제교육센터 시설 및 자산 관리 141백만원 · 법제교육센터 경비·청소용역비 3명 × 2.5백만원 × 12개월 · 법제교육센터 시설장비유지비 6백만원 · 법제교육센터 시설 운용 공공요금 12개월 × 3.7백만원 - 법제교육 지원 무기계약직 인건비 65백만원 · 무기계약직 급여 및 고용부담금 등 2명 × 12개월 × 2.73백만원 ○ 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 : 100백만원 - 전직원 워크숍 24백만원 - 지식인서재 도서구입 5백만원 - 민간위탁교육 59백만원 - 처내직원교육 12백만원 · 전문가초청강연회 11회 × 0.5백만원 · 법역량강화과정 12회 × 0.4백만원 · 정부시책교육 5회 × 0.3백만원 ○ 법제실무인력 전문성 향상 : 96백만원 - 법제실무인력 전문성향상을 위한 세미나 개최 61백만원 - 연구회 운영 19백만원 · 통합연구보고서 발간 5백만원 · 자료구입비 12회 × 10인 × 0.03백만원 · 전문가참석수당 10회 × 0.3백만원 · 법제실무연구회 개최 7백만원 - 법제선진화를 위한 현장방문 16백만원 · 현장방문 3회 × 5.3백만원
'22	'20~'24(당초)	1,463	○ 법제교육 : 1,263백만원 - 법제교육과정 운영 679백만원 · 법제교육 과정 240회 × 2.83백만원 - 법제교육 동영상 제작 2백만원 · 동영상 제작 2회 × 1백만원 - 법제교육 기본교재 고도화 용역 10백만원 · 표준강의안 시각화 개선 용역 2회 × 5백만원 - 법제교육 연구용역비 320백만원 · 수요자 맞춤형 법제교육 교재 개발 용역 4회 × 30백만원 · 장기 적합형 교육과정 개발 용역 2회 × 50백만원 · 이러닝 콘텐츠 개발용역 2회 × 50백만원 - 법제업무 담당자 단기 해외연수 46백만원 · 해외연수경비 2회 × 23백만원 - 법제교육센터 시설 및 자산 관리 141백만원 · 법제교육센터 경비·청소용역비 3명 × 2.5백만원 × 12개월 · 법제교육센터 시설장비유지비 6백만원 · 법제교육센터 시설 운용 공공요금 12개월 × 3.7백만원 - 법제교육 지원 무기계약직 인건비 65백만원

			· 무기계약직 급여 및 고용부담금 등 2명 × 12개월 × 2.73백만원 ○ 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 : 100백만원 - 전직원 워크숍 24백만원 - 지식인서재 도서구입 5백만원 - 민간위탁교육 59백만원 - 처내직원교육 12백만원 · 전문가초청강연회 11회 × 0.5백만원 · 법역량강화과정 12회 × 0.4백만원 · 정부시책교육 5회 × 0.3백만원 ○ 법제실무인력 전문성 향상 : 96백만원 - 법제실무인력 전문성향상을 위한 세미나 개최 61백만원 - 연구회 운영 19백만원 · 통합연구보고서 발간 5백만원 · 자료구입비 12회 × 10인 × 0.03백만원 · 전문가참석수당 10회 × 0.3백만원 · 법제실무연구회 개최 7백만원 - 법제선진화를 위한 현장방문 16백만원 · 현장방문 3회 × 5.3백만원
			○ 법제교육 : 1,801백만원 - 법제교육과정 운영 693백만원 · 법제교육 과정 221회 × 2.78백만원 · 장기적합형 교육 시범운영 6회 × 13.2백만원 - 법제교육 동영상 제작 2백만원 · 동영상 제작 2회 × 1백만원 - 법제교육 기본교재 고도화 용역 10백만원 · 표준강의안 시각화 개선 용역 2회 × 5백만원 - 법제교육 연구용역비 844백만원 · 수요자 맞춤형 법제교육 교재 개발 용역 4회 × 30백만원 · 장기 적합형 교육 콘텐츠 개발 용역 4회 × 50백만원 · 이러닝 콘텐츠 개발용역 6회 × 50백만원 · 법제교육 운영시스템 구축 224백만원 - 법제업무 담당자 단기 해외연수 46백만원 · 해외연수경비 2회 × 23백만원 - 법제교육센터 시설 및 자산 관리 141백만원 · 법제교육센터 경비·청소용역비 3명 × 2.5백만원 × 12개월 · 법제교육센터 시설장비유지비 6백만원 · 법제교육센터 시설 운용 공공요금 12개월 × 3.7백만원 - 법제교육 지원 무기계약직 인건비 65백만원 · 무기계약직 급여 및 고용부담금 등 2명 × 12개월 × 2.73백만원 ○ 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 : 100백만원 - 전직원 워크숍 24백만원 - 지식인서재 도서구입 5백만원 - 민간위탁교육 59백만원 - 처내직원교육 12백만원 · 전문가초청강연회 11회 × 0.5백만원 · 법역량강화과정 12회 × 0.4백만원

			·정부시책교육 5회 × 0.3백만원 ○법제실무인력 전문성 향상 : 111백만원 - 법제실무인력 전문성향상을 위한 세미나 개최 63백만원 - 연구회 운영 48백만원 ·통합연구보고서 발간 5백만원 ·자료구입비 등 4백만원 ·전문가참석수당 7백만원 ·법제실무연구회 개최 16백만원 - 법제선진화를 위한 현장방문 16백만원 ·현장방문 3회 × 5.3백만원
'23	'20~'24(당초)	1,436	○법제교육 : 1,236백만원 - 법제교육과정 운영 652백만원 ·법제교육 과정 230회 × 2.83백만원 - 법제교육 동영상 제작 2백만원 ·동영상 제작 2회 × 1백만원 - 법제교육 기본교재 고도화 용역 10백만원 ·표준강의안 시각화 개선 용역 2회 × 5백만원 - 법제교육 연구용역비 320백만원 ·수요자 맞춤형 법제교육 교재 개발 용역 4회 × 30백만원 ·장기 적합형 교육과정 개발 용역 2회 × 50백만원 ·이러닝 콘텐츠 개발용역 2회 × 50백만원 - 법제업무 담당자 단기 해외연수 46백만원 ·해외연수경비 2회 × 23백만원 - 법제교육센터 시설 및 자산 관리 141백만원 ·법제교육센터 경비·청소용역비 3명 × 2.5백만원 × 12개월 ·법제교육센터 시설장비유지비 6백만원 ·법제교육센터 시설 운용 공공요금 12개월 × 3.7백만원 - 법제교육 지원 무기계약직 인건비 65백만원 ·무기계약직 급여 및 고용부담금 등 2명 × 12개월 × 2.73백만원 ○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 : 100백만원 - 전직원 워크숍 24백만원 - 지식인서재 도서구입 5백만원 - 민간위탁교육 59백만원 - 처내직원교육 12백만원 ·전문가초청강연회 11회 × 0.5백만원 ·법역량강화과정 12회 × 0.4백만원 ·정부시책교육 5회 × 0.3백만원 ○법제실무인력 전문성 향상 : 96백만원 - 법제실무인력 전문성향상을 위한 세미나 개최 61백만원 - 연구회 운영 19백만원 ·통합연구보고서 발간 5백만원 ·자료구입비 12회 × 10인 × 0.03백만원 ·전문가참석수당 10회 × 0.3백만원 ·법제실무연구회 개최 7백만원 - 법제선진화를 위한 현장방문 16백만원 ·현장방문 3회 × 5.3백만원

	'21~'25(요구)	2,800	○ 법제교육 : 2,589백만원 - 법제교육과정 운영 693백만원 · 법제교육 과정 221회 × 3.14백만원 - 법제교육 동영상 제작 2백만원 · 동영상 제작 2회 × 1백만원 - 법제교육 기본교재 고도화 용역 10백만원 · 표준강의안 시각화 개선 용역 2회 × 5백만원 - 법제교육 연구용역비 620백만원 · 수요자 맞춤형 법제교육 교재 개발 용역 4회 × 30백만원 · 장기 적합형 교육 콘텐츠 개발 용역 4회 × 50백만원 · 이러닝 콘텐츠 개발용역 3회 × 50백만원 - 법제업무 담당자 단기 해외연수 46백만원 · 해외연수경비 2회 × 23백만원 - 법제교육센터 시설 및 자산 관리 141백만원 · 법제교육센터 경비·청소용역비 3명 × 2.5백만원 × 12개월 · 법제교육센터 시설장비유지비 6백만원 · 법제교육센터 시설 운용 공공요금 12개월 × 3.7백만원 - 법제교육 지원 무기계약직 인건비 65백만원 · 무기계약직 급여 및 고용부담금 등 2명 × 12개월 × 2.73백만원 - 법제교육원 운영 1,012백만원 · 교육생 수송 셔틀버스 운영 0.35백만원 × 2대 × 114일 · 법제교육원 물품 및 자산취득비 100백만원 · 법제교육원 시설이용료 10,000명 × 0.06백만원 · 법제교육원 관사보증금 10명 × 20백만원 · 법제교육원 이사비용 등 10백만원 · 법제교육 운영시스템 유지보수 22백만원 ○ 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 : 100백만원 - 전직원 워크숍 24백만원 - 지식인서재 도서구입 5백만원 - 민간위탁교육 59백만원 - 처내직원교육 12백만원 · 전문가초청강연회 11회 × 0.5백만원 · 법역량강화과정 12회 × 0.4백만원 · 정부시책교육 5회 × 0.3백만원 ○ 법제실무인력 전문성 향상 : 111백만원 - 법제실무인력 전문성향상을 위한 세미나 개최 63백만원 - 연구회 운영 48백만원 · 통합연구보고서 발간 5백만원 · 자료구입비 등 4백만원 · 전문가참석수당 7백만원 · 법제실무연구회 개최 16백만원 - 법제선진화를 위한 현장방문 16백만원 · 현장방문 3회 × 5.3백만원
'24	'20~'24(당초)	1,450	○ 법제교육 : 1,250백만원 - 법제교육과정 운영 664백만원 · 법제교육 과정 235회 × 2.83백만원 - 법제교육 동영상 제작 2백만원

			· 동영상 제작 2회 × 1백만원 - 법제교육 기본교재 고도화 용역 10백만원 · 표준강의안 시각화 개선 용역 2회 × 5백만원 - 법제교육 연구용역비 320백만원 · 수요자 맞춤형 법제교육 교재 개발 용역 4회 × 30백만원 · 장기 적합형 교육과정 개발 용역 2회 × 50백만원 · 이러닝 콘텐츠 개발용역 2회 × 50백만원 - 법제업무 담당자 단기 해외연수 46백만원 · 해외연수경비 2회 × 23백만원 - 법제교육센터 시설 및 자산 관리 141백만원 · 법제교육센터 경비·청소용역비 3명 × 2.5백만원 × 12개월 · 법제교육센터 시설장비유지비 6백만원 · 법제교육센터 시설 운용 공공요금 12개월 × 3.7백만원 - 법제교육 지원 무기계약직 인건비 65백만원 · 무기계약직 급여 및 고용부담금 등 2명 × 12개월 × 2.73백만원 ○ 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 : 100백만원 - 전직원 워크숍 24백만원 - 지식인서재 도서구입 5백만원 - 민간위탁교육 59백만원 - 처내직원교육 12백만원 · 전문가초청강연회 11회 × 0.5백만원 · 법역량강화과정 12회 × 0.4백만원 · 정부시책교육 5회 × 0.3백만원 ○ 법제실무인력 전문성 향상 : 96백만원 - 법제실무인력 전문성향상을 위한 세미나 개최 61백만원 - 연구회 운영 19백만원 · 통합연구보고서 발간 5백만원 · 자료구입비 12회 × 10인 × 0.03백만원 · 전문가참석수당 10회 × 0.3백만원 · 법제실무연구회 개최 7백만원 - 법제선진화를 위한 현장방문 16백만원 · 현장방문 3회 × 5.3백만원
	'21~'25(요구)	3,320	○ 법제교육 : 3,109백만원 - 법제교육과정 운영 693백만원 · 법제교육 과정 221회 × 3.14백만원 - 법제교육 동영상 제작 2백만원 · 동영상 제작 2회 × 1백만원 - 법제교육 기본교재 고도화 용역 10백만원 · 표준강의안 시각화 개선 용역 2회 × 5백만원 - 법제교육 연구용역비 620백만원 · 수요자 맞춤형 법제교육 교재 개발 용역 4회 × 30백만원 · 장기 적합형 교육 콘텐츠 개발 용역 4회 × 50백만원 · 이러닝 콘텐츠 개발용역 3회 × 50백만원 - 법제업무 담당자 단기 해외연수 46백만원 · 해외연수경비 2회 × 23백만원 - 법제교육 지원 무기계약직 인건비 65백만원 · 무기계약직 급여 및 고용부담금 등 2명 × 12개월 × 2.73백만원

			- 법제교육원 운영 1,673백만원 · 교육원 운영 공공요금 등 141백만원 · 교육생 수송 셔틀버스 운영 0.35백만원 x 2대 x 228일 · 법제교육원 물품 및 자산취득비 30백만원 · 법제교육원 시설이용료 22,000명 x 0.06백만원 · 법제교육 운영시스템 유지보수 22백만원 ○ 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 : 100백만원 - 전직원 워크숍 24백만원 - 지식인서재 도서구입 5백만원 - 민간위탁교육 59백만원 - 처내직원교육 12백만원 · 전문가초청강연회 11회 x 0.5백만원 · 법역량강화과정 12회 x 0.4백만원 · 정부시책교육 5회 x 0.3백만원 ○ 법제실무인력 전문성 향상 : 111백만원 - 법제실무인력 전문성향상을 위한 세미나 개최 63백만원 - 연구회 운영 48백만원 · 통합연구보고서 발간 5백만원 · 자료구입비 등 4백만원 · 전문가참석수당 7백만원 · 법제실무연구회 개최 16백만원 - 법제선진화를 위한 현장방문 16백만원 · 현장방문 3회 x 5.3백만원
'25	'21~'25(요구)	3,380	○ 법제교육 : 3,169백만원 - 법제교육과정 운영 693백만원 · 법제교육 과정 221회 x 3.14백만원 - 법제교육 동영상 제작 2백만원 · 동영상 제작 2회 x 1백만원 - 법제교육 기본교재 고도화 용역 10백만원 · 표준강의안 시각화 개선 용역 2회 x 5백만원 - 법제교육 연구용역비 620백만원 · 수요자 맞춤형 법제교육 교재 개발 용역 4회 x 30백만원 · 장기 적합형 교육 콘텐츠 개발 용역 4회 x 50백만원 · 이러닝 콘텐츠 개발용역 3회 x 50백만원 - 법제업무 담당자 단기 해외연수 46백만원 · 해외연수경비 2회 x 23백만원 - 법제교육 지원 무기계약직 인건비 65백만원 · 무기계약직 급여 및 고용부담금 등 2명 x 12개월 x 2.73백만원 - 법제교육원 운영 1,733백만원 · 교육원 운영 공공요금 등 141백만원 · 교육생 수송 셔틀버스 운영 0.35백만원 x 2대 x 228일 · 법제교육원 물품 및 자산취득비 30백만원 · 법제교육원 시설이용료 23,000명 x 0.06백만원 · 법제교육 운영시스템 유지보수 22백만원 ○ 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 : 100백만원 - 전직원 워크숍 24백만원 - 지식인서재 도서구입 5백만원

			- 민간위탁교육 59백만원 - 처내직원교육 12백만원 ·전문가초청강연회 11회 × 0.5백만원 ·법역량강화과정 12회 × 0.4백만원 ·정부시책교육 5회 × 0.3백만원 ○ 법제실무인력 전문성 향상 : 111백만원 - 법제실무인력 전문성향상을 위한 세미나 개최 63백만원 - 연구회 운영 48백만원 ·통합연구보고서 발간 5백만원 ·자료구입비 등 4백만원 ·전문가참석수당 7백만원 ·법제실무연구회 개최 16백만원 - 법제선진화를 위한 현장방문 16백만원 ·현장방문 3회 × 5.3백만원
--	--	--	--

□ 고려사항

- 최근 3년간('18~'20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단위 : 백만원)

년 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8	1,144	-	-	1,144	1,117	-	27
'19	1,023	-	-	1,023	1,016	-	7
'20	1,310	-	-	1,137	945	-	192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18년도 실시)

- ① (지적사항) 사이버교육 실적 제고를 위하여 신규과목 개발 등 방안을 강구할 필요(예결위·법사위)

→ (조치사항) 교육생 편의를 위해 수강기간을 확대하고(3주→2개월), 법제처 이러닝 홈페이지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였음(주요 웹사이트 바로가기 기능 추가, 집합교육시 연계하여 홍보). 기존 콘텐츠의 개선을 위하여, 향후 교육 과정 재개발 시 반영을 목적으로 내용 감수를 진행 중이며, 수요자 맞춤형 이러닝 과정 개발을 위하여 법제교육 수강자를 대상으로 신규 개발 희망 과목 설문조사 실시

- 2019년 결산 심사('20년도 실시)

- ① (지적사항) 법제업무담당자 단기 해외연수 내실화 필요(예결위·법사위)

→ (조치사항) 단기 해외연수 프로그램 운영 시 방문국 및 참여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수단 규모를 수용할 수 있는 기관을 섭외하도록

노력하고, 준비 단계부터 연수단 전원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인터뷰·면담 역할 분담 등 연수단 개개인의 참여도를 제고하여 프로그램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노력

② (지적사항) 사이버교육 실적개선 및 수요에 따른 예산편성 필요

→ (조치사항) 코로나19 등 예상치 못한 재난 상황에서 집합교육이 불가능할 경우 차질 없이 법제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을 확대 개발·제공 할 필요가 있어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 추진하고, 법제처에서는 주요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 법제처 나라배움터 바로가기 링크를 제공하는 등 홈페이지 접근성을 보완하며 집합교육·순회교육 시 해당 과목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 수료인원을 제고하도록 노력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미국 TheCapitol.Net 법제교육) 미국 연방의회의 교육프로그램으로, 공무원, 군인, 외교요원 등을 대상으로 법제실무 워크숍, 연방 입법·개정안 작성 과정 등 법제교육 과정 운영
- (프랑스 법제교육) 국립행정학교(ENA)의 초급 고위공무원 법제교육 및 공무원재교육(입법학), 국립지방공무원센터(CNFPT)의 현직 공무원 대상 정책결정 및 입법기술 단기 재교육프로그램 운영
- (독일 법제교육) 법형식성 실무안내서 발간·교육, 고급직·상급직 공무원 대상 통합적 법학교육 모델 구축·운영
- (영국 법제교육) 런던대학교 William Dale 경 법제연구센터 법제교육 프로그램 운영(경력직 법제담당 공무원 대상 법제교육)

⑨ 외국법제기관교류(재량지출)

(담당자: 5급 권용준 044-200-6827)

□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국정과제	해당없음
사업내용	- 외국법제기관 교류 · 대한민국의 고도성장을 뒷받침한 법제 발전 경험 및 법제행정 분야의 노하우를 공유하여 수요국의 법제발전을 도모 · 특히 신남방 정책 대상국을 중심으로 법제행정 및 법령정보 시스템 관련 노하우를 전수하여 아시아의 법제 선진화 지원 · 기관장급 및 실무자급 상호 방문 등을 통해 양국 법제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법제 선진화를 위한 발전 전략 논의 함으로써 한국의 법제행정 발전을 도모 -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개최 ·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법제행정 분야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아시아 각국의 법제 선진화 지원
사업기간	'05년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법제처

□ 변동내역 및 변동요인

<외국법제기관교류사업 지출변동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결산 ¹⁾	'21예산	'22	'23	'24	'25	연평균 증가율
'20~'24계획 (증가율)	297	317 (6.7)	333 (5.0)	327 (△1.8)	330 (0.9)		2.7
'21~'25요구 (증가율)	-	317 -	443 (28.4)	480 (13.0)	535 (9.8)	600 (8.9)	14.8

□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년도	금 액		산 출 근 거
'21*	'20~'24(당초)	317	- 외국법제기관교류(125백만원) · 국외출장여비(3회) 50백만원 · 외국법제기관 초청 경비 5백만원 · 통역비, 국외출장 지원경비 등 20백만원 · 아시아 법제 현안 연구용역비 50백만원 -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102백만원) · 회의 개최 경비(1회) 102백만원 - 인도네시아 법제정비 협력사업(90백만원) · 교육프로그램 개발 관련 연구용역비 40백만원 · 법제공무원 교육 관련 경비 40백만원 · 한-인니 국장급 정례협의체 관련 경비 10백만원
	'21~'25(요구)	317	- 외국법제기관교류(125백만원) · 국외출장여비(3회) 50백만원 · 외국법제기관 초청 경비 5백만원 · 통역비, 국외출장 지원경비 등 20백만원 · 아시아 법제 현안 연구용역비 50백만원 -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102백만원) · 회의 개최 경비(1회) 102백만원 - 인도네시아 법제정비 협력사업(90백만원) · 교육프로그램 개발 관련 연구용역비 40백만원 · 법제공무원 교육 관련 경비 40백만원 · 한-인니 국장급 정례협의체 관련 경비 10백만원
'22	'20~'24(당초)	333	- 외국법제기관교류(185백만원) · 국외출장여비(3회) 60백만원 · 외국법제기관 초청 경비 15백만원 · 통역비, 국외출장 지원경비 등 30백만원 · 외국 법제공무원 대상 법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30백만원 · 아시아 법제 현안 연구용역비 50백만원 -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110백만원) · 회의 개최 경비(1회) 110백만원 - 인도네시아 법제정비 협력사업(38백만원) · 법제공무원 교육 관련 경비 28백만원 · 한-인니 국장급 정례협의체 관련 경비 10백만원
	'21~'25(요구)	443	- 외국법제기관교류(205백만원) · 국외출장여비(3회) 60백만원 · 외국법제기관 초청 경비 15백만원 · 통역비, 국외출장 지원경비 등 30백만원 · 외국 법제공무원 대상 법제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 50백만원 · 아시아 법제 현안 연구용역비 50백만원(50백만원*1과제) -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143백만원) · 회의 개최 경비(1회) 143백만원 - 인도네시아 법제정비 협력사업(95백만원) · 법제공무원 교육 관련 경비 80백만원 · 한-인니 국장급 정례협의체 관련 경비 15백만원

'23	'20~'24(당초)	327	- 외국법제기관교류(185백만원) · 국외출장여비(3회) 60백만원 · 외국법제기관 초청 경비 15백만원 · 통역비, 국외출장 지원경비 등 30백만원 · 외국 법제공무원 대상 법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30백만원 · 아시아 법제 현안 연구용역비 50백만원 -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110백만원) · 회의 개최 경비(1회) 110백만원 - 인도네시아 법제정비 협력사업(32백만원) · 법제공무원 교육 관련 경비 22백만원 · 한-인니 국장급 정례협의체 관련 경비 10백만원
	'21~'25(요구)	480	- 외국법제기관교류(225백만원) · 국외출장여비(3회) 60백만원 · 외국법제기관 초청 경비 15백만원 · 통역비, 국외출장 지원경비 등 30백만원 · 외국 법제공무원 대상 법제교육 프로그램 시행 70백만원 · 아시아 법제 현안 연구용역비 50백만원(50백만원*1과제) -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160백만원) · 회의 개최 경비(1회) 160백만원 - 인도네시아 법제정비 협력사업(95백만원) · 법제공무원 교육 관련 경비 80백만원 · 한-인니 국장급 정례협의체 관련 경비 15백만원
'24	'20~'24(당초)	330	- 외국법제기관교류(185백만원) · 국외출장여비(3회) 60백만원 · 외국법제기관 초청 경비 15백만원 · 통역비, 국외출장 지원경비 등 30백만원 · 외국 법제공무원 대상 법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30백만원 · 아시아 법제 현안 연구용역비 50백만원 -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110백만원) · 회의 개최 경비(1회) 110백만원 - 인도네시아 법제정비 협력사업(35백만원) · 법제공무원 교육 관련 경비 25백만원 · 한-인니 국장급 정례협의체 관련 경비 10백만원
	'21~'25(요구)	535	- 외국법제기관교류(275백만원) · 국외출장여비(3회) 60백만원 · 외국법제기관 초청 경비 15백만원 · 통역비, 국외출장 지원경비 등 30백만원 · 외국 법제공무원 대상 법제교육 프로그램 시행 100백만원 · 아시아 법제 현안 연구용역비 70백만원(70백만원*1과제) -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160백만원) · 회의 개최 경비(1회) 160백만원 - 인도네시아 법제정비 협력사업(100백만원) · 법제공무원 교육 관련 경비 80백만원 · 한-인니 국장급 정례협의체 관련 경비 20백만원
'25	'21~'25(요구)	600	- 외국법제기관교류(340백만원) · 국외출장여비(3회) 70백만원

		· 외국법제기관 초청 경비 30백만원 · 통역비, 국외출장 지원경비 등 50백만원 · 외국 법제공무원 대상 법제교육 프로그램 시행 120백만원 · 아시아 법제 현안 연구용역비 70백만원(70백만원*1과제) -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160백만원) · 회의 개최 경비(1회) 160백만원 - 인도네시아 법제정비 협력사업(100백만원) · 법제공무원 교육 관련 경비 80백만원 · 한-인니 국장급 정례협의체 관련 경비 20백만원
--	--	--

□ 고려사항

○ 최근 3년간('18~'20년) 이 · 전용, 이월 · 불용실적

(단위 : 백만원)

년 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 · 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8	140	-	-	140	127	-	13
'19	140	-	-	140	137	-	3
'20	394		△29(추경)	365	297		68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외부기관	지적사항
국회 (‘17년도 예산안 심사)	○ 개도국 법제정비 지원 사업은 다른 부처와 중복 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
국회 (‘18회계연도 결산심사)	○ (지적사항) 당초 동 사업을 통해 ‘중남미 법제기관 교류’, ‘중국 판공실 교류’ 등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인도네시아 법제교류’, ‘일본 내각법제국 방문’을 실시 - 또한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및 외국법제기관 교류’ 명목으로 국외여비가 당초 630만원 편성되었으나, 실제 동 사업에 1,910만원을 집행 ○ (시정요구사항) 당초 계획에 부합하는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사업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

⑩ 행정기본법제 개선 사업(재량지출)

(담당자: 6급 이의량 044-200-6737)

□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국정과제	해당없음
사업내용	· 방대한 행정 법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미래 행정수요, 판례·학설의 동향, 국민의 인식 등을 조사·연구하고 지속적인 행정 법제도 개선 · 행정법제 혁신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행정기본법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나 판례·학설 등의 이견으로 반영되지 못한 의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사업기간	'20년 ~ 계속
총사업비 ¹⁾	해당없음
사업규모 ²⁾	해당없음
지원조건 ³⁾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법제처

□ 변동내역 및 변동요인

<행정기본법제 개선 사업 지출변동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결산 ¹⁾	'21예산	'22	'23	'24	'25	연평균 증가율
'20~'24계획 (증가율)	301	655 (117.6)	688 (5.0)	675 (△1.9)	683 (1.2)		22.7
'21~'25요구 (증가율)		300	320 (6.7)	533 (66.6)	383 (△28.1)	383 (-)	6.3

□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년도	금 액		산 출 근 거
'21	'20~'24(당초)	655	- 행정기본법제 개선 사업 · 전문가 합동 회의 및 세미나 및 권역별 공청회 개최 6.3백만원 x6회+3백만원x2회x12월=109.8백만원 · 행정법령 전문가 자문수당 0.2백만원x105회+0.1백만원x100회=31백만원 · 행정기본법 관련 홍보비 TV광고 61.6백만원+온라인 등 36백만원=97.6백만원 · 백서 및 주석서 발간 0.02백만원x2,800부+0.012백만원x1,500부=74백만원 · 사무용품 구입 경비 1백만원 · 참고문헌 구입 경비 1백만원 · 자료발송비 8.6백만원 · 전문가 합동회의 등 장소 임차료 0.5백만원x20회+1백만원x10회=20백만원 · 학계·출연연·사법부·입법부 등 전문가 합동 회의 및 세미나 개최 참석 등 0.05백만원x40회x4인=8백만원 · 행정기본법 홍보 및 언론간담회 등 사업추진비 4백만원 · 개별 행정 법령 정비 등 연구용역 50백만원x6회=300백만원
	'21~'25(요구)	300	- 행정기본법제 개선 사업 · 전문가 합동 회의 및 세미나, 공청회 개최 12백만원x2회+3백만원x12회=60백만원 · 행정법령 전문가 자문수당 0.2백만원x110회+0.15백만원x60회=31백만원 · 사무용품 및 참고문헌 등 구입 경비 2.4백만원 · 전문가 합동회의 등 장소 임차료 1백만원x12회+1.5백만원x2회=15백만원 · 공청회, 세미나, 전문가 합동회의 참석 등 0.05백만원x38회x4인=7.6백만원 · 행정기본법제 개선 관련 회의 등 운영 사업추진비 0.03백만원x10인x13회=4백만원 · 행정법제 개선 관련 연구용역 45백만원x4회=180백만원
'22	'20~'24(당초)	688	- 행정기본법제 개선 사업 · 전문가 합동 회의 및 세미나 및 권역별 공청회 개최 6.3백만원 x6회+3백만원x2회x12월=109.8백만원 · 행정법령 전문가 자문수당 0.2백만원x105회+0.1백만원x100회=31백만원 · 행정기본법 관련 홍보비 TV광고 81.6백만원+온라인 등 36백만원=117.6백만원 · 백서 및 주석서 발간 0.02백만원x3,000부+0.012백만원x2,000부=84백만원 · 사무용품 구입 경비 1백만원 · 참고문헌 구입 경비 1백만원 · 자료발송비 8.6백만원 · 전문가 합동회의 등 장소 임차료 0.5백만원x20회+1백만원x10회=20백만원 · 학계·출연연·사법부·입법부 등 전문가 합동 회의 및 세미나 개최 참석 등 0.05백만원x40회x4인=8백만원

			· 행정기본법 홍보 및 언론간담회 등 사업추진비 7백만원 · 개별 행정 법령 정비 등 연구용역 50백만원x6회=300백만원
	'21~'25(요구)	320	- 행정기본법제 개선 사업 · 전문가 합동 회의 및 세미나, 공청회 개최 12백만원x1회+4백만원x12회=60백만원 · 행정법령 전문가 자문수당 0.2백만원x110회+0.15백만원x60회=31백만원 · 사무용품 및 참고문헌 등 구입 경비 2.4백만원 · 전문가 합동회의 등 장소 임차료 1백만원x12회+1.5백만원x2회=15백만원 · 공청회, 세미나, 전문가 합동회의 참석 등 0.05백만원x38회x4인=7.6백만원 · 행정기본법제 개선 관련 회의 등 운영 사업추진비 0.03백만원x10인x13회=4백만원 · 행정법제 혁신과제 등 연구용역 50백만원x4회=200백만원
'23	'20~'24(당초)	675	- 행정기본법제 개선 사업 · 전문가 합동 회의 및 세미나 및 권역별 공청회 개최 6.3백만원x6회+3백만원x2회x12월=109.8백만원 · 행정법령 전문가 자문수당 0.2백만원x105회+0.1백만원x100회=31백만원 · 행정기본법 관련 홍보비 TV광고 68.6백만원+온라인 등 36백만원=104.6백만원 · 백서 및 주석서 발간 0.02백만원x3,000부+0.012백만원x2,000부=84백만원 · 사무용품 구입 경비 1백만원 · 참고문헌 구입 경비 1백만원 · 자료발송비 8.6백만원 · 전문가 합동회의 등 장소 임차료 0.5백만원x20회+1백만원x10회=20백만원 · 학계·출연연·사법부·입법부 등 전문가 합동 회의 및 세미나 개최 참석 등 0.05백만원x40회x4인=8백만원 · 행정기본법 홍보 및 언론간담회 등 사업추진비 7백만원 · 개별 행정 법령 정비 등 연구용역 50백만원x6회=300백만원
	'21~'25(요구)	533	- 행정기본법제 개선 사업 · 전문가 합동 회의 및 세미나, 공청회 개최 12백만원x1회+4백만원x12회=60백만원 · 행정법령 전문가 자문수당 0.2백만원x110회+0.15백만원x60회=31백만원 · 행정기본법 온·오프라인 홍보 추진(TV, 라디오 캠페인 제작·송출비 120백만원)+(온라인 뉴미디어 홍보·광고비 30백만원)=150백만원 · 행정기본법 해설서(실무편람) 제작·인쇄비 60백만원 · 자료발송비 3백만원 · 사무용품 및 참고문헌 등 구입 경비 2.4백만원 · 전문가 합동회의 등 장소 임차료 1백만원x12회+1.5백만원x2회=15백만원 · 공청회, 세미나, 전문가 합동회의 참석 등 0.05백만원x38회x4인=7.6백만원 · 행정기본법제 개선 관련 회의 등 운영 사업추진비 0.03백만원x10인x13회=4백만원 · 행정법제 후속과제 관련 연구용역 50백만원x4회=200백만원
'24	'20~'24(당초)	683	- 행정기본법제 개선 사업 · 전문가 합동 회의 및 세미나 및 권역별 공청회 개최 6.3백만원

			- x6회+3백만원x2회x12월=109.8백만원 · 행정법령 전문가 자문수당 0.2백만원x105회+0.1백만원x100회=31백만원 · 행정기본법 관련 홍보비 TV광고 76.6백만원+온라인 등 36백만원=112.6백만원 · 백서 및 주석서 발간 0.02백만원x3,000부+0.012백만원x2,000부=84백만원 · 사무용품 구입 경비 1백만원 · 참고문헌 구입 경비 1백만원 · 자료발송비 8.6백만원 · 전문가 합동회의 등 장소 임차료 0.5백만원x20회+1백만원x10회=20백만원 · 학계·출연연·사법부·입법부 등 전문가 합동 회의 및 세미나 개최 참석 등 0.05백만원x40회x4인=8백만원 · 행정기본법 홍보 및 언론간담회 등 사업추진비 7백만원 · 개별 행정 법령 정비 등 연구용역 50백만원x6회=300백만원
	'21~'25(요구)	383	- 행정기본법제 개선 사업 · 전문가 합동 회의 및 세미나, 공청회 개최 12백만원x1회+4백만원x12회=60백만원 · 행정법령 전문가 자문수당 0.2백만원x110회+0.15백만원x60회=31백만원 · 행정기본법 해설서(실무편람) 제작·인쇄비 60백만원 · 자료발송비 3백만원 · 사무용품 및 참고문헌 등 구입 경비 2.4백만원 · 전문가 합동회의 등 장소 임차료 1백만원x12회+1.5백만원x2회=15백만원 · 공청회, 세미나, 전문가 합동회의 참석 등 0.05백만원x38회x4인=7.6백만원 · 행정기본법제 개선 관련 회의 등 운영 사업추진비 0.03백만원x10인x13회=4백만원 · 행정법제 후속과제 관련 연구용역 50백만원x4회=200백만원
'25	'21~'25(요구)	383	- 행정기본법제 개선 사업 · 전문가 합동 회의 및 세미나, 공청회 개최 12백만원x1회+4백만원x12회=60백만원 · 행정법령 전문가 자문수당 0.2백만원x110회+0.15백만원x60회=31백만원 · 행정기본법 해설서(실무편람) 제작·인쇄비 60백만원 · 자료발송비 3백만원 · 사무용품 및 참고문헌 등 구입 경비 2.4백만원 · 전문가 합동회의 등 장소 임차료 1백만원x12회+1.5백만원x2회=15백만원 · 공청회, 세미나, 전문가 합동회의 참석 등 0.05백만원x38회x4인=7.6백만원 · 행정기본법제 개선 관련 회의 등 운영 사업추진비 0.03백만원x10인x13회=4백만원 · 행정법제 후속과제 관련 연구용역 50백만원x4회=200백만원

□ 고려사항

- 최근 3년간('18~'20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단위 : 백만원)

년 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8	-	-	-	-	-	-	-
'19	-	-	-	-	-	-	-
'20	313	-	-	313	301	-	12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19년도 국정감사 (국회 법사위)	○ (지적) 법제처에서 추진 중인 '행정기본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행정의 전 영역에 적용되는 행정기본법의 파급력 등을 감안하여 공론화 과정을 충분하게 거치는 등 법률적인 완결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추진 필요 ○ (조치)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회의(분과회의 포함)를 총 38회 개최하였고, 공청회를 권역별로 개최하여 자문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은 각 지역 학계·법조계·시민단체 인사를 토론자로 참여시키는 등 행정기본법 공론화 적극 추진
---	--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⑪ 법제정책연구개발(R&D) 사업(재량지출)

(담당자: 7급 전준수, 044-200-6548)

□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국정과제	해당없음
사업내용	법령심사·법령해석 및 법제지원업무 등 처 내 정책현안에 대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용역을 수행
사업기간	'99년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법제처

□ 변동내역 및 변동요인

<법제정책연구개발(R&D) 사업 지출변동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결산	'21예산	'22	'23	'24	'25	연평균 증가율
'20~'24계획 (증가율)	66 -	70 (6.1)	70 -	70 -	70 -	- -	- 1.5
'21~'25요구 (증가율)	- -	70 -	105 (50.0)	105 (-)	105 (-)	105 (-)	- 10.7

○ 세부 변동내역 및 변동요인

-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내부·외부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수행과제 수를 종전 2개에서 3개로 1개를 추가하여 반영함

□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년도	금 액		산 출 근 거
'21	'20~'24(당초)	70	○ 정책연구용역 2개 과제 수행(평균 단가 : 35백만원) - 연구용역 과제 2개 * 35백만원 = 70백만원
	'21~'25(요구)	70	○ 정책연구용역 2개 과제 수행(평균 단가 : 35백만원) - 연구용역 과제 2개 * 35백만원 = 70백만원
'22	'20~'24(당초)	70	○ 정책연구용역 2개 과제 수행(평균 단가 : 35백만원) - 연구용역 과제 2개 * 35백만원 = 70백만원
	'21~'25(요구)	105	○ 정책연구용역 3개 과제 수행(평균 단가 : 35백만원) - 연구용역 과제 3개 * 35백만원 = 105백만원
'23	'20~'24(당초)	70	○ 정책연구용역 2개 과제 수행(평균 단가 : 35백만원) - 연구용역 과제 2개 * 35백만원 = 70백만원
	'21~'25(요구)	105	○ 정책연구용역 3개 과제 수행(평균 단가 : 35백만원) - 연구용역 과제 3개 * 35백만원 = 105백만원
'24	'20~'24(당초)	70	○ 정책연구용역 2개 과제 수행(평균 단가 : 35백만원) - 연구용역 과제 2개 * 35백만원 = 70백만원
	'21~'25(요구)	105	○ 정책연구용역 3개 과제 수행(평균 단가 : 35백만원) - 연구용역 과제 3개 * 35백만원 = 105백만원
'25	'21~'25(요구)	105	○ 정책연구용역 3개 과제 수행(평균 단가 : 35백만원) - 연구용역 과제 3개 * 35백만원 = 105백만원

□ 고려사항

- 최근 3년간('18~'20년) 이 · 전용, 이월 · 불용실적

(단위 : 백만원)

년 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 · 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8	65	-	-	65	59	-	6
'19	67	-	-	67	61	-	6
'20	67	-		67	66	-	1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